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New Waves in Asia"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2013 결과자료집]

제주평화연구원 편

"New Waves in Asia"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발간사

2013년 5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대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교체되고,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및 역내 영토 분쟁 등으로 중요한 시기에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인 탁월한 정치 지도자와 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제주포럼을 더욱더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1년 한국과 구 소련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1996년 한 · 미, 한 · 일 정상회담, 1995년과 1998년 연이은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문, 2009년 한 · 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한 · 중 · 일 정상회의 등 제주는 동북아 평화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제주포럼은 이러한 정상회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포럼으로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포럼에는 49개국 3,672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종합포럼으로 위상을 과시했으며,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역사, 영토 문제 등 역내갈등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 평화적,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문화, 여성, 에너지, 기후변화 등 분야별로 뉴 패러다임에 맞는 글로벌 협력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동반성장, 위기와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제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도 아시아가 당면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의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8회 제주포럼 결과자료집 발간을 통하여 포럼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해주신 후원기관 관계자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내년 제9회 제주포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 8월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장 문태영

차례 Contents

발간사

제1장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개회사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14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16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17

축사 **정홍원** 대한민국 국무총리 19

기조연설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21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소장 24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28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32

세계 지도자 세션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36

제2장 협력적 리더십의 모색

안보위기 관리: 전략과 사례 42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아시아 싱크탱크의 과제와 발전방안 48
한 · 중 도시외교의 새로운 시스템 51
북핵 난국 대처하기: 어떤 선택방안이 있는가? 56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개발과제와 ODA 지원 방안 61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 66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른 한반도 정세 69
역사화해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미래 76
해외 언론이 보는 박근혜 정부의 과제 79
동북아와 헬싱키 프로세스: 모사될 수 있는가? 83
[외교관라운드테이블] 새로운 물결과 동아시아의 미래 88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93
박근혜 정부,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평화 98
G2의 시대와 동아시아 군비경쟁 103
동아시아 근대와 지역 그리고 새로운 리더 107
동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 비전 110
동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의 과제와 쟁점 115
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의 협력분야 및 모델 118

제3장 위기를 지나 공동번영으로

[특별세션 I] 전설의 투자가 짐 로저스와의 만남: 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성공투자법 124
한 · 중 교역 활성화 방안: 중국 도시화에 따른 내수 진출 전략 128
아시아 경제 부흥: 경제 민족주의에의 대처 132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해부한다: 무역, 금융,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및 분쟁 패턴 137
새로운 한 · 중 경제협력 20년을 위하여 143
아시아 브랜드의 유럽 시장 진출과 세계화 전략 148
기업과 사회의 장기 공존 150
세계경제 속의 CSR, 기업의 표준을 바꾸다 156
비즈니스 넥스트 패러다임과 아시아의 미래 161
증권업 환경의 변화와 리서치센터의 역할 164
아시아의 연대협력과 신사업 신기술이 세계를 구한다 169
글로벌 애널리스트 평가의 현황과 한국적 발전 방향 174

제4장 자연환경과 인류복지

개발도상국가의 친환경적 개발의 방향과 이슈 178
동아시아 기후변화와 수산 181
기상-관광 융 · 복합 모델을 통한 기상산업 성장 185
기후변화 대응: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원의 효율적 구성 188
기후변화와 섬 지역의 물 관리 전략 192
섬 지역 물 공급 시스템 혁신 방안 195
물의 보전과 전략적 활용 198

제5장 문화교류와 글로벌 협력

대학포럼을 통한 동아시아 대학 간 교류협력 204
동아시아의 평화와 대학 교육 206
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212

제6장 국제협력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특별세션 II] 21세기: '아시아 & 여성의 시대': 양성평등을 통한 경제적 잠재력 달성하기 218
여성의 리더십: 경쟁력과 미래 221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여성의 비전 227
21세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량강화 233

제7장 제주의 미래비전

국가 미래전략과 제주의 역할 240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미래비전 244
21세기 박물관의 비제도권 및 학제적 교육의 중요성 248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 253
제주헬스케어타운 운영전략과 의료산업의 미래 258
아시아 교육의 국제화: 새로운 물결과 제주에 대한 시사점 265

KEYNOTE SPEECH I
H.E. TUN Dr. Mahathir MOHAMAD
Former Prime Minister, Malaysia
JEJU FORUM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제 1 장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개회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2013년은 변화의 해로 규정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각국의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물결이 도래하고 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변화된 역할과 지역 협력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았다.

개회사	**우근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축사	**정홍원** 대한민국 국무총리
기조연설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소장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개회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화를 사랑하는 국내외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에 오신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빛내주시는 정홍원 국무총리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내외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내외분, 그리고 세계기구와 세계 40여 개 정부, 기관, 기업, NGO 등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포럼은 이제 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세계 정 · 재계 지도자와 석학들의 주도적 참여 속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포럼은 정부의 공식 후원 아래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포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환경의 보물섬입니다. 전 세계인의 투표로 진행된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며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제주의 매력들 이면에는 불행한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65년 전 냉전과 분단의 현실 속에서 수만명이 희생당한 4.3이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화해와 상생의 숭고한 정신과 세계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에 힘입어 그간의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해자,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지속되어 왔던 반목과 갈등이 새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짧은 시간에도 이제 용서, 상생,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주는 1990년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다양한 정상회의의 산실이었습니다. 한반도 냉전구도를 바꿔 놓았던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 · 소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96년 한 · 미, 한 · 일 정상회담과 1995년 장쩌민 주석, 1998년 후진타오 부주석님 등 중국 지도자들의 방문, 2009년 한 · 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한 · 중 · 일 정상회의 개최 등 제주는 동북아 평화논의의 장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냉전이라는 불행했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 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제주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01년, 2003년, 2005년에는 우리정부의 현직 대통령님들이 직접 제주포럼에 참석하셔서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극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셨고, 세계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공조에도 커다란 이정표를 세워주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포럼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정치, 기업, 문화, 학계 리더들의 토론 프로세스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제6회 제주포럼부터는 평화와 안보 중심에서 경제, 환경, 문화, 여성, 식량, 에너지, IT, 관광 등으로 주제를 확장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국제협력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을 비롯하여 그동안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세기가 대서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칫 세계경제의 공멸을 자초할 수도 있었지만 아시아인들의 상호 연대와 협력 속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후 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전면에 나서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작금의 아시아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자국 중심적 역사관과 해양영토분쟁,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남아 쓰나미 참사, 동일본 대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역사 회귀적 아시아'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 아시아'로, '배타적 국익'이 아니라 '상생적 번영'을 '호전적 공멸의 길'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안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이와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대주제로 아시아 지역의 협력증진과 공동체 건설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세션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이신 짐 로저스 회장님은 세계경제 위기 국면에서 중국 자본을 활용한 제주의 동반성장 효과에 대해, 그리고 전문직여성세계연맹의 프레다 미리클리스 회장님은 제주 여성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는 뜻 깊은 기회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주포럼을 통해 저명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포럼을 통해 공존공영에 기초한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우리 노력이 미래에 큰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환영사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제주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의 하나인 동아시아재단을 대표하여 이번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모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정홍원 국무총리님, 한승수 전 국무총리님,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님 그리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동아시아재단은, '인간과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평화번영과 신뢰구축' 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그러한 설립취지에 따라 저희 재단은 제3회 제주평화포럼부터 참여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단은 아시아 지역의 공통되는 이슈를 다루는 국제관계 평론지 『글로벌아시아(Global Asia)』를 연 4회에 걸쳐 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 해입니다. 오늘날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한편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영토분쟁, 국제 금융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경제적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입니다.

작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아시아가 경제규모, 인구, 군비지출, 기술투자 등 주요 지표 모두에서 북미와 유럽을 합친 것보다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국경이라는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 자본, 문화의 교류가 증가할 것이 기대되는 만큼 아시아 지역 공동체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제주포럼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포럼으로서, 아시아 사람들이 추구할 공동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며 우의를 돈독히 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포럼을 빛내 주실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성인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참가자들, 특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주최, 주관 및 후원 기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영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

정홍원 총리님, 하토야마 前 총리님,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前 총리님,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희 중앙일보는 지난해부터 이 뜻깊은 제주포럼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그리고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하게 돼 무척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12년 전 시작된 제주포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존 하워드 호주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등 세계의 지도자와 석학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혜와 혜안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성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치밀한 준비 등이 이뤄낸 성과가 분명합니다.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는 '아시아의 새 물결'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를 감안하면 시기적절한 주제라 하겠습니다. 근대 서구에서 꽃피웠던 세계 문명의 축이 동쪽으로 이동해 이제 바야흐로 '아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일찍이 『서구의 몰락』을 쓴 역사학자 슈펭글러의 예언대로 근대 문명의 요람이었던 유럽은 현재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활력 넘치는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 'Pivot to Asia'를 천명하고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 중심의 세계 체제를 지향하는 중화주의 회복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 전략은 두 슈퍼파워 간 헤게모니 다툼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파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도 지도자가 교체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 3월에는 3차 핵실험까지 단행해 북한은 이제 핵 보유 일보 직전에 이르러 불안한 이 지역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도전 속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역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블록화 움직임도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 중국 · 일본을 자유무역지대로 묶겠다는 야심 찬 한 · 중 · 일 FTA 협상은 지난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 TPP로 불리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이루려는 움직임도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 ·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미 · 중 간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건설적인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결정된 '아시아의 새 물결'이란 주제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포럼 참석자 여러분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통찰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정홍원 대한민국 국무총리

존경하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대표적 국제포럼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도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유용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아시아가 2030년쯤 북미와 유럽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감대도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각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 시대를 실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바탕 위에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여러분은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보협력과 경제개발, 에너지 문제와 양성평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비전까지 모든 의제들이 아시아인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저는 아시아의 장래를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등 연성 이슈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간의 믿음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점차 다른 분야까지 대화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내 국가들 사이의 발전 격차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공적원조(ODA)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우리의 개발경험도 여러 나라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아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서로의 문화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활발한 문화 교류는 인종, 언어,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문화교류를 포함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I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우선, 제주포럼의 주최 측과 공동주최 측 여러분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세션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시아의 역할,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 논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겠지만 저는 그중 단 한 분야, 전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아시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일부 지역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부 자그마한 땅덩어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반대주장 때문입니다. 대립의 가능성, 나아가 전쟁의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자국 영토를 손톱만큼이라도 점유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원시인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쟁의 범죄화를 위한 범세계적인 캠페인을 출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태곳적부터 우리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범죄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영토를 둘러싼 전쟁과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간에도 전쟁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활과 화살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보통은 상대방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나라 전체가 말려듭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임 당합니다. 비전투원이 죽임 당합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병자, 빈자, 장애인 등 모두가 부수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모두 죽임 당합니다.

우리는 살상무기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무인항공기를 조종하여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3만 기 이상의 핵탄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3만 기의 핵탄두가 발사된다면, 전 인류가 말살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의 숭례문을 불태운 광인이 있었듯이, 만약 어느 광인이 버튼을 눌러 핵전쟁을 시작하고, 공격당한 국가들이 그대로 되갚는다면, 우리는 핵전쟁을 맞게 되고 전 인류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은 아주 원시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수단에 기대야 합니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웃한 모든 나라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외 여러 나라와 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 협상을 통해 영유권 주장이 엇갈리던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던 바다와 그 바다의 자원 개발권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간의 대결 양상을 종식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아름다운 두 섬, 리기탄(Ligitan) 섬과 시파단(Sipadan) 섬을 놓고 영유권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협상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결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섬이 말레이시아의 영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썩 유쾌한 판결은 아니었겠지만, 법정에서는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것입니다.

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바다에는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등대가 서 있는 작은 바위일 뿐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각기 이 바위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협상하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국제사법재판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물론 부당하지만, 이 바위가 싱가포르 영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의 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어딘가에 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나라가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쟁준비, 방어준비, 공격준비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조 달러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고조됩니다.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고조된 긴장과 전쟁준비로 이미 각 국가들에서 우려할 만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의 안녕에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차라리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건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써야 합니다. 이것이 돈을 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며, 이미 발명된 온갖 대량살상무기를 개량하느라 수조 달러를 쓰는 것은 그저 낭비일 뿐입니다. 인간 자원의 낭비입니다. 21세기, 그리고 이 2013년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협상이나 중재, 재판을 통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싶다면 전쟁을 범죄, 곧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다른 나라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간주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그런 나라들에 등을 돌리고, 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워 다른 범죄자들이 재판받는 방식과 같게 재판받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노예제도를 수용했던 때를 떠올려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노예가 있었고,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도 노예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노예 소유는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노예가 금지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무역 근절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노예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주포럼에서 전쟁의 범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언젠가 모든 분쟁을 협상과 중재와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전쟁의 범죄화에 관해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아주 부유해질 것입니다. 무기에 쓰이는 돈이 인류의 복지에 쓰이게 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기조연설 II

신선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동아시아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소장

지난해 저는 26년간의 정치인생을 뒤로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생활을 하던 중 올해 3월,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EACI, East Asia Community Institute) 설립의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 결성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소의 설립은 제가 주창했지만 총리 재임 중에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이며, 이런 공동체를 통해 우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평화 확립에 공헌하려 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에 반대하는 보수 인사들은 아시아가 유럽에 비해 종교, 문화, 언어가 다양하다는 점, 각 나라마다 민주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경제 구조와 경제 발전 단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성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각국과 영역들이 바다로 나뉘어 있는 탓에 문화적 교류가 어려우며,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 내의 협력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가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일본 정부가 미국이 표한 우려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언급을 일체 그만두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동아시아공동체의 결성이 어려운 이유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저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전통적 사고방식을 탈피할 필요성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장애물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우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배우는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다양성은 실제로 활력과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모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순을 즉각적으로 '적대적 모순'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故 마오쩌둥의 말처럼, 기본적으로 동맹인 세력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모순'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처럼 모순은 활발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형태가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미얀마에게 동아시아에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경로와 풍요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지역 다양성의 일부이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각 나라와 영역들이 지닌 독특한 특성이나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최근 수년간 일본의 제조산업은 첨단 고정밀 제품, 첨단 산업용 로봇 및 기계와 더불어 탄소섬유와 같은 하이테크 산업용 소재 등의 장비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 경제는 고부가가치 자본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의 7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한국과 특정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일본의 수출품을 이용하여 첨단 중간부품 등의 상품을 제조하며, 이런 부품의 조립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 특히 중국은 낮은 노동 비용을 이용하여 소비재를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급사슬구조는 '유기적'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동아시아 산업공동체'는 이미 현실이며, 이는 아시아 각국이 저마다의 장점을 지렛대로 삼아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셋째, 육지에서 눈을 돌려 바깥을 보면, 바다는 장벽이자 분쟁의 씨앗이며 고립의 상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문명의 오랜 역사는 수천 년간 이 규칙에 예외였습니다. 지역해는 문화교류와 교역의 매개체 역할을 했으며, 이웃 나라와 섬들에서 온 어민들은 수많은 풍요로운 어장에서 함께 살고 함께 일했습니다. 근대국민국가의 시대에 접어든 후에야 서양에서 발생한 영토,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관념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이기주의'의 결과로서 해양 자원을 둘러싼 대립을 야기했습니다.

2012년 8월,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대만, 중국, 일본이 영토 분쟁은 잠시 제쳐놓고, 수산물 및 광물 자원 관리, 환경의 공동 보호, 해양 연구 수행, 해적행위 대응과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중국해평화안(East China Sea Peace Initiative)〉을 내놓고, 이를 통한 센카쿠 열도 문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유럽연합의 탄생에 초석을 놓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얼마 전부터 동중국해 평화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해양자원의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마잉주 전 총통의 제안을 센카쿠 열도 문제 해결뿐 아니라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모든 영토 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 중국, 대만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 중이며, 일본은 또한 북방영토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오랜 세월에 걸쳐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분쟁의 존재 자체가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해 평화적, 건설적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힘을 합쳐 유럽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얻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도 합력하여 동중국해의 가스전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해 필요한 동력을 단시간에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영토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영토분쟁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당사자를 도발하는 행위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행동은 대화를 향한 길 위에 장애물을 놓을 뿐입니다.

넷째, 동아시아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려를 곧 이런 공동체의 실효성을 드러내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미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국가안보와 같은 현안을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유연해져야 합니다. 동아시아 내의 분쟁을 방지하는 일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할 때 한 · 중 · 일이라는 동북아 3국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전에 동아시아 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제 동반자 협정과 국가안보에 관한 대화는 대부분의 경우 아세안이 주도한 강력한 전략 구상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 기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 중 · 일 3국이 우선적으로 함께 해야 하며, 이는 근년간 동아시아 지역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나 점차 지역적 영향력을 늘리고 있는 대만의 참여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국 간 협력의 목표는 동해와 동중국해 주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와 영역들 간의 동맹 수립이며, 이것은 곧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라는 2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질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의 전제조건입니다.

한 · 일 그리고 중 · 일 간 긴장관계 뒤에 놓인 이유 중 하나는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정부의 등장 이래, 일본 연립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행위를 다룬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 문제를 다룬 고노 담화를 개정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이웃 국가들을 도발할 뿐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단결은 더욱 요원해질 뿐입니다. 미국조차도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며 일본이 아시아를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최근 난징을 방문한 바 있으며, 정치인들이 절대 역사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통 교과서 제작을 위한 한국, 중국, 일본 간 정부 · 민간 합작 프로젝트는 아직 충분한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허심탄회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제가 제안한 아시아 각국의 대학들이 타 학교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가 이미 한 · 중 · 일에서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젊은 학생들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쁩니다. 저는 남은 세기에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 다음 세대가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역사인식의 차이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또 다른 더욱 중요한 문제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이용을 둘러싸고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을 긴밀하게 엮는 프로젝트를 창안하는 일입니다. 가령, 몽골의 고비 사막은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의 원천으로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아시아의 에너지 문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천연에너지원 개발과 동아시아 전역에 공급이 가능한 전력 수송망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북한에도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개발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의 에너지원에 의존함으로써 함께 연계하게 된다면 지역 분쟁이 확대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일본이 국내에 발전소를 신설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진 원자력 기술을 지키는 한편 이 지역의 원자력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도 참여하여 아시아 원자력 관리를 맡을 공동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새 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개발 및 테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일촉즉발의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수단으로 오직 군사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지만, 군사력은 정치와 외교의 연장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우리는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1차적인 우선순위로 두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대만이 상호불신에 빠져 분쟁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북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간의 냉랭한 관계는 사실상 북한이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되짚어보고, 지체 없이 동북아시아의 공조를 이루어야만 주변의 모든 나라와 영역들이 힘을 합쳐 북한에 고삐를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류문명 발전의 열쇠말은 분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전 총리로서 저는 현 일본 정부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충실히 배웠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적절한 외교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웅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그리고 중국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에 근거한 우애의 새로운 형태가 분명히 성립되리라 믿으며 이 목표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만찬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前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님, 한승수 前 총리님, 공로명 장관님, 홍석현 회장님, 문태영 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에 대해 제주평화연구소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뜻 깊은 행사 전야에 여러분들과 만찬을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제주포럼은 역내다자안보협력,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경제통합 증진을 위한 식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주요 포럼으로 등장했습니다. 금번 포럼의 주제인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은 최근 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발전추이를 잘 반영하는 매우 적실성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럼 기간 중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는 아시아 전역에서 민주화와 리더십 변화의 물결(waves of change)이 일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선거를 통한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으며, 미얀마에서는 오랜 염원이었던 "미얀마의 봄"을 통해 6천만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역내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푸틴 대통령의 '아태 중시'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동북아, 궁극적으로 전 지구촌 행복을 추구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는 역사, 해상 및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불신이 증대하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경우는 물리적 충돌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치 · 안보 협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한 역사학자는 나라가 몸이라면 역사는 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격언과 같이, 역사문제는 민족의 영혼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인식은 실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양의 한 학자는 최근 20세기 유럽의 분쟁이 육상경계(landscape)를 놓고 일어난 데 반해 21세기 아시아의 분쟁은 해상경계(seascape)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찰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정착하는 시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옛 물결(old waves)이 협력의 새로운 물결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전과 정책들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긴요합니다.

아시아 지역 전체에는 아 · 태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등 다자협력을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만 놓고 볼 경우, 동북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공동의 과제들을 다루고 역내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다자 메커니즘이 부재한 지역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많은 이니셔티브와 구상들이 제시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실로 동북아는 다자주의 정신이 결핍된 지역입니다.

아마도 근래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도는 한 · 중 · 일 3국 간 대화일 것입니다. 3국 정상들은 1999년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갖기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3국 정상들이 매년 ASEAN과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에 3국 협력을 위한 상설 사무국을 설립하여 3국 협력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한 · 중 · 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한 · 중 · 일 FTA 협상도 개시하였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 합동연설에서 설명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그물망 같이 중층적으로 엮어진 상호의존 속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강하고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 재난구호, 원자력안전, 테러리즘 대처 등 연성(soft)의 협력안보 이슈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협력을 축적하여 협력의 습관을 형성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의 습관을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롭고 협력적이며 책임 있는 동북아 시대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에서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제안국으로서 한국은 역내 이해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아, 공동의 노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거 유사한 시도들의 실패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참여국들이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 · 중 · 일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국들에 대해 참여가 개방된다는 원칙이 견지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적절한 협의체에서 최우선적인 정책 사안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으로 말미암아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줄어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전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나, 그와 같은 변화의 바람에 순응하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변화의 대세를 거부하고 있으며, 핵무기 · 미사일 개발을 통한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물론 이러한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측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약속과 합의된 원칙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약속의 파기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는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한미 연합 억지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방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익을 향유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북한의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을 평가합니다. 둘째,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되며, 북한은 행동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북아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는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북아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 · 서독 간의 문제는 유럽 전체의 평화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가 중동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각지에서는 자유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 발전의 필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진정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변화의 물결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통찰력 있는 비전들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찬사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존경하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총리님, 하토야마 유키오 前 총리님, 제주포럼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제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정부가 구상, 추진하는 통일 · 외교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변방에서 중심으로

세계질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아시아의 역할과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때에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 제3의 경제대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글로벌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접한 아세안(ASEAN) 국가들도 번영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신질서 확립과정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장된 위치에 상응하는 기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아시아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지역이 당면한 세 가지 안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문제이며,둘째, 역내 국가 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일부 영토 문제로 인한 긴장 악화이고, 셋째,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조화입니다.

이러한 안보적 과제를 잘 조율하고 서로의 힘을 모을 때,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 정치 · 경제의 신질서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물결을 가르며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현재 이 지역에서 북한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57일째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끝내 지난 10년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핵 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 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 역시 북한이 주목해야 할 사례입니다. 앞서 제시한 국가들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익한 도발을 중단하며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현안에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가동하며, 의연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남북관계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타협과 보상을 해주던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신뢰와 원칙의 '새 틀'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창'은 열어놓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작은 협력들을 꾸준히 증대시켜 더 큰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Process)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한 간 일시적 상황전개에 흔들리지 않고 현 정부 5년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남과 북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통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동북아 평화 · 협력구상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은 동북아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뒷받침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역사인식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 · 안보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는 양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역내 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 예를 들어 핵 안전이나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질병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보협력까지 점차 확대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핵 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만 23개의 원전이 있으며, 일본에는 50여 개 중국에는 앞으로 60여 개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역내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핵사고의 위험에 대해 역내 대응 체제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평화 달성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추진, 녹색성장, 녹색개발, 후진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연성 및 경성안보 현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의 메커니즘이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고, 또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이름 짓고, 추진 중이십니다. '서울 프로세스'는 우선적으로 동북아 국가들, 즉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와 남 · 북한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발전되고 있는 한 · 중 · 일 정상차원의 삼각협력 체제와도 병행 추진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협력체제는 기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연계되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 · 협력구상'의 실현과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조화로운 균형이 절실합니다.

미 · 중의 대외정책(아시아 재균형과 신형대국관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뢰를 기초로 협력해 나갈 때, '아시아의 새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사회대통합을 먼저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외교를 추진해, 동북아와 세계의 건강한 평화와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기여하겠습니다.

맺음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신 것처럼, 오는 6월 말 예정된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 · 중 간 협력의지를 확고히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물론,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주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주요 인사들께서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적극적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의가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이 끝까지 잘 치러져 큰 성과를 이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 귀중한 발표의 기회를 주신 관계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제주평화연구원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세계 지도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세션에는 국내외 전직 총리들이 참가하여 아시아 · 태평양 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았다.

사회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대표,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토론

한승수 전 대한민국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 소장

질문 1)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유럽은 상호전쟁보다는 하나의 연합을 구축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파트너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은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다. 민주화수단을 위한 전쟁도 안 된다.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 유럽은 적국들이 연합을 이루었다. 아시아도 상호이해와 호혜적인 관계로 변모할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한다면 평화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 소장: 전쟁의 원인으로는 1) 최근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국내분쟁이 장기화되어 해외 군대가 개입, 2) 영토 분쟁을 둘러싼 분쟁, 3) 미국 중심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전쟁 발발하는 경우가 있다.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제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경험을 통해 적대국이었던 국가들이 협력과 공동목표를 향해 협조해야 한다.

한승수 전 대한민국 총리: 유럽 통합의 단계는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회원국들 간의 전쟁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재발방지를 위해 ECC를 협약하였다. 2단계는 평화를 유럽공동체로 이룩하기 위해, 로마협약으로 체결되었다. 이상적인 이념들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를 통해 발전 가능하다. 동북아정상회의를 발전시키고, 한 · 중 · 일 FTA협상을 촉진시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구축을 위해서는 한 · 중 · 일 FTA 협상이 필요

질문 2) 동아시아 FTA(아세안국가+한 · 중 · 일+인도,호주,뉴질랜드 16개국)의 협력과 범태평양적인 조직체(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일부국)가 이미 공존하고 있는데, 두 개의 거대한 FTA는 상호경쟁관계인지 상호보안관계인지?

한승수 전 대한민국 총리: TPP나 ACEP 연합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다자 간 형태가 되기 위해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 중심적인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 소장: 참여국을 고정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럴 경우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입국과 가입하지 않은 국가 간의 마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국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본 아베내각은 현재 TPP 가입을 결정하였는데, 나중에 참가 의사표명을 한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세안+3,+6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경제연계가 중시되지만 결국에는 안전보장의 틀로 발전되어야 한다. 최대한 많은 나라가 협력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자유는 동등할 때에만 가능하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는 격차가 존재하고,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상호경쟁적인 동등성도 고려해야 한다. TPP의 경우, 개도국의 취약점과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유무역 이전에,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수준을 적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한승수 전 대한민국 총리: TPP 협상과정을 보면, 각국마다 입장이 다르고 보호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완전한 공정성, 평등성은 없다. 강대국의 경우, 국제법과 무역법에 능통한 전문가를 동원해 협상을 진행한다. 약소국 보호를 위한 체제를 마련한다고 해도 우리가 유럽 같은 국가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킬 수 없는 제한들을 적용하기도 한다.

질문 3) 사실상 G2 체제에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어떻게 판단하며, 이에 대해 중국은 국익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지역의 공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많은 국가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나, 중국을 제외한 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 소장: 중국 또는 미국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고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정 운영 시 대규모 군사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진핑 주석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리라고 판단한다. 현재 중국의 국방비가 매년 2자리 이상 증가하여 국제 관계 긴장을 높이고 있으나, GDP에 대비할 때 결코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중국 국방비의 투명성이 낮아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공개하여 전 세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전쟁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경제 공동체 구상 시, 각국의 입장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도국의 입장 역시 반영해야함

한승수 전 대한민국 총리: 냉전시대로의 회귀는 더 이상 불가능하며, 중국 역시 국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마바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캘리포니아로 초청했고, 이는 비형식적인 회의로 매우 이례적으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중미 관계의 개선 여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구 문명의 쇠퇴와 아시아의 부흥은 장기적으로 중미 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질문 4)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며, 박근혜 대통령께 하고 싶은 조언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동아시아공동체 연구소 소장: 전 세계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있고, 한반도에는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은 중국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하여,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발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6자 회담 재개와 같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주변국들이 협력할 수 있음을 이해시켜야 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북한이 편입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할 때, 어조와 논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정치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은 공동평화 추구를 방해한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중국이 북한에 적절한 영향력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한승수 전 대한민국 총리: '신뢰 구축프로세스'는 북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대북 문제 해결에 신뢰구축은 매우 중요하기에 아시아지역포럼과 같이 공동체 신뢰구축 체제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헬싱키 프로세스 탄생으로 국가 간 갈등이 크게 사라졌다. 우리는 이를 능가할 수 있는 공동체 신뢰 구축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위험을 감소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을 동북아공동체의 일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체제 형성이 필요함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동아시아 다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 대두
- 대북정책 실행 시, 중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함
- 각국의 상황에 맞춰 좀 더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구축이 필요함

정리
김민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Garetn EVANS
Interpretation: KOREAN/ENGLISH
10:40-12:00

제2장

협력적 리더십의 모색

안보위기 관리: 전략과 사례

제주평화연구원

북한의 핵능력과 사이버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핵공격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국제협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과 동맹국의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핵공격에 대비한 국가전략과 국제협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통상적' 위기의 관리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참가하여 사이버 공격이나 핵공격과 같은 '신종' 안보위협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한국과 동맹국의 '신종' 안보위협 전문가들과 '통상적' 위기관리 실무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향후 필요한 위기관리 지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
김봉현 주 호주대사

발표
구자룡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김두연 미국 군축 · 비확산연구소 선임연구원
부형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노순 한라대학교 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부형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솔로몬(Solomon)을 포함한 많은 학자는 핵위기 관리전략을 사이버위기 대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이버전 억제 분야의 대가인 리비키(Libicki)는 사이버 위기와 핵위기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책임소재 측면에서 핵공격은 책임소재가 명확하나, 사이버전쟁은 발생 근원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둘째, 공격과 피해 측면에서 사이버 공격은 핵전쟁과 달리 예측이 어렵다. 셋째, 사이버 공격은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며, 반복적인 공격을 할 경우, 공격 받는 대상의 억제 능력에 따라 피해 발생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공격과 달리 사이버 공격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복성 공격이 가능하다.

둘의 이러한 차이는 사이버전 발생과 사이버 위기 대응 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본 국가가 보복 차원에서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며, 사이버 전쟁을 기존의 육 · 해 · 공 · 우주에 이은 '제5의 전쟁터'라 부를 수 있는지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전쟁이 기술과 무기의 발전으로 진화했다면, 사이버 전쟁은 기술의 진보만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사이버전이 발생하면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난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이버 방위 또는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은 사이버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네트워크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물리적 공간의 경우, 공격받은 후 회복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무기와 자원의 절대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만, 가상공간의 경우는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전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항력을 갖는 것 자체가 공격의 유효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

사이버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은 사이버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한 네트워크 구축 여부

장노순 한라대학교 교수: 사이버 위협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 둘째, 데이터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이버 전쟁이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3 · 20 사이버 테러'는 두 번째 유형으로, 데이터 파괴와 시스템 작동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의 핵심 논리는 파괴력이라 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격은 순식간에 이루어져 공격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핵위협과는 또 다른 안보위기로 분류될 수 있다.

사이버 위기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중국에 사이버 공격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2010년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의 핵활동을 저지하고자 사이버 시설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는데, 이는 낮은 비용과 적은 부작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조치로 평가된다. 다른 하나는 몇 개월 전에 미국이 사이버 공격부대를 창설하여 활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이는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사이버 무기로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국은 이에 대해 사이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핵이나 미사일처럼 사이버도 국제제도화의 시작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원치 않아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전략과 공론 형성이 필요하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긴장과 화해의 국면을 넘나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쉽고 인명 · 물자 피해가 곧바로 생기는 '재래식 위기' 대응에는 비교적 체계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핵 · 사이버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사이버 위기의 가능성도 일상화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이버 위기가 가진 돌발성, 휘발성 같은 특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대응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 과거 사이버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논의가 많았고, 결국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협의체를 두고 그 산하에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두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사이버 테러의 돌발성과 휘발성에 비추어 사실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정리되어야 하지만, 국내 정치에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어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핵사용 위기와 관련해서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그 이후에 포착된 핵실험 증후는 '핵화'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증후가 포착된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담판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고,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최근에 북한의 핵화 및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공격 가능성 역시 거론되고 있으나,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 간에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핵의 직접 사용과 북한이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핵무기 안전 문제였으며, 미국이 주목했던 것은 핵무기의 해외 이전이었다.

핵무기가 한반도 전쟁 초기에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북한 전역을 뒤져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단거리 핵미사일을 선제공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알 수 없다.

사이버 위기가 가진 돌발성, 휘발성 같은 특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며, 대응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였다.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국에 안보위기가 도래했으며, 북한 내 군사적인 폭동과 국가 붕괴에 의해서도 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1962년 쿠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군사작전이 핵위기에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의사소통과 타협을 통한 위기 해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핵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으며,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핵위기는 재래식 무기의 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수세와 공세를 기본 안보전략으로 삼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재래식 안보전략을 대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예로 북한이 남한을 핵공격할 증후가 포착되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전략을 들 수 있다. 이 전략이 실행되려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이 확실하다면 선제공격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성공적인 선제공격은 핵 사용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선제공격이 성공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모든 무기의 소재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며, 만약 북한이 소형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면 더더욱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공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한국이 성공적으로 선제공격한다고 해도 오히려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다. 또한, 선제공격의 효과나 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북한 지도자의 위기의식을 자극해 전면적 핵공격의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다.

군사작전이 핵위기에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의사소통과 타협을 통한 위기 해결만이 유일한 해법

김두연 미국 군축 · 비확산연구소 선임연구원: 우선 북한이 실제로 공격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 위협과 역량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탑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북한 핵 보유고를 추적, 파악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억제수단 또는 공세수단인지 파악해야 하고, 혹은 보험정책의 일환인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는 가정에 따라 선제공격이 유효하려면, 북한이 보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밀성과 파괴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쉬운 선택일 수 없다.

따라서 '예방'과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 봉쇄와 비핵화를 고려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구자룡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시진핑 시대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요소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과거 북 · 중 관계는 혈맹 관계였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일반 국가관계로 변하고 있고, 미 · 중 관계는 항미원조 적대관계에서 G2, 즉, 경쟁 속 협력의 관계로 변하고 있다. 대서방 방파제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 효용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권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선린 우호 형제국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중국 발전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지국가에서 '팽'도 가능한 국가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대북 일방관계이던 것이 21년 전 수교를 맺은 이래로 남북한 쌍방관계로 변하였으며, 고위 간 군사교류도 진행했다. 중국에 대한 세계의 시각도 변해서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미국과 견줄 만한 대국으로 보고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내 정치 환경은 공산당이 여론을 무시하며 독주해왔지만, 지금은 여론의 동향 특히, 인터넷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서 과거에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기존 대북정책 노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질문 1) 북한의 핵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에도 위협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 어필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1) 한인택 연구위원 러시아에는 별로 공격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이 없다. 북한이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핵을 전달할 만한 미사일이 있는가? 서유럽과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의 내륙지방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가? 북한의 무기능력으로는 '소형화하여 탑재'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는 선진화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정거리가 가까울수록 핵탄두를 더 무겁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능력으로는 러시아 공격이 불가능할 듯하다.

질문 2) 강두현 확장된 억제 아래서 북한의 핵 견제와 핵 능력이 강화되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확장된 억제를 신뢰할 수 있는가?

답변 2) 김두연 선임연구원 미국의 확장 억제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가? 과연 한국이 스스로 자위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와, 한국이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핵을 둘러싼 국제 조약이 많다. 현재 한국이 핵 역량을 직접 키우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그것으로 상징적인 메시지를 북한에 줄 수는 있으나, 미국의 군 통제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에는 창조적으로 모색할 방법이 있고, 창의적인 방안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는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미국의 무관심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 '억제이론'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뿐만 아니라 비재래식 위협과 위기에도 적용 가능함.
- 비재래식 위협인 '핵위협'과 '사이버위협'은 성격과 특징이 뚜렷하게 다르므로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공격 대응차원으로서의 '선제공격'은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와 손실을 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움.
- 시진핑 시대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의 변화는 북핵 위기 해결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정리
윤예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서
아시아 싱크탱크의 과제와 발전방안

제주평화연구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한 세계 싱크탱크 평가에 따르면 50위권 안에 일본은 2개, 중국은 3개의 기관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의 학계가 싱크탱크의 경쟁력 제고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싱크탱크의 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즉, 재벌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여부, 재정적 독립, 일관된 연구목적과 방향설정,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국가의 대규모 자원 투입 등이다. 한국 싱크탱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강경태 신라대학교 교수
가와구치 슈지 미쓰비시 연구원
야오왕 보아오포럼 총감독
마이클 여 아시아전략리더십 연구소 소장

싱크탱크의 역할과 한계

강경태 신라대학교 교수: 한국에는 정부가 후원하는 다양한 싱크탱크가 있지만, 성공적이고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삼성경제연구소(SERI,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ion)를 들 수 있다. SERI는 한국 싱크탱크의 성공 조건과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대기업인 삼성이 후원한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성공한 반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기관이지 국민 전체나 국가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가와구치 슈지 미쓰비시 연구원: 일본의 성공적인 싱크탱크로는 미쓰비시연구소(MRI, Mitsubishi Research Institution)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소는 지식의 창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유지,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만족이라는 3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싱크탱크 전반에 관해서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정부가 후원하는 기관이고, 가장 유명한 기관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 연구소나 독립 연구소는 영향력이 약하다. 이는 재정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야오왕 보아오포럼 총감독: 보아오포럼(Boao Forum)은 중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모임을 조직하여 성공한 포럼이다. 이 포럼은 정부의 후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중국 내의 사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후원하는 기업으로는 한국의 삼성과 SK도 있다.

마이클 여 아시아전략리더십연구소 소장: 싱크탱크에 관하여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효율적인 싱크탱크가 되기 위한 조건, 효율성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효율적인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가 분명해야 하며, 그 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디어와의 교감도 중요하고,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변신을 추구해야 한다.

싱크탱크의 효율성은 대학, 미디어, 정부와의 접촉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으로도 평가해야 한다. 싱크탱크는 새로운 도전에도 대응해야 한다. 공공정책 분야 이외에도 지역 통합, 환경 이슈,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이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효율적인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가 분명해야 하며, 그 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싱크탱크 성공의 조건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싱크탱크 성공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창출이나 생산이다. 싱크탱크 자신의 브랜드화된 이론이나 설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객들의 만족만을 추구해서는 창의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어렵다.

강경태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은 성공적인 싱크탱크로 뽑힌다. 그러나 이 기관은 정부의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즉, 고객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교체되는 5년마다 정책이 파도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 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싱크탱크는 약하다. 정부나 재벌들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The Asan Institute for

근본적으로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념과 지식, 그리고 연구방법론이 있어야

Policy Studies)이나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야오왕 총감독: 싱크탱크들은 복잡성과 유동성이 높은 현재에 맞는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싱크탱크들은 이 부분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마이클 여 소장: 아시아 내의 다양한 싱크탱크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싱크탱크와 시민조직 간의 교류도 필요하다. 싱크탱크라면 보다 큰 이슈, 즉 글로벌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질문 1) 이정자 시민운동가 **싱크탱크의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싱크탱크라면 정부와 후원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1) 이성우 연구위원 영향력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영향력은 연구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념과 지식, 그리고 연구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질문 2) 워싱턴 D.C.에서 온 청중 **미국에서는 싱크탱크의 가치를 정책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한다. 지식의 창출이나 생산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 듯하다. 이런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유래된 것 같다.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다르다. 미국은 많은 일반인의 기부금도 싱크탱크를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답변 2) 강경태 교수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으로 미국의 경험을 한국이나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싱크탱크는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식의 창출이라는 측면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함.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싱크탱크만이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음.
- 싱크탱크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같은 이슈를 다루는 유사한 싱크탱크 간의 협력이 국내와 지역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또한, 다른 이슈를 다루는 싱크탱크들의 협력이 필요함. 자신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제와 정책에 치우친 싱크탱크는 많음. 이제는 새로운 이슈 즉, 글로벌 위협과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도 필요. 특히 저개발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선진국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정리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한 · 중 도시외교의 새로운 시스템

차이나매거진

도시외교는 한 · 중 우호합작의 중요한 내용과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 · 중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임명됨에 따라 향후 양국의 우호와 합작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시외교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한 · 중 전문가들의 논의는 한 · 중 도시외교의 과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미래를 여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세션은 중국 차하얼학회와 한국의 (사)한중지역경제협회가 공동으로, 한 · 중 간 도시외교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식을 토론하며, 도시외교 전문가들의 실제와 이론의 결합에 중점을 둔 연구발표를 통해 한 · 중 도시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사회
이상기 (사)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소개
커인빈 차하얼학회 비서장
리리궈 중국국제도시우호연합회 비서장

발표
구자룡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위안리 베이징대학교 부교수 /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
자오커진 칭화대학교 부교수 /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
김경용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토론
김승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철 베이징 시 정협위원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리리궈 중국국제도시우호연합회 비서장: 한 · 중 도시외교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농촌건설과 도농발전 일체화를 예로 들어 한 · 중 우호도시 간의 발전 실무 합작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 · 중은 133개의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경제 · 문화 · 교육 · 과학 · 환경 등의 영역에서 교류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51.27퍼센트에 달하며, 도시화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고, 고용 · 거주 · 생활환경 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의 농촌들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도시화 경험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중국은 가장 성공적인 신농촌건설 경험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다섯 차례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새마을학교를 건설하고, 한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160여 현 간부들이 강연을 들었다. 양국은 발전에 유사점이 많기에, 중국은 한국을 귀감으로 삼아 중국 발전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중국의 '신농촌건설'은 새마을운동을 교훈 삼아 조성되어 중국 지방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도시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추진은

소강사회 건설의 중점이자 난점이기도 하다. 각 지방은 신농촌건설에서 많은 유익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발전 · 민생개선 · 경제시스템 조정구조 개선 중시 등의 측면에서 한 · 중 양국은 발전 이념이 유사하다.

커인빈 차하얼학회 비서장: 차하얼학회는 민간 중국 공공외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도시외교 연구를 학회의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올해 계간『공공외교』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국제 우호도시는 공공외교의 중요한 경로이다. 도시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우호도시 간의 전통적 교류방식이다.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각계의 대표단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고찰하고, 상호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도시외교도 친척과의 교류처럼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호도시 간 학습과 합작을 해야 한다. 역사, 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하여 전면적으로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의 거버넌스가 대표적 예이다.

셋째는 국가의 사업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 이미지는 대도시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도시는 국가 이미지의 주요 요소이며, 도시외교 추진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빛낼 수 있다.

구자룡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한 · 중은 거미줄 같은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맺어왔다. 오랜 역사적 인연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통해 상호투자 유도, 관광객 유치, 유학생 교류, 학생 · 주부 · 노인 교류 등 접촉을 확대해 왔다. 현재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산 신항 배후단지, 전북 새만금사업, 전남 해남 · 영암 관광레저도시 등 중국의 투자를 기다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간의 한 · 중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공무원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의 중국 진출이 부진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저평가되는 현상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다.

위안리 베이징대학교 부교수/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 차하얼학회는 국제

도시의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의 부상은 도시외교를 외교의 독립적인 한 형태로 만들었다. 국가외교와 비교할 때 도시외교는 더 다양한 행동과 유연한 목적과 다채로운 의미와 복잡한 규칙을 갖는 새로운 외교 유형이다.

관계와 지방도시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교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한다. 두 도시, 천저우와 원저우를 방문 시찰하여 연구한 결과, 중국 도시외교의 두 가지 모델을 도출했다.

천저우는 중국 서부의 미발달 도시로 정부주도형 도시외교 모델을 대표한다. 천저우는 한국과 일본의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천저우는 환북부만 개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의 소도시이지만, 중국과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외교류를 하고 있으며, 해외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형의 지방정부 교류이다. 즉 천저우는 지방정부가 자기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교전략을 받아들여 자신의 지리적 장점을 발휘하고, 국가전략과 정책을 받아들여 지방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다.

반면 원저우는 중국 동부의 비교적 발달한 도시로, 사회참여형 외교 모델이다. 교류 주체는 해외 화교들이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받는 사회참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저우는 연해 지역이나 항만시설은 발달하여 있지 않다. 50여 만의 교민들이 있으며 원저우 출신의 화교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다. 원저우는 유럽의 프랑스에서 강력한 화교사회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정치 ·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저우 화교들이 국가를 위해 달라이 라마 방문 거부 등 국가 외교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원저우 교민들과 같이 해외에서 화교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주로 광범위한 해외교민 자원에 의존하여 국가의 공공외교 및 기타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피동자발식의 교류 형태이다. 때때로 교민의 애국 열정이 중대사건에 반응하여 외교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저우 지방정부와 중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이 외에도 상하이와 홍콩 등을 연구한다. 아직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하였으나,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오커진 칭화대학교 부교수/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 세계화는 세계의 정치적 · 경제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도시의 외교적 역할이 복합적 · 초국경적 책임과 사회적 참여로 인해 활발해졌다. 도시의 세계화와 글로벌 도시의 부상은 도시외교를 외교의 독립적인 한 형태로 만들었다. 국가외교와 비교할 때 도시외교는 더 다양한 행동과 유연한 목적과 다채로운 의미와 복잡한 규칙을 갖는 새로운 외교 유형이다. 도시외교는 이미 새 시대의 국가외교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외교와 경쟁하며 도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도시외교가 갖는 도시발전 과정의 전략적 의의로, 최근 학계에서는 자유파, 전통파, 절충파의 세 이론이 생성되었고, 도시외교를 이론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도시화와 세계화의 역사적인 추세로 볼 때, 국가는 항상 부득이하게 도시외교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택했고 도시의 국제화 전략을 지지한다. 동시에 도시외교가 국가외교의 총체적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혁신제도,

건전 기제, 완전한 규범 등의 조치를 하고, 도시외교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도시외교를 전체 외교의 궤도 속으로 진입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대외행위는 중앙정부의 정책에선 큰 조정이 없었으나 각 지방이 발전하면서 대외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도시마다 국제화의 길과 발전모델이 각기 다르다. 광둥은 반미의 목소리가 없고, 절강성은 소규모 수공업으로 구미 유럽시장으로 진출한다. 상하이는 외국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북부 지방은 한국 ·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적으로 테러, 환경오염 등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일어난다. 제조업 도시는 쇠퇴해가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금융이 발달하고 있다. 국가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 각 도시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들이 각기 특성에 맞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도시외교는 첫째, 중앙외교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비주권적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관광, 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지역적 장점을 살려야 한다. 셋째, 도시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항구, 자본 등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스마트폰 같은 현대 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 · 중 · 일 등 동아시아가 함께 노력하여 도시외교의 새로운 모범답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김경용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개인이나 정부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218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330개의 지방정부가 교류 중이며, 한 · 중 자매결연 도시는 185개, 한 · 중 우호 교류도시는 327개로 총 512개의 도시가 교류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12개 국가와 22개 성시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매결연 2곳, 우호교류 관계 3곳,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2곳 등과 교류 중이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 · 중 지방정부의 교류가 발전하는 방안으로, 첫째, 교류 유형 면에서 민간교류 형식이 증가하여야 한다. 현재는 정부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분야의 교류가 주를 이룬다. 또한 경제무역(투자설명회, 무역박람회 등)이 많다. 따라서 교류 형식을 보다 다양하게 하여 민간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단순 접촉을 넘어 신기술 정보공유까지 교류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제교류협력지원기구의 교두보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동번영과 상호이익 증대를 지향하는 큰 틀 안에서 상호이해하는 방식으로 무역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김승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세계적으로 국제교류가 도시외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국과의 교류가 성과 위주로 나아가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외교를 조례화하고, 민간위원회 거버넌스를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철 베이징 시 정협위원: 올해는 베이징과 서울이 우호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박원순 시장이 올해 4월에 베이징을 방문하여 협력강화를 위한 대표사무소 개설 협의를 하였다. 한 · 중 양국은 진정한 문화 · 경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의례적인 방문을 넘어 새로운 도시외교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외교의 지표로 베이징에는 서울센터를, 서울에는 베이징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상대 국가와 도시의 이미지를 담은 외교지표이자, 플랫폼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는 점, 도시와 도시의 교류는 선, 나라와 나라의 교류는 면이 될 것이며, 이 점, 선, 면을 연결하면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환경이 구축될 것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한 · 중 도시외교에서 인적 교류는 많으나 정보교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들이 볼거리나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국제교류에서 도시 간 교류는 새로운 추세임.
- 중국의 도시화는 필연적이며, 그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우호도시들의 자각과 노력이 절실할 것으로 보임.
- 한 · 중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상에 맞추어 이를 집중하여 연구하는 정책적, 학술적 후원이 필요함.
- 경제협력만이 아니라 관광 · 교육 ·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정리
채하연 대진대학교 대학원 교수

북핵 난국 대처하기
어떤 선택방안이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013년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이에 대해 UN은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결의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호전적 수사와 군사적 행동을 동원하여 한반도 긴장수준을 고조시키며 남북협력의 남아 있는 유일한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남북한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져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희망의 등불을 밝혔으나, 북한은 계속 핵개발에 진척을 이루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멀어 보인다.

- **과연 현재의 북핵 난국을 벗어날 현실적인 방안은 있는가?**
- **만일 있다면, 6자회담, 양자회담 및 다른 조치를 포함한 어떤 선택방안이 있으며, 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만일 마땅한 선택방안이 없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가?**

사회
스타인 퇴니슨 前 오슬로평화연구소 소장

토론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
판젠창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 중국국방대학교 교수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강태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팀장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대북 유엔 제재의 효과 평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던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본 세션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과 3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2087호 및 2094호)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먼저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팀장**은 사실상 유엔 제재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인정했다. 비록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그 시기를 늦추고 나아가 북한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인 의견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유엔 제재의 효과를 인정하나, 과연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근본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즉 경제 제재는 경제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지만

체제 존폐를 결정짓지는 않기에 그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강태호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최근 최용해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제재의 효과를 인정하나, 그 한계점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협상으로서의 제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소장**은 유엔 제재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제재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하경제의 활성화를 초래하고, 심지어 핵개발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젠창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이자 중국국방대학교 교수 역시 유엔 제재의 한계성을 언급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의 도발 또는 유엔의 제재 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핵 난국을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감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 제재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전제하므로 완전한 해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핵위기에 대해 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대립과 힘의 불균형의 결과물이라 분석하며, 동북아의 긴장 구조와 상호 불신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를 통한 대북 포용 정책의 효과 평가

피터 헤이즈 소장은 제재에만 집중된 현 대북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금융제재와 무기금수를 통해 핵개발 일정을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었으나,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 완전한 거래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 계속 거래를 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소외된 계층임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제재만을 가하는 것은 불균형적일 뿐 아니라 비생산적이기에 제재와 포용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젠창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큰 기대감을

유엔 제재의 효과를 인정하나, 과연 이러한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근본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었는지 자성해야

나타냈다. 최소한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리라 전망하며, 무엇보다 관련 국가 간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6자회담이 비록 갈지자로 오락가락해왔지만 일정한 진전을 이뤄냈음을 강조하며, 9 · 19공동성명 등을 통해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는 핵무기 없이도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봤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줄어들고, 미국 · 일본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제 · 에너지 지원이 계속되면 핵무기를 포기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비합리적인 체제가 아니고 자신이 가진 핵프로그램을 자기 이익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려는 스마트한 전략과 계산을 한다며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회의론을 반박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전망

오늘날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찬반 논쟁은 뜨겁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핵위기가 시작되고, 과거의 협상들이 별다른 성과가 없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일종의 협상무용론 혹은 폐기론이 제기되었다. 반면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외 대안부재론을 주장한다.

본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은 6자회담 재개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그 실패 원인을 두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태호 기자와 판젠창 교수는 관련 국가들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꼬집은 반면, 이하원 소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렸다.

특히 판젠창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서 방해자(brocker)였다며 한국에 쓴소리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과 강경책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여론의 양극화에 시달렸고, 때문에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분위기를 망쳐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지만, 강경한 보수 여론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가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남한의 정책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국에 일관성을 주문했다. 미국은 항상 비확산이라는 목표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전략 사이에서 오락가락했고, 미국의 국익과 국제적 혹은 국내적 제약조건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 북한은 언제나 국가 어젠다 중 상위가 아니었음을 꼬집고 미국의 해법 제시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패널들은 실패 원인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6자회담 재개 시 우리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하원 기자는 위성락 주러시아 대사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은 6자회담을 다양한 카드 중 한 가지 수단으로 활용하나 우리는 회담 하나에만 몰두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그간의 경험을 거울삼아 북한 지도부의 협상 자세와 전략, 그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 역시 정부 협상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국론 속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도 커지고 나아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지만, 강경한 보수 여론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가 큰 도전 과제로 남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논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핵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피터 헤이즈 소장은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6자회담 재개 시, 관련 국가들의 단결된 모습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북한 역시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특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1) 한반도의 종전 (2) 상호 비적성 선언 (3) 제재 종결 (4)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법적 보장 (5) 동북아 우호 협력 조약과 같은 형식의 4대 강국이 관여하는 다자 협력체 (6) 북한의 붕괴된 경제, 특히 에너지 안보 영역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외부 지원 (7) 핵 평등, 즉 경수로를 포함한 핵연료 사이클의 7가지 패키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젠창 교수는 언급된 7가지 항목 모두 각각은 훌륭하나, 패키지로 함께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국전쟁의 모든 유산을 궁극적으로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의 안정화,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 참가, 남북한의 궁극적인 평화통일 등을 제시했다. 특히 판젠창 교수는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이라 밝히며, 정직한 중재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미국은 필요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상반된다며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또는 확장핵억지(END, Extended Nuclear Deterrence)를 문제 삼았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비핵화의 정의가 북한은 '남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과 군사동맹이나 합동훈련을 안 하는 것'인 반면, 남한은 '남북한이 핵개발을 안 하는 것'만을 뜻해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비핵화의 의미를 북한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화에 앞서 5자 간 비핵화 용어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성훈 소장은 피터 헤이즈 소장의 7가지 패키지에 관해서 과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이하원 소장 또한 피터 헤이즈 소장의 7가지 패키지는 이미 9 · 15공동성명, 2 · 13실행합의에 포함된 내용임을 지적하며,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경 소장은 과거 북한이 유훈 통치의 일환으로 핵을 추진했다면, 최근에는 복잡한 환경에 의한 다양한 요인들이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즉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더는 핵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전제와 핵 포기에 따른 이익 제시로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태호 기자는 외부 환경들에 의한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비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오늘날 한반도 위기를 북한에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현실왜곡이라 비판했다. 오히려 그 동안 시행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그런지 문제점을 돌이켜보고 이를 타산지석 삼아 향후 보다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개발과제와 ODA 지원 방안

한국국제협력단/제주대학교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발전 단계를 보이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 경제사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ODA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세션에서는 UNDP, 동티모르, 한국, 제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가들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개발과제 전반과 더불어 동티모르, 한국, 그리고 제주의 협력 방안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전반부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동티모르와 한국 입장의 주제 발표를 들었고, 후반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원조기구, 국제기구, 시민사회, 지방정부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ODA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
홍승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축사
서경석 前 주 동티모르 한국 대사

기조연설
호세 루이스 구테레스 동티모르 외교장관

발표
박은하 외교부 前 개발협력국장

토론
박규희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팀 과장/前 동티모르 사무소장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 UNDP서울정책센터 정책전문관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권상철 제주대학교 교수
고봉구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협력과 교류협력사무관

호세 루이스 구테레스 동티모르 외교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동티모르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다방면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동티모르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이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동티모르와 같은 여러 지역은 아직도 불균등한 발전과 빈곤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티모르는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SDP, Timor-Leste Strategic Plan)을 세웠다고 설명하였다. 동티모르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영유아 사망률 줄이기, 원활한 식수 공급, 교과서 보급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등 동티모르에 실제로 필요한 원조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제주도가 동티모르의 국립병원에 의료장비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한국의 도움으로 개발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티모르뿐만 아니라 아시아 · 태평양의 다른 섬 국가들도 동티모르와 유사한 개발과제들을 지니고 있어, 공여국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현재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며, 2030년까지 중진국 목표 달성, 그리고 향후 성공적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시아 · 태평양의 발전과 한국 ODA의 미래

강영신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선진화반 팀장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양자 유 · 무상 원조의 60퍼센트 정도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중점 협력국인 동티모르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 동티모르 ODA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원 분야별 비율을 보면 2007~2011년에는 55퍼센트 이상이 보건 및 교육 분야에 지원되었다고 했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고 한국 발전 경험을 공유할 뿐 아니라,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대동티모르 원조의 방향과 기본 틀을 수립하는 국별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의 대 동티모르 원조의 중점 협력 분야인 교육훈련(기술교육 강화), 보건(질병관리 강화 및 모자보건 증진), 사회 인프라(식수 공급 및 도로 인프라) 등을 설명하였다. 동티모르 CPS 수립을 통하여 국가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기여하며,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테미 이즈메스티에브 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전문관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위해 국가 단위, 지역 단위, 하위국가 단위, 신탁자금을 통한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단위에서 개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개발효과역량강화기구(CDDE, Capacity Development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Facility for Asia Pacific)의 경우, 국가별 단위의 개발 효과성 강화의 경험과 성공 사례들을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의 예를 통해 공유하였다.

또한 국가 하위의 지방 단위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ART(Articulating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고 한국 발전 경험을 공유할 뿐 아니라,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대동티모르 원조의 방향과 기본 틀을 수립하는 국별협력전략을 준비

Territorial and Thematic Networks for Human Development)는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탈(脫)중심화를 통해 국가 내 지역 공동체와 유엔(UN) 산하기구 등 다양한 국제협력 주체가 조화롭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한-UNDP 새천년개발계획(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신탁기금의 경우, 동티모르의 개발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새천년개발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를 돕고, 포괄적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사례를 설명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UNDP가 개발 효과성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예정임을 알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은 동티모르 국가개발계획에서 강조하는 농촌 발전은 최우선 고려대상이며, 전체 인구의 75퍼센트가 거주하는 농촌의 발전이 식량 안보,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개발민간단체인 지구촌나눔운동은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에서 농축산 소득증대, 기초교육 지원, 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동티모르와의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입장에서 현지 농촌발전 이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국민 절대다수의 생계가 걸린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티모르 정부, 민간, 국제기구, 국제 비정부기구(NGO)와의 교류협력에서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규희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팀 과장이자 전 한국국제협력단 동티모르 사무소장은 공여기관 현지사무소 운영과 인적자원 개발의 연계를 주장하였다. 공여기관의 현지사무소에서는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현장뿐 아니라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동티모르의 경우, 공여기관 현지 직원의 임금수준이 현지 노동시장의 통상수준보다 높아 공여기관에서 역량을 쌓은 인력이 정부나 민간으로 유입되는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인사행정 초점을 변화시켜 우수한 인력의 유치를 위한 임금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지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상철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는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역 지식(local knowleg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섬 지역이 갖는 개발과제의 특성에 관해 토론하였다. 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의 사회, 문화, 전통 등을 포함한 지역 지식을 누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제주와 동티모르의 공통점일 수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한정되고 취약한 환경에서 한정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제주에서는 전통적으로 바다 공동어장, 공동목장을 통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 및 주민들의 공동

협력이 강화되는 예를 들었다. 동티모르도 섬 지역 공동체적 특성을 갖고 고유의 자원 이용방식과 관리의 지혜를 발굴하고 개발협력의 프로세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개발협력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가능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의 협력체를 유지, 정립,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봉구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협력과 사무관은 이 세션의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제주도의 동티모르 개발협력 추진의 측면에서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제주도는 1963~1967년까지 5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22만 달러의 옥수수를 무상 원조로 받은 경험이 있고, 50년이 지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저개발국가와의 개발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캄보디아에 식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주도의 민간단체인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는 베트남에 학교를 건립하는 등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ODA사업 파트너로 동티모르를 선택한 이유는 시대적으로 아픈 역사(제주의 4.3, 동티모르의 내전)를 갖고 있지만, 아픔을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시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실천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기관과 ODA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련의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 7월에 동티모르 딜리 국립병원에 6,000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설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원국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정부의 ODA국별협력전략(CPS)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속해서 ODA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중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김태성** YMCA **제주사무총장**은, 개발원조에서의 협력국가 사회개발 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자인 강영신 팀장에게 질의하였다. 강영신 팀장은 ODA에서 파트너십 역량개발이 중요하며, 인간의 기본 권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과 보건에 비중을 두고 사회개발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내에 NGO지원팀을 만들어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 풀뿌리 사회개발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중 제언 시간을 통해, 한 시민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스마트그리드 아이템 개발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제주와 동티모르와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예를 들어 제주도의 부속 섬인 가파도가 탄소제로(carbon free)

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의 사회, 문화, 전통 등을 포함한 지역 지식을 누적시키는 작업이 필요.

섬인 것처럼, 동티모르의 한 부속 섬도 탄소제로 섬, 힐링을 위해 자연을 찾는 곳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고, 앞으로 제주와 동티모르 사이에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기술교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개발 효과성을 위해 국가 단위, 지역 단위, 하위 국가 단위,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개발 협력 파트너십의 다양화와 탈중심화가 필요함.
- 한국과 동티모르 정부, 민간, 국제기구, 국제 NGO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협력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그 구심 역할을 해야 함.
- 개발협력사업 수행 못지않게 공여기관의 현지사무소 운영에서 현지 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의 사회, 문화, 전통 등을 포함한 지역 지식을 누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개발협력을 다양한 스케일에서 적용해야 하며, 특히 마을 단위의 협력체를 유지, 정립,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정리
고은경 한국국제협력단
제주지역 커뮤니티 대표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

한 · 아세안센터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지역 협력 증진과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ASEAN이 있다. ASEAN은 1967년 출범 이래 축적해온 회원국 간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ASEAN 자체의 역내 결속 및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 동아시아 통합 논의의 양대 축인 ASEAN+3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교섭과 같은 주요 현안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공영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는 데 이어, ASEAN, ASEAN+3은 물론 동아시아정상회의와 한 · 중 · 일과 같은 관련 지역 협의체 및 역내 소지역 차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와 동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고,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사회

정해문 한 · 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주제발표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토론

피터 탄 하이 추안 주한 싱가폴 대사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 대사
존 프라스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마이클 여 말레이시아 아시아 전략 리더십연구소 소장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역내 경제적 지역 통합은 2011년 11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RCEP은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파트너에 한해 개방하고, 경제협력과 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아세안 회원국이 협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아세안 개발도상국에 대해 우대조치를 함으로써 회원국 현실 간의 갈등을 해소, 포괄적 · 호혜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이미 체결된 아세안+1 FTAs(Free Trade Agreements) 보다 크게 개선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RCEP이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할 경우 적어도 일부 국가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며, 16개 국가 모두 참여할 경우 결국 높은 수준의 FTA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1 차원의 FTAs만으로는 RCEP을 추진하기 어렵다.

여타 FTA, 즉 한 · 중 · 일 FTA 및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과 아세안+6 국가 간 미체결 FTAs의 진전이 변수가 될 것이다.

피터 탄 하이 추안 주한 싱가포르 대사: RCEP은 지난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공식적으로 협상을 개시했다. RCEP은 체결 시 세계인구의 45퍼센트, 세계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가장 큰 FTA로, TPP와 함께 아시아 · 태평양자유무역지대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RCEP은 기업들이 RCEP을 통해 그간 아세안+1 차원의 FTA를 통해 누릴 수 없었던 더 높은 혜택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 간의 개발격차를 고려, 개발도상국 외 파트너국 또한 모든 분야를 자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세안과 파트너국은 지역통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국 보호주의를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중진국으로서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 특히 RCEP 체결에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 대사: 인도는 문화적 · 종교적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근접해 있어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2,000년이 넘도록 유지해왔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지난해 아세안과의 교역은 80억 달러, 지난 7년간 인도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는 26억 달러에 달했고, 아세안,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총 여섯 개의 양자 FTA를 체결했다. 이렇게 인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국가로서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로는 2조 달러의 경제규모와 4.75조에 달하는 구매력, 인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산층과 소매시장과 2020년 평균 29세를 기록할 젊은 인구를 보유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RCEP에 이러한 인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매력적인 사실이다.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탄력성을 인정하며, 인도 또한 이웃 파트너국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세안과 파트너국은 지역통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국 보호주의를 피해야 할 것

존 프라스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세계 주요 경제권은 통합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중 하드파워는 취약하지만 소프트파워가 강한 아세안이 경제적 통합의 중심에 위치해 왔다. 아시아는 냉전에서 긴장 속 평화(cold peace), 그리고 점진적으로 공동 평화로 발전해왔다. 과거에는 서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이루었으나 신뢰 구축, 우정,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경제 협력, 중국의 개방, 그리고 인도의 친(親)동아시아 정책은 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하였다. 오늘날 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견고히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10억이 넘는 인구가 현대화를 받아들였다. 지역주의를 받쳐주는 여러 체제 및 체계들이 생겨났고, 그중 RCEP은 국가 간 개발 격차를 고려한 협정이다. 단순히 시장 자유화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이 협정을 2015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RCEP은 TPP를 위한 주춧돌인가? 아니면 RCEP과 TPP을 상호 보완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동아시아 내에서는 이에 접근하는 방식은 물론 이해관계도 다르다.

마이클 여 말레이시아 아시아전략 리더십연구소 소장: 앞서 발표자와 토론자가 거듭 설명했듯 RCEP은 체결 시 세계에서 가장 큰 FTA가 될 것이며, 총 16개 국가의 강한 통합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 간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확대, 심화하기 위한 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 계획은 개발격차를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뿌리 깊은 지역통합 실현,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아세안을 더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만들어 아세안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합된 규제 개혁, 일자리 성장, 공존, 번영, 및 이 지역의 통합과 동반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경쟁력기구(East Asia Competitiveness Institute) 설립을 제안한다. 아세안과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의 글로벌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3분의 1에 달하는 RCEP 수준의 통합을 위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태스크포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
김세영 한 · 아세안센터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른 한반도 정세

국립외교원

한국과 주변 4강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전략은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 정부 출범 이후의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긴장의 수위가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대내외적 시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 남북관계의 전망 등을 짚어 보았다.

사회

홍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발표 및 토론

김현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여승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2013년 5월 7일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공동기념선언을 발표하였으며, 공동의 가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의지, 포괄적 동맹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 중 아래와 같이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3가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한미 양국은 한반도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2) 한미 양국은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3) 한미 양국은 세계 차원에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양국은 서로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며 시각 차이를 좁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현안이 존재한다. 또한, 2013년 10월 1일에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2+2회의(외교부, 국방부)'로 확대하여 양국 동맹관계를 심화 ·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상기 현안들을 한미 간 협력 아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 정책 및 행보가 불안정한 이유는 북한의 내부 권력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첫째,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승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함으로써 체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김정일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이후 안정적인 세습을 위해, 장성택 등의 '로열패밀리'와 최룡해로 대표되는 '혁명열사 후손', 그리고 '신군부'로 구성되는 후견그룹을 구축한 것이 3대 세습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2단계 과정으로 김정일이 구축한 후견그룹 내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로열패밀리와 혁명열사 후손들로 구성된 당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부세력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정은은 한반도의 정치 ·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는 김정은이 후견그룹에서 독립하여 유일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국의 전략적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핵프로그램의 위협 제거에 있으며,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마련과 동시에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두 가지 대북정책의 목표가 있으며, 이러한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고안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대화 없이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기존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으므로 더는 대화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수록 북한은 더욱 긴장국면을 고조시키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대화가 중단되었던 시점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만일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제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을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방안이 부재하게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동일한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미 · 중 관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미국과 중국이 의견 대립을 보임으로써 한반도가 양국 힘겨루기의 장이 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대중 견제정책으로 인식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압박이 결국 대중 압박을 목표로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대북정책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대북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점점 줄어들면서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 미 · 중 전략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프로세스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함으로써 서로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북한 내부의 정치 시스템은 김정은, 군부 및 김 씨 일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 세 집단 간의 경쟁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김정일이 젊고 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 내 주요 행위자 간에 견제 구조를 조성한 것이다. 군부는 김정일 정권 동안 유지했던 정치 · 경제적 권력 독점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시스템 내부에서는 미얀마와 같은 정치 ·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힘들 전망이다. 김 씨 일가의 목표는 김 씨 일가에 의한 북한 통치 유지에 있으며, 김 씨 일가는 군부로부터 당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을 옮기려 한 바 있다.

북한은 향후 다음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북한은 변함없이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군부 역시 권력을 공고히 하고, 특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보를 강조하면서 핵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개발과 군사 도발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 및 한국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도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이 제한적인

'서울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 미 · 중 전략 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이 프로세스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연계함으로써 서로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북제재'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라 할 수 있으며,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스마트 제재'란, (군부 강경파와 같은) 북한 정권 내 특정 목표집단을 설정해서 제재를 집중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목표집단의 피해를 최대화함으로써 대북제재의 효과 제고를 도모한다.

한국과 주변 4강의 리더십이 교체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역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한국과 주변 4강의 리더십이 교체됨에 따라 동북아시아 역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국내 현안의 응급성, 중동문제의 전략적 중요성 등으로 평시에는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세 가지 가정이 존재한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는 내부 개혁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식 개혁 · 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개혁 · 개방의 진행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 유지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최근 태도가 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는 결국 김정은 정권에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할 만큼의 레버리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는 경우, 대북 압박에 유효한 레버리지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만큼 한국 다음으로 북핵 및 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일본인 납북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 일본은 북한과 복잡한 양자 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한일관계 경색 역시 우려한다. 또한, 미 · 일동맹의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경제 · 외교력이 신장되고, 역내 안보구조(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내에서 일본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환영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의 등장 이후 일본 내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는 다양한 국제 이슈에서 미국과 대치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고, 협상 시에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글로벌 파워로서의 입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라 동북아시아는 도전과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김정은과 같은 경험이 없는 리더의 등장은 역내 안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라 상호 간의 새로운 접근법 모색, 대화 및 이해의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승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상대적으로 연착륙하였으나, 김정은은 체제 내부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김정일보다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김정은은 로켓 발사 실험을 감행하며 '2 · 29북미합의'를 파기하였고, 3차 북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개성 공단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끊임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대외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어두었지만, 여전히 모든 대화는 북한이 기존의 합의사항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5월에 있었던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함에 따라 한미 간 북핵문제 해결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둘째, 한반도 평화 · 안정 유지. 셋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 해결이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중국은 기존의 3가지 원칙 중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룡해 특사의 방중 시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북한을 이제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지 않고 '전략적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내고자 한다. 즉, 한국은 북핵 불용의 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편, 유의미한 태도 변화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을 동시에 추구한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국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만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 스타인 퇴니슨 전 오슬로평화연구소 소장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및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한의 중국과 경제교류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답변 1-1) 홍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한국과 중국은 21년 전 수교를 맺은 후 지금까지 양국 간 경제교류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지난 20년이 한 · 중 경제교류 확장의 시기였다면, 향후 20년은 양국 경제관계 성숙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중국에 점차 더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고 있는 한편, 북한은 중국에 더는 혈맹관계가 아닌 일반 국가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남북한 관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답변 1-2) 여승배 부단장 지난 20년간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지속해서 확대되어 왔으며, 한국에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이처럼 양국 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교류를 통해 양국이 '상호 이익(mutual benefit)'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2) 크리스토퍼 프란트너 스탠더드지 편집장 북한의 군사력 및 핵무기 개발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가?

답변 2-1) 여승배 부단장 북한의 핵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단정하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답변 2-2) 김진하 연구위원 북한이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는지보다는, 이번 실험을 통해 핵폭발의 위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질문 3) 홍지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미중 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역내 국가 리더들에게 제안할 점이 있다면 말해주길 바란다.

답변 3) 기디온 라흐만 수석 칼럼니스트
미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 등과 같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기존 대한반도 안정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듯이,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면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2013년 10월 1일에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2+2회의'로 확대하여 한미동맹을 심화 ·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 한국, 미국, 중국이 공동으로 동일한 대북제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을 억지.
- '한 · 미 · 중 전략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의 성공적 이행을 유도하고, 나아가 '서울 프로세스'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연계함으로써 동반상승 효과를 추구.
- '스마트 제재'를 통해 북한정권 내 특정집단을 목표로 집중적인 제재를 실행함으로써 북한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고.
-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인식하고 있고, 더는 '혈맹관계'가 아닌 '일반 국가관계'로 인식함에 따라 중국의 점진적인 대북 태도 변화를 관찰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를 추진.

정리
백영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연구원

역사화해의 경험과 동아시아의 미래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부상만큼이나 최근 세계의 주목을 끄는 것이 이 지역의 역사, 영토 문제이다. 이 역사, 영토 문제의 심각성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협력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역사 갈등은 세월이 갈수록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현재의 상황이 이 국가들 간의 상호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면 화해로 나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역사화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역사갈등을 극복하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개회사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사회
케네스 로빈슨 동북아역사재단

주제발표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케네스 로빈슨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영국은 케냐에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사죄하였다. 호주도 원주민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배상하였다. 미국은 2차대전 당시 미국 내 일본인들을 잠재적 위험분자로 보고 수용소에 격리했던 과거에 대해 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했다. 또한 독일은 용기 있는 국가로, 연속성의 부담(The burden of continuity)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킬 정도로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과 관련한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과거사를 청산한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일본만 유일한 예외이다. 태평양전쟁과 그 이전의 침략전쟁들에 대해 아시아의 해방전쟁이라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경우라면 반홀로코스트(anti-holocost)법 적용 대상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독일과 프랑스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로마제국, 기독교 등)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는 젊은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력을 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학술교환을 떠나 언어교육, 직업교육 등 실용적인 목적의 교류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 협력과 교류의 심화, 지도자들의 개인적 친분관계의 형성(콜 수상과 미테랑 대통령, 메르켈 수상과 베를루스코니 대통령), 급기야 최근에는 군사적 협력으로 공동의 군대를 만들게 되었고,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군대가 프랑스에 들어가게 되었다.

독일은 폴란드와도 오랜 적대적 관계를 역사적 유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오데르-나이세 지역은 독일이 통일할 때 영토회복을 포기함으로써 폴란드가 독일 통일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국가들 사이의 공식적인 갈등관계는 개인적인 우호관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 · 프랑스 화해와 독일 · 폴란드 화해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결국 만남은 좋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반대로 만남이 먼저 시작되면 상호이해가 가능해지고, 역사 화해에 이르게 된다. 상징을 만들어 양국 국민에게 협력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만남을 시작해야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다.

케네스 로빈슨 동북아역사재단 초빙교수: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은 장차 여행자로, 혹은 전문인으로,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서로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때 과거 자신이 잃은 상대 국가에 대한 역사를 떠올릴 수 있다면 마음을 열고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역사공부를 할 때 상대 국가의 역사 교과서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른이 되어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양국의 공통 관심 역사인 백제와 고려 불교 등 역사적 갈등과 관계가 적은 문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로 확대해 간다면 반감을 줄어들고 마음은 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959년 구치(Gooch)라는 미국학자는『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의 논문에서 독일 · 프랑스 화해를 "이상한 동침관계(strange bed-fellow)"라고 불렀다. 소련의 위협에 따른 양국 협력을 말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위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양국 지도자들이 협력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양국 대화의 출발, 그리고 청소년 교류의 출발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나? 현재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 · 미 · 일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민들의 기억과 의식 속에 일본의 침략은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침략의 정의를 모르겠다"고 한 것은 일본의 침략과 그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민들의 위협의식의 자극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위협만이 현실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위협은 아니다.

일본 또한 이런 경우엔 위협으로 다가오며, 협력은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상호갈등을 촉발하는 쪽이 오히려 일본이라는 것이다.

질문 1) 김영희 대기자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역사 문화적 유산이 없다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일왕의 초대가 브란트 같은 상징을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일왕이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답변 1) 베른하르트 젤리거 소장 한국과 일본은 도덕 기준, 역사 등에 공통점이 많다. 독일 내에도 동방정책 반대자들 많았다. 당시에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다. 지금 보니, 그것이 화해의 결정적 순간이었다. 정치인들의 상징적 행위가 국민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브란트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을 것을 예상하고 방문한 것이 아니다. 방문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생길 수 있었다.

질문 2) 오스트리아인 일본 학생들은 역사와 공격을 잘 모르더라. 일본에서 미래의 화해가 가능할까?

답변 2) 케네스 로빈슨 동북아역사재단 초빙교수 일본에서는 문화 공유(〈겨울연가〉, 〈월드컵 공동개최〉, 그리고 돌려 말하는 경향)가 활발한 면이 있었다. 현대 일본사회에서 한국에 관해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 학생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교육받고 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하면, 비관적이기보다는 희망적이라고 본다.

질문 3) 현대송 국민대학교 교수 과거사를 고쳐야 미래로 갈 것 아닌가?

답변 3) 베른하르트 젤리거 소장 장담한다. 고치고 난 다음 미래로 가기는 힘들다. 여전히 독일과 폴란드 간에는 오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오해가 협조관계를 지배하지 못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양국관계가 악화되어도 정치인들의 교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됨.
-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학생 교류를 적극화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임.
- 과거를 모두 고치고 화해할 수는 없음. 관용이 필요함.

정리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해외 언론이 보는 박근혜 정부의 과제

중앙일보/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 언론이 보는 박근혜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이 맞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외 언론인들의 눈을 통해 조망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체감하고,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주한 외국 특파원들은 국내 언론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다양하고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이 송고하는 기사는 자국의 외교적 정책결정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일차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세션의 토론 내용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대두될 수 있는 현안이나 문제들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나 대응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
남정호 중앙일보 글로벌협력담당

발표
스티븐 허먼 미국의 소리 동북아 지국장/서울특파원
첸 첸첸 환구시보 논설주간

토론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우치야마 키요유키 일본경제신문 서울 지국장
앤드루 새먼 워싱턴 타임스 서울 특파원

첫 발표자인 **스티브 허먼 미국의 소리 동북아지부 서울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면모에 관하여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재임 당시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박 대통령은 보통 한국의 '철의 여인'으로 묘사되는데, 가까이에서 본 모습은 오히려 소극적인 성격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현안으로 보수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베 내각과의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를 꼽았다. 또한, 한반도 위기상황과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이유가 맞물려 박근혜 정권이 대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외신기자들이 취재할 때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현 정권이 해외 언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교류 또한 많지 않아 외신기자들이 국내 보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외 언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첸 첸첸 환구시보(글로벌 타임스) 논설주간은 이 신문 영문판에 실렸던 논설 시리즈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알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전 정권이 타진한 정책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첸 논설주간은 북한 문제가 한 · 중 관계에서 양날의 칼과 같다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 · 중 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최근 중국에서도 한 · 중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미국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미국의 개입이 심해진다면 중국과 마찰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앤드루 새먼 워싱턴 타임스 서울 특파원은 한국에 14년 동안 산 사람으로서, 한국이 이룬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행의 원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 구도를 꼽았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한국의 사회 풍조 또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점점 다문화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타 인종 또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며, 생활 방식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문제를 언급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보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내 개성의 존중을 역설하였다.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는 외신의 접근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를 예로 들면서, 국가가 외신에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쓸 때 이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리고 환구시보(글로벌 타임스) 논설 시리즈를 언급하며 서구권의 북한 문제 보도가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비해 전문성 있고 폭넓은 논설과 취재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새먼 특파원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어 놀랐다는 평을 하였다. 그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는 싸이, 삼성 등 매우 단편적이지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교육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 교육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고 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전 정권이 타진한 정책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우치야마 키요유키 니혼게이자이 신문 서울 지국장은 현 정권의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첫 번째는 북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신뢰프로세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북한을 상대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 경제 문제에서는 중요한 현안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과 올바른 성장모델 구축, 그리고 '창조 경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꼽았다. 마지막 과제는 지도력 문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 당시 혼란을 빚었던 것을 예로 들며, 여당이 추구하는 것과 야당이 추구하는 것이 충돌할 때 박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앤드루 새먼 특파원은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비리경영과 권력남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은 경제의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사회악을 낳는 양날의 칼이라고 덧붙였다. 우치야마 키요유키 지국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점점 더디어지는 점에 대해서 내수경제를 키우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또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디온 라흐만 칼럼니스트는 지금 한국이 겪는 문제는 이미 서구에서도 익숙한 문제라며, 브랜드 육성과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북 외교정책의 변화 가능성

첸 첸첸 논설주간은 중국의 외교정책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서 어느 정도의 소규모 정책 조정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앤드루 새먼 특파원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한국전쟁 이후로 변하지 않았고, 늘 그래 왔듯 지리적인 이유로 북한에 영향력을 끼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허먼 지국장은 중국의 북한 태도 변화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 박근혜 정권이 북한을 상대로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

질의 응답 시간에는 한국 사회의 사회 이동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앤드루 새먼 기자는 일본 식민통치와 함께 사라진 계급제도가 대기업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대체되면서 한국에서 무일푼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기디온 라흐만 칼럼니스트는 한국 사회의 노령화에 대한 언급을 덧붙였다.

한국 내에 아직도 진보/보수 진영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지와 그것을 박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스티브 허먼 지국장은 항상 진보 · 보수 간의 견해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며, 향후 일본처럼 군소정당이 여럿 등장하면서 여야 간의 견해 차가 좁혀지게 되이라 예측했다. 또한, 우치야마 키요유키 지국장은 한국 내에 여야 대립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많은 대립 구도가 존재한다며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해결 과제와 직결된다고 하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청와대와 해외 언론 간의 원만한 소통과 교류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 사회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정책 모색.
- 대두하는 경제 양극화와 재벌, 대기업 과점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중소기업 장려정책 추진.

정리
박교연 중앙일보 글로벌 협력팀

동북아와 헬싱키 프로세스 모사될 수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헬싱키 프로세스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유럽 35개 국가의 참여 속에 1972년부터 냉전 이후까지 진행된 하나의 다자간 대화 과정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 모델을 동북아시아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논쟁은 뜨거웠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서울프로세스를 두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동북아시아 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가능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 안보가 갖는 함의,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역할과 동북아시아에서의 공헌, 동북아시아 다자 프로세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동북아시아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

가렛 에반스 호주국립대학교 총장 / 前 호주 외교부장관

발제

스타인 퇴니슨 前 오슬로평화연구소 소장
바실 마르마조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G.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우신보 복단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 안보가 동아시아에 갖는 함의

노르웨이 학자인 **스타인 퇴니슨 전 오슬로평화연구소 소장**은 동유럽 체제 전환 과정을 일컫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아시아에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헬싱키 프로세스의 과정 중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다르며, 특히 장기적 효과의 경우 그 예측이 어려움을 경고했다. 둘째, 헬싱키 프로세스에서는 작은 나라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강조했다. 비록 국가의 규모가 작더라도 유럽 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를 아시아에 적용하면 한국은 소국이라 하기에는 너무 커서 오히려 캄보디아 등과 같은 더 작은 나라에서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제안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의 분리를 강조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 확정된 영토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안보문제 논의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 영토분쟁과 역사문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역시 독도 문제를 식민지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헬싱키 프로세스는 최종 완결된 협상이 아닌 계속 지속하는 과정이므로, 동아시아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춰 기존 제도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틀을 만드는 등 유연성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역할과 향후 동북아시아에서의 공헌

바실 마르마조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유럽-대서양 지역 내 다자간 대화와 신뢰 및 안보구축 메커니즘으로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긴장이 고조된 냉전시기에도 동유럽과 서유럽 대화의 창으로서 지역 내 협력과 평화 정착에 도움을 주었음을 강조했다. 물론 유럽안보협력기구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거울삼아 분쟁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인권문제는 동 · 서유럽 간의 인적 교류라는 면에서 중요했고, 이는 소련의 전환과 동유럽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특히 이를 한반도에 적용해보면, 남북한 국민들 간 교류에서 1970~1980년대 유럽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마르마조프 주한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여 2013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으로 향후 동북아시아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아시아 협력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유럽의 경험을 동북아시아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와 동북아시아 신뢰구축 프로세스

유현석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헬싱키 프로세스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현석 이사장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외교 · 안보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외교정책팀의 핵심인사로, 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가지고 동북아시아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유지에는 한계가 있기에 신뢰구축 과정이 필요

물론 헬싱키 프로세스가 협력이 어려운 냉전시대에도 어느 정도 상호대화가 가능한 기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유럽의 냉전시대와 오늘날 남북관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다자주의적 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꼬집으며, 유럽 지역과 다른 맞춤화된 접근(Tailored Approach)을 강조했다.

또 그는 현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인 신뢰구축 프로세스에 대하여 무엇보다 한반도 내 신뢰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 단위의 프로젝트라 설명했다. 사실 북핵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유지에는 한계가 있기에 신뢰구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로운 북한을 만들려는 것이고,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 구상으로 지역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또 한반도 평화를 증진할 수 있어 상호강화적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다자간 협력은 양자 간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겠지만,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에서는 다자간 접근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현 정부와 지난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점은 같지만, 핵 관련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었다는 점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경제적, 사회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북아시아 다자 프로세스와 중국

우신보 푸단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안보란 근본적으로 다자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강력한 다자 프로세스만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문제를 교류협력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국 중심의 안보동맹 약화를 우려하여 그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 안보 협력을 꺼렸는데, 이제 냉전의 잔재를 넘어 보다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안보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신보 교수는 첫째, 다자적 성격을 가졌고 둘째, 과거의 적들을 성공적으로 한 테이블로 모았다는 점에서 6자회담을 높이 평가했다. 비록 지금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 프로세스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하지만 영토분쟁의 경우, 중국은 이미 14개의 이웃국가 중 12개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통해 영토분쟁을 해결하였음을 예로 들며 다자적인 접근보다 양자 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최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궁극적으로 양자적 해결을 추진하겠지만, 다자적 틀의 해결책 모색도 같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모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신보 교수는 인권 관련 요소를

포함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는 먼저 오늘날의 중국에 대해 이미 4억 명 이상의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켰고, 이전과 비교하면 국민의 기본 인권이 많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중국 역시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해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여 자국민들의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적 권한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 범위를 인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좋은 거버넌스로 확대해,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와 상관없이 깨끗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푸단대학교 미국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우 교수는 중 · 미 관계가 점차 다자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중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양자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글로벌 이슈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자적 협력이 양자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군축 문제, 사이버안보 등 양자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은 다자 관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방어 의도에서 선택한 군비 정책이 상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나선의 형태로 군비가 확산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협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군축 어젠다는 양자적으로 논의되어야

동북아시아 다자 프로세스와 미국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는 미국의 경우 그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보다 훨씬 더 다자주의 제도 지원에 협력적이었다고 평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자주의로 인하여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동맹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은 상호 보완적 접근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물론 다자적 안보를 위해서 동맹 관계를 희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자주의 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적극적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G20의 방향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유럽과 소련에 변화를 가져온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 동북아시아 프로세스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이슈는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중국 스스로 소련의 역사적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시사점으로는 협력적 안보의 개념을 꼽았는데, 이는 협력적 안보가 군사적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원칙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며 어떠한 사태 발생의 전후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협력의 개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이러한 점을 역사로부터 학습하여 다음 단계의 다자주의적 안보체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재 국내 체제의 특성이나 국내 정책들이 국제적 협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이 측면에 관해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방어적 전략선택이 군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군축 문제를 위해서는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 중 어떤 쪽을 시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자주의가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지만 양자 대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방어 의도에서 선택한 군비 정책이 상대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어 나선의 형태로 군비가 확산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협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군축 어젠다는 양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냉전 시기 두 축을 이루던 미국과 소련은 공통적으로 핵에 대한 우려 및 그 취약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냉전을 중단시킬 수 있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양극 체제의 상황이 아니므로 협상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핵무기 군축을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정리
신윤희 동아시아재단 간사

새로운 물결과 동아시아의 미래

제주평화연구원

2012년과 2013년 두 해에 걸쳐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정치 리더십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국제 정치, 경제, 안보 지형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짚어보고자 다양한 국가의 주한 대사들이 초청되어, 다양한 시각을 통해 동아시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각국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사회
김용규 한국외교협회 회장

토론
콘스탄틴 브누코브 주한 러시아 대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 대사
존 프라스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조창범 前 오스트리아 대사 / 유엔협회세계연맹 부회장

유럽이 바라본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는 동북아와 동남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 간 협력 프로세스의 출발 과정과 동아시아 협력관계를 과거를 통해 돌아보면 성장 및 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유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유럽 금융 위기에 비교적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해상 분쟁 등 동아시아에서 악재가 발생하면 유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년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이었던 독일은 지속적으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주창해 왔으며, 이는 아시아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만이 아닌 아시아 지역 전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주요국 및 미국, 러시아에서의 리더십 교체에 관하여 마파엘 대사는 지도체제 변화 자체가 아닌 변화가 수반하는 영향력이 지도자의 임기 동안 지속될 정책의 연속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파엘

대사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시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북핵위기 등 작금의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정책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통일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 과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부흥과 인도의 대 아시아 정책

비쉬누 프라카쉬 주한 인도 대사는 동아시아 지역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아세안+6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인도 · 태평양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카쉬 대사는 동아시아 혹은 인도 · 태평양 지역 내에 전 세계 인구의 50퍼센트가 살고 있음을 명시하면서, 특히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서구의 노동 인구와는 반대로 인도의 평균 노동인구 연령은 29세(2020년 기준)로 세계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함을 암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심축의 이동도 수반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30년에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세계 경제대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이를 대변한다.

프라카쉬 대사는 동아시아가 직면한 역사문제 및 지역 분쟁으로 말미암는 어려움도 언급하였다. 그런데도 1991년 이래 동방정책을 표방해온 인도는 무역협정 체결 등 한국, 일본, 호주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는 많은 협력의 가능성과 경쟁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아세안 주도하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긴밀한 경제 협력을 끌어내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통한 정치 안보적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온탕, 정치적으로는 냉탕을 오가는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를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지역 발전과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등 서양 국가들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시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핵위기 등 작금의 한반도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정책 대응

동아시아 지역 내 러시아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875억 달러를 넘었고, 한국과의 교역, 인도 및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관계도 지속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 통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전했다. 지역 통합에 있어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는 국가 간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누코프 대사는 역내 안보 협력 강화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가 해법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이른바 동아시아 트로이카인 한국 · 중국 · 일본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브누코프 대사는 러시아의 안보리 2087호 및 2094호 유엔(UN) 결의안 지지를 확인하고, 러시아 정부는 대북 접촉을 통해 북한 측에 도발 및 핵무기 개발 중단, 유엔 결의안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핵사찰 수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역내 군비경쟁 발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 정부의 기본 입장을 시사하는 것이다. 브누코프 대사는 이에 덧붙여 현재의 북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6자회담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안건 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북한의 모습을 통해 6자회담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브누코프 대사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 낭비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한편, 브누코프 대사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와 남,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경제프로젝트의 중단 사례를 들면서, 향후 남북 화해 및 관계 개선은 러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 또한 중대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프로세스, 역내 경제적 안정화 및 북한의 개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현재의 북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6자회담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안건 상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

동아시아 정치 변동이 갖는 함의와 당면 과제

동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관한 가장 큰 우려는 구조적인 힘의 균형 변화이다. **조창범 전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중국과 인도의 부상, 최근 중국의 핵심 이익 추구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향후 입지와 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온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내에서의 독보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를 향한 의지와 약속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조창범 대사는 말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내 지위 약화가 역내 힘의 분산 현상을 가져오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이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준 주요 요소라는 점이다.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 분쟁 위험과 안보 딜레마에 기반을 둔 군비경쟁현상,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 등 많은 요소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창범 대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세 가지로 압축하였는데, 우선 작금의 힘의 균형 변화를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충돌은 상호 전략적 불신에서 비롯되는바, 미 · 중 정상회담을 양국의 미래 관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범 대사는 또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사례로 들면서 안보 대화 등 제도적인 다자적 접근을 강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 국가 간에 상호 협력하고 대화를 촉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공통 이해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내에서의 독보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미국이 아시아를 향한 의지와 약속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

아시아 패러독스와 극복 방안

존 프라스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호 의존성을 통한 공동 번영, 다른 하나는 안보위기 및 영토분쟁 심화이다. 이러한 난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사문제, 국가 간 불신, 민족주의가 승리할 것인지, 경제협력과 통합, 공동 번영이 승리할 것인지가 요점이다.

프라스티오 대사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결과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아시아 강대국 중국은 군사력 재정비를 통해 역내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양국 간의 관계 발전 방향에 따라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양국 간 긴장감 심화는 아시아의 양분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스티오 대사는 아시아 내에서 미국이 보유한 영향력을 통해 중국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여전히 자신이 중진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중진국이 아닌, 새로운 질서 재편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해가는 국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은 대국이지만 소프트파워의 취약성, 여전히 낮은 국가 매력도, 고령화, 출산율 저조, 부패 확대, 경제 경착륙 가능성, 불평등 문제, 빈부 문제 등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프라스티오 대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자기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지속적인 개최로 미국 · 중국 양국만이 주인이 아닌 관련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아시아 · 태평양의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외교부

동북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지역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에너지 주요 생산 · 수출국인 러시아가 위치한 동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에너지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세션에서는 셰일가스의 부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변화와 역내 주요국들의 에너지 분야 정책을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사회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前 외교부 제 2차관

기조연설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발표 및 토론
미칼 하버그 아시아정책연구소 교수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백근욱 옥스포드대학교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쉬 위헤 주간 Upstream紙 에너지전문 애널리스트

미칼 하버그 아시아정책연구소 교수: 최근 수압파쇄 및 수평시추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의 석유가스 산업이 엄청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미 시추가 끝난 지역도 재발굴이 가능해지면서, 천연가스 생산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으로 일일 1,200만 배럴을 수입해왔으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 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량에 필적할 만큼 가능해진 전대미문의 상황이 되었다.

한편, 미국은 경기침체로 수요가 정체되어 현재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40퍼센트가 감소하였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부터는 북미로부터 셰일가스 수입이 가능해지며 미국은 이제 에너지 고갈이 아닌 에너지 풍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일일 2.5비시에프(bcf)이었던 가스 생산이 10배가량 엄청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며, 생산량은 4~5년 전에 비해 30~40퍼센트 증가하였다. 미국은 이제는 에너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미 두 개의 LNG 수출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스 수출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에너지 환경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우선, 동북아시아 지역은 북미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으며, 공급이 풍부해지고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잉여 생산이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 압박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고 균형 잡힌 에너지 밸런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변화로 LNG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문제점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걸프 지역 등 주요 석유수출국들의 석유매장량 보유를 위해 안보 정책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에너지 풍요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고수될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페르시아 등 중동의 안보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미국이 이 지역의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태도 변화가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질문 1)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수압파쇄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자원이 필요하다. 이는 물 안보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 가능한 셰일가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답변 1) 미칼 하버그 교수 수압파쇄는 수백만 톤의 물이 고압으로 주입되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 가용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셰일가스 개발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질문 2) 히로이 중동지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데,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변 2) 미칼 하버그 교수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이미 고착화된 문제이다. 중동은 1,700만 톤의 원유가 매일 생산되며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 역시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에너지 안보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가격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동은 여전히 상당한 에너지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으므로,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일본은 2년 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전면 폐쇄를 선언하여 일본 에너지 안보에서 전력난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원전 대신 천연가스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아직까지 심각한 전력사고는 피할 수 있었으나, LNG의 수입 확대로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자립도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동으로부터 LNG 수입 의존도는 더욱 증가했다. 올해 일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1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며, 이는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일본 경제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원전 폐쇄로 야기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 안전을 강화시켜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원자력 규제기관을 새로 설립하고 원전 안전성을 제고시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취합하고 있다. 원전뿐만 아니라 자원 부국에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 확보에 힘쓰며 최적의 에너지 믹스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전 세계 LNG 수입은 2010년 220만 톤에서 2035년까지 467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가스 수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국가들은 지역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며, 에너지 수입국의 다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비록 세계에서는 경쟁국이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에너지 수급 안보 보안, 러시아와 함께 지역 플레이어로서 활동, 에너지 보존 노력, 대체에너지 개발에서의 협력, 원자력 관련 3S[원자력 안전(Safety), 핵 안보(Security), 핵 비확산(Safeguards for non-proliferation)] 강화 등이 이러한 부분이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북미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으며, 공급이 풍부해지고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것

질문 1)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셰일가스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 일본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셰일가스가 일본의 에너지 믹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답변 1) 켄 코야마 이사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카타르 LNG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카타르는 주로 미국으로 LNG를 수출해 왔으나, 미국의 에너지 생산 증가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것이 셰일가스로 인한 일본의 혜택 사례로 생각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뿐만 아니라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LNG의 안정적인 공급이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셰일가스는 에너지 가격 시스템 측면에서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전환해 가스 가격 프리미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쉬 위혜 주간 Upstream誌 에너지전문 애널리스트: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지난 40여 년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석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천연가스를 강조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고려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노력 중이다.

중국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은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석탄 비중이 약 52.6퍼센트로 다소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동시에 타 에너지원 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는 에너지 믹스에서 2010년 4.5퍼센트를 차지하지만, 2020년까지 10퍼센트로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은 천연가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 LNG 터미널 건설 및 LNG 수입계약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비전통에너지 확보를 위해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의 가스 소비는 연간 200억 m^3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 수입은 연간 100억 m^3씩 증가하고 있다. 중국 가스 수입 의존도는 50퍼센트이며, 가스 가격 개혁이 가장 중요한 논의 사항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자원의 활용과 함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

질문 1)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중국은 석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여전히 석탄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전망되는 반면, 동시에 비전통에너지 소비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에너지원 확보 정책이 양분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1) 쉬 위혜 애널리스트 중국의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핵심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다각화시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국영회사들의 해외 상류 부문에서의 자산 확보 및 진출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으며, 둘째로 장기적인 공급 거래 방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동부 및 서부 쪽에서 각각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및 미얀마에서 가스 수송관을 연결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방법은 LNG를 수입하는 것이며, 현재 15개 LNG 터미널을 연안 지역에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호주, 카타르, 중동 지역으로부터 가스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석탄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기후변화, 국제적인 환경문제로 인해 석탄 소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해 유도하고 있다.

백근욱 옥스퍼드대학교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재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프로젝트 등 중국 · 러시아 간 석유가스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협력은 한국과 일본에도 동시베리아의 가스가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 · 러시아 가스협정을 통해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서 38비시엠(bcm)의 가스가 중국으로 수출될 전망이며, 연말까지 가격 협정이 마무리될 상황이다. 재미있는 점은 러시아가 최근 들어 가스 수출 관련 협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국제 상황의 빠른 변화가 러시아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대규모 가스 유입 경쟁 등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스를 공급하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이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동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가스전 발견으로 가스 수출 경쟁 등이 제안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자원의 활용과 함께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질문 1)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남-북-러 가스수송관 및 러-중-한의 가스수송관 건설 등의 프로젝트 들이 현재로는 교착상태에 있다. 정치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북미 셰일가스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 백근욱 선임연구원 가스수송관 연결에서 비용이나 기술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으나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협력 문제가 남아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가스 인프라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가스 부문에서 수입과 관련해서 한국 · 일본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협력이 다소 부진하다. 중국은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최대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러시아에 선수금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스 수입이 체결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LNG 수입원을 다변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 러시아 간 가스관 협력에 있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 · 러시아 가스 협력으로 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이득이 될 수 있다.

답변 2)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 LNG뿐만 아니라 PNG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한국까지 가스 수송관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북한 혹은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의 선정 이전에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문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정리
김유리 외교부 글로벌에너지 협력센터 전문연구원

박근혜 정부,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핵심 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압박과 대화유도를 병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개성공단은 상황의 반전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의 폐쇄 국면으로 치달았다. 본 세션에서는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입안자 중 한 명인 청와대 통일비서관의 발제를 듣고 이 정책의 비전과 실행방안에 관해 토의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무엇인가?
- 전임 행정부들의 대북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 이 정책은 어떻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 한반도 주변의 주요 4대 강국은 이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발표자
홍용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

토론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존 딜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추진과제

홍용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은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하며 '왜 남북한 간의 신뢰가 필요한가'가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에게 보상해도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한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성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신뢰프로세스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신뢰프로세스는 큰 틀의 외교 전략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전이라고 설명하며 신뢰 외교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용표 비서관은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은 바로 '상호신뢰'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는 통일에 대한 거대한 담론만 논의했지,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서툴렀다고 말하면서,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이전 정권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홍용표 비서관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일 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북한의 잘못된 점을 비난하고, 잘된 점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신뢰'는 남북한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신뢰, 국제관계에서의 신뢰가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이 투명성과 중립성을 포용함으로써 국민에게서 신뢰와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서 평화는 '건강한' 평화라고 할 수 있다. 홍용표 비서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건강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신뢰를 충분히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하며 그래야지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이 계속 진화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남북한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가?

홍용표 비서관은 첫 번째로,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한이 이전에 체결했던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화 지향, 상호 존중 등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은 일부터 실행해 나가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 남북한 간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균형에 기초한 신뢰를 쌓아나가며 안보 혹은 교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홍용표 비서관은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며, 안보와 교류협력을 균형 잡히게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은 한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며, 국제협력 및 남북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계속 도발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을 하며 북한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의 '신뢰 쌓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발에 대해선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하는 것도 바로 신뢰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억지정책(Credible Deterrence)도 하나의 신뢰프로세스며, 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신뢰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뢰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유무와는 관계없으며, 비핵화를 위한 대화 단계 전부가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신뢰프로세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홍용표 비서관이 말한 신뢰프로세스는 충분히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문제 인식을 충분히 수용하지만,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드러난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환경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는 신뢰프로세스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f-then'이라는 조건부 대북정책을 많이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보와 대화협력을 차별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함께 가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기보다는 안보와 대화협력이 공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점을 표명했다. 또한, 김근식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칙' 아니라 '고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러한 '고집'은 남북 간의 '불통'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있었던 4월 25일의 개성공단 철수 선포(4월 25일 대화 제의 말미에 북이 거부하면 개성공단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덧붙여 최후통첩의 의미를 담은 것)는 일종의 '고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토론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비서관은 신뢰프로세스는 동북아시아 협력 구상과 공존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하며,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if-then'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중심 내용이며,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문제 인식을 충분히 수용하지만,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드러난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환경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것이 바로 신뢰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홍용표 비서관은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안보와 대화협력이 같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개성공단 문제도 신뢰프로세스가 현재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 접촉을 계속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4월 25일 제의내용은 식량, 의료, 인원 안전 등 개성의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현 정부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출범 초기인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남북한 간의 '신뢰'의 의미

최진욱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단기간에 남북한 간의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신뢰'는 단순한 정책수단이 아니라, 이러한 수단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뢰'는 스포츠에서 기술을 뒷받침하는 체력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남북한 간의 신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관계의 신뢰, 남한 내부의 신뢰도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화채널을 열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의 아이템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안보 상황이 작년 대선 기간 때보다 훨씬 불안정한 것이 대북정책 추진의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비서관은 사회적 자본이 충분해야 국가 간의 신뢰가 높아지듯이, 신뢰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것은 '건강한' 평화와 맞닿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핵화와 대화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신뢰프로세스의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신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화 자체가 당근은 아니지만, 대화 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학술 교류나 기업 간의 교류도 필요한데, 상호 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 내부적으로도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상황을 살펴볼 때,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토론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비서관은 신뢰가 바로 사람과의 소통과 대화의 핵심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며,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국내 차원에서 '국내 신뢰'도 쌓을 필요가 있으며, 현 정부는

민간차원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현재의 남북 상황은 일단 당국 간의 대화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민간차원의 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도 처음 시작할 때 당국 간의 합의 하에 민간기업이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대화협력의 선후관계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뢰프로세스가 힘든 점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쌓기 어려운 북한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길들인다는 현 정부의 생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점을 표명했다.

박철희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선후 관계에 대해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한 간의 대칭적인 상호주의와 현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같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또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가 많이 있는데, 둘 사이에 체결된 논의를 먼저 실행할 것인지, 국제관계 속에서 체결된 논의를 먼저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에 대해 홍용표 비서관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하기 어려운 상대지만, 현 정부의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대화와 신뢰의 필요성을 북한에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약속과 국제 간의 약속은 서로 지키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렵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말했다.

정리
신현석 동아시아재단 글로벌 아시아 펠로우

G2의 시대와 동아시아 군비경쟁

동아시아재단

미국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군사비 지출을 감축한 반면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국방예산을 확충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수십 년간 계속되면서 향후 힘의 분포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지역 내에 의혹이 확산됐다.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상분쟁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역량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고를 확충하려 드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또한 상당한 군사력 향상을 이루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이다. 뒤를 잇는 10개 국의 지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2011년 의결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으로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전체 정부부처에 예산지출상한이 생겼다. 바로 시퀘스터(sequester, 예산 자동 삭감)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심각성과 역내 평화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

나얀 찬다 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센터 출판담당 국장

발표 및 토론

사투 리마예 이스트웨스트센터 워싱턴 지부 소장
판젠창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 중국국방대학교 교수
존 스웬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교수
최강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동아시아 군비 경쟁, 그 실체는?

토론에 앞서 사회자의 변을 통해, **나얀 찬다 박사(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센터 출판담당 국장)**는 현재의 동아시아 군비경쟁 현상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역사적 배경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G2라는 초강대국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얀 찬다 박사는 세계 10대 무기수입국 중 9개 나라가 아시아 국가라고 소개하면서, 그 중 중국은 제2위의 무기수입국이자 주요 5대 무기 수출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SU35 전투기 100대와 원자력 잠수함을 수입한 것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현상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사투 리마예 이스트웨스트센터 워싱턴 지부 소장**은 현재의 군비 증강 현상을 군 현대화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 현대화가 육상 기반이 아닌 해군력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인 **판젠창 중국국방대학교 교수**는 앞서 제기된

중국의 군비 확산에 대해 반박했다. 판젠창 교수는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며, 미 해군력의 60퍼센트가 동아시아 지역에 파견될 계획이라는 점을 들어 역내 군비 경쟁의 주요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우방국인 일본의 신무기 개발을 예로 들면서 중국 또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양 분쟁, 사이버 및 우주 전쟁에 대한 우려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 확충 노력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최강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또한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은 실질적으로 군 현대화 과정의 일부로 해석했다. 중국, 일본, 한국 모두 이러한 기류에 맞춰 필요한 행동을 이어나가는 것이며, 단지 국가 상호 간의 신뢰 결핍이 공격을 강조하는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비 삭감,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은?

미국연방정부의 시퀘스터(sequester, 예산 자동 삭감) 발동에 따른 미 국방비 대폭 삭감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의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비 예산 축소로 미국의 해당 지역 방어 태세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사투 리마예 소장은 올 3월 시퀘스터를 통한 국방비 약 500억 달러 삭감 명령은 더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의 시작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군 인건비, 복지혜택, 병력 규모 조정 등 작전 동원 병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투 리마예 소장은 이러한 조정의 범위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강 부장 또한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가 한반도 방어에 미칠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예산 감축 노력의 하나로 한반도 방어를 위한 국방비를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안보 불안 심리가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한반도 내 전략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최강 부장은 한국의 핵개발 논의는 비용 차원에서도 성립할 수 없는 방법이며, 최근 60퍼센트 이상의 한국 국민이 한반도 내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찬성했다는 설문조사는 핵무기 재도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 판젠창 교수는 핵무기 개발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맨발인 사람은 고급 신발을 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 한국이 이제껏 일궈낸 경제 발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젠창 교수는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인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 축소에 비례하여 중국의 국방비 투입이 줄어들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국의 국방정책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특정 국가의 정책에

좌지우지되는 성격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억지력 약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역내 안보 불안, 여기에 국내 정치 요소가 맞물리면서 역내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존 스웬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는 아베 정부 출범과 함께 11년 만에 국방 예산을 0.8퍼센트 증액한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북한과 같은 외부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역동적인 방어라는 기치 아래 정보, 감시, 수색 부문 등에서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 측면에서 기존에 보유한 군함과 잠수함들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존 스웬슨 라이트 교수는 이러한 변화는 현 아베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을 두기 위한 과정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역사 및 영토문제로 인한 주변국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위협적으로 비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 · 일본 간의 대립에 대한 일본의 대응책에 관한 질문에 존 스웬슨 라이트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투 리마예 소장은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더는 없으며,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는 철저히 미일안보조약 제5조(Article 5)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유학생 중 55퍼센트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의 학생들인 점을 들어, 미국은 해당 지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도 건설적인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분쟁이 현실화됐을 때 한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최강 부장은 한국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고, 판젠창 교수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시아인들이 일본에 갖는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일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서구 사회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정서 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 과열, 상호 신뢰가 열쇠

미국의 국방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사투 리마예 소장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 미군 주둔과 확장 억지 개념은 알래스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안보 개념으로, 미국 본토 국민의 안보 확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중국 봉쇄가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동아시아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정세 변화에 맞추어 동맹 간 국방 부문의 고통 분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도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젠창 교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당시 B52 참가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대결적 태도는 역내 핵 문제 해결, 긴장 완화, 신뢰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젠창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군사력 표출은 북한의 핵 및 전면전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자리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판젠창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이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핵기기에 불과하며, 설령 전면전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최강 부장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북한의 간헐적 도발에 대비하는 자위력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국민에 대한 안보 확신이라면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이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최강 부장은 또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한국은 북한과 안정적 협력적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이 위협이 되는 이유는 핵무기 보유 여부가 아니라 핵 역량을 계속하여 늘려가고 있는 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탓하기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 · 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투명한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잠수함 및 위성 방어능력 강화노력에 대해 주변 국가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판젠창 교수는 중국 정부는 백서를 통해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정보 보호를 예로 들면서 중국 또한 국방 정책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존의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 발생 시 주변 국가들의 대응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이라고 주장했다.

정리
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동아시아 근대와 지역 그리고 새로운 리더

동북아역사재단

최근 동아시아에 관한 논의는 담론 차원을 넘어 지역공동체, 평화와 안정의 대상으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본 세션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근 · 현대로 설정하고 동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의하고자 했다. 먼저 한 · 중 · 일 3국이 주장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인식을 논의하고, 둘째로 과거 진행된 조선, 청, 일본의 사절단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21세기 현재의 시각에서 한 · 중 · 일 3국의 공통의 경험, 기억의 재조명을 통해 새로운 리더들의 역할과 구상을 논의하였다.

사회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발표
가와무라 미나토 호세이대학교 교수
쑹청유 베이징대학교 교수
배성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가와무라 미나토 호세이대학교 교수: 동아시아 지역 인식은 한국 · 중국 ·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동아시아 전체 발전을 생각하는 열린 사고를 지닌 차세대 지도자가 각 분야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쑹청유 베이징대학교 교수: 중국 근대 동아시아 연대 인식을 언급한 대표적인 인물로 궈충타오, 리훙장, 리따쟈오, 량치차오, 쑨원이 있고, 그중 량치차오와 쑨원의 사상은 현재에도 계승 발전할 시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문화론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인식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과 영토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의 공동 문화 인식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배성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9세기부터 아시아 연대가 제기되었으나,

실제 동아시아 간의 갈등은 없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국가별 인종적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와 결합하는 가운데 생성된 문화적 배타주의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인종적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새로운 공동체 설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최근 동아시아 공동체론 가운데 한국 · 중국 · 일본이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130년 전인 1880년 한국에서 일본에 파견된 시찰단과 개화파 지식인의 활동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당시 김홍집, 어윤중 등은 청나라 사신과 일본 관료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아시아 연대의식을 접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던 청국공사관 참찬관인 황쭌셴은 『조선책략』을 전해주며 조선은 앞으로 일본과 중국, 미국, 유럽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러시아에 대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19세기 말에 이미 형성된 아시아 연대의식은 비록 일본의 팽창주의로 인해 실패했지만, 앞으로 다시 살려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질문 1) 김현철 연구위원 일본의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반한 정서가 심각한데, 우익들이 원래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다. 재특회의 형성 배경에 일본의 아시아주의 혹은 민족주의 등의 배경이 있는가?

답변 1) 가와무라 미나토 교수 없다. 신주쿠 등 한인 식당 등의 상업활동에 반대하는 재특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익들의 혐한류를 반영한 것으로 사상적 배경과 관계없이 단순한 것이다.

질문 2) 김현철 연구위원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주의는 융합 가능한가?

답변 2) 쑹청유 교수 불가능하다.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식민 지배에서 확인되듯이 실패했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은 다른 나라를 침략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중국에서 쑨원이 주장한 아시아 연대는 패권주의가 아닌 인의도덕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다.

질문 3) 쑹청유 교수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답변 3) 배성준 연구위원 종족과 관련해서는 민족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종은 생물학적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모두 근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주의 국민국가와 연결돼 문화주의 배타주의를 생성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질문 4)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번 세션은 대체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다. 동아시아 연대의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상호이해를 배양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도 지금도 청년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청년들 또한 유학생들의 역할은?

답변 4-1) 쑹청유 교수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는데,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다. 따라서 강의할 때 매우 조심한다. 즉 세계에서 중국을 봐야지,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지 않는다. 세계의 입장에서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답변 4-2) 가와무라 미나토 교수 청소년들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면, 내가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최근 하시모토 도오루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역사관을 갖고 있어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40대로, 이 세대의 역사의식이 부족하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가르치지만, 근대와 현대는 교육하지 않고, 일본사도 잘 가르치지 않는다. 게다가 학생들도 세계사를 선택해서 일본사를 안 배우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하시모토 도오루 같은 정치가가 나온다. 앞으로

일본의 근현대사를 더 잘 가르쳐야 한다. 교육자로서 매우 반성하고 있다.

답변 4-3) 배성준 연구위원 한국 젊은이들의 상을 고민해야 한다. 즉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동아시아는 비균형 비대칭적이다. 아시아 연대론을 얘기하면, 중국에서의 아시아 연대론은 아시아 맹주로서 나온 면이 있다. 일본은 방해되지 않은 수준에서 아시아 연대론을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피해받지 않는 차원에서 아시아 연대론을 생각한다. 즉 내부적으로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답변 4-4) 김현철 연구위원 19세기 청년들의 고민을 21세기 청년들도 해야 한다. 최근 아시아 캠퍼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 · 중 · 일 3국이 상대국 나라에 가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역사 공부를 확대해야 하며, 실례로 동아시아 역사 과목 등이 있다. 학습하는 데 부담도 있고, 시험공부도 어렵지만, 앞으로 한 · 중 · 일의 역사를 많이 가르쳐야 하고, 즐겁게 배우게 해야 한다. 공부 부담이 아니라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해야 한다. 결국, 한 · 중 · 일 3국 공동의 교육이 인증되어야 한다. 즉, 서로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될 수 있게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 열린 사고의 리더들이 나올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민 · 관 · 학 연대, 한 · 중 · 일 문화교류의 활성화.
-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 국제적 시각으로 동아시아 역사 및 세계사를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한 · 중 · 일 3국의 공동교육이 인증되는 공동 대학 설립, 미래지향적인 리더 육성.
- 한 · 중 · 일 3국의 협력은 먼저 상호 이해 제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문화적 배타주의를 극복해야 함.
- 이를 위해 아시아 공동의 문화 인식을 위한 지식인, 일반인, 청소년 등 교류 활성화가 필요.
- 중국의 경우, 세계사 시간에 자국 중심이 아닌 국제적 시각에서 교육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일본 근현대사 교육 강화 필요.
-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역사 등 한 · 중 · 일 역사를 즐겁게 배우도록 해야 함.
- 향후 동아시아의 전체 발전을 고민하는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한 · 중 · 일 3국 공동의 교육이 인증되는 공동 대학 설립 제안.

정리
우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동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 비전

대한국제법학회

2차대전이 종식된 지 50년도 더 지났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 부족으로 인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갈등과 불신이 잔재해 있다. 군대 위안부 및 강제 징용자 피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국가들도 관련되어 있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또한, 독도,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등은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가 갈등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역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명해 봄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평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개회사
최승환 대한국제법학회장

축사
강정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사회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토론
이호철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 국제정치학회 회장
현대송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만들기: 권력, 경제 그리고 정체성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 관하여 성공적 지역주의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바, 로즈만 교수가 제시한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알 수 있다. 유럽의 통합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아시아는 반대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지역 정체성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의 과거와 현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을 지역 정체성 문제의 고려사항으로 볼 것인가도 문제이다. 특히 일본,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구도가 있으나, 일본 · 중국 · 한국은 역사문제, 영토분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3국 간 평화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국제관계는 자유주의 · 사실주의 ·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자는 경제협력이 정치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지만, 사실주의자들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에만 협력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구성주의자들은 헤게모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주의적 관점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주의적 접근 중 힘의 관점을 보면, 냉전의 잔재가 아직 동아시아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실체를 갖추기 어렵다. 미국은 예전과 같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주장하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일본의 헌법개정 시도,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 및 군사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 아세안(ASEAN)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이 만든 지역 공동체는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영토문제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국가 간의 영토분쟁에 원인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영토문제가 남아 있는 국가들, 특히 강대국 간에 안보 및 군사 협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경제 분야의 진전을 이유로 자유주의자들은 동아시아 협력의 성과가 향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 통합도 달성되고 있다.

여전히 동아시아 3강의 경제적 대립과 경쟁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3"를 통해 미국을 배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 이념에 기반을 둔 "아세안+6"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는 전략적 경제 협상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 TPP를 통한 미국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는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강대국이 패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지역적 경제협력 체제 구축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독자적 자구책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의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독도 문제의 경우 역사적 측면과 함께 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양자 간의 관련성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의미

국제법과 독도: 역사와 미래적 관점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교 교수: 한일 간의 문제는 역사문제이면서 안보문제이고,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독도 문제의 경우 역사적 측면과 함께 법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양자 간의 관련성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현대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고고학적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지만, 역사문제의 접근법과 법적 문제가 다르다. 오늘날의 문제는 1800년대 후반 이후 근현대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독도 문제의 발단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통한 주권 상실이므로, 당시의 제국주의적인 법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시제법 이론에 따를 경우, 한편으로는 일본의 한국 및 독도 점령의 적법성이 주장될 수 있으나, 적법성이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병대 활동이 교전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일본은 의병활동이 반란행위라고 주장한다.

어업 관리 부분에서도 1904년 9월 기업가인 나카이 요자보로가 일본의 관리하에서 독도에서 바다표범 수렵과 관련된 사업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다. 또한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독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한일합병 전 상황은 국제법하에서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을 근거로, 오늘날 일본은 1905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1945년 이후 평화협정을 맺을 당시 한국은 주권이 없는 상태였고,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프란시스코조약 이후 국제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이 조약 당시 일본의 현재 영토와 유사한 지도가 형성되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영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1951년 9월까지 미국 정부는 문서에 분명 독도가 일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려 했으나, 조약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필요에 따라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과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 7함대의 개입을 예상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독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독도 문제를 실효적 지배 및 통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리 외교, 에너지와 환경 연구,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론

이호철 인천대학교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국제정치학회가 논의 중인 주제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토론자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에 대해 발제자의 주장과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평화공동체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바, 아세안 회의가 매년 이루어지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점차 커지고 있어 아시아판 IMF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질문을 한다.

(1) (이왕휘 교수에게)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비관적이라면, 어떤 것을 해야지만 이런 비관적인 것들이 없어질 것인가? (2) (알렉시스 더든 교수에게) 양질의 자료를 보여주었으나, 정치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한다. 한일 영토분쟁에서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는 당시 국제 정치의 배경에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국제정치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송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더든 교수의 발표가 법적인 측면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법적 · 역사적 · 정치적인 모든 요소를 통찰하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담은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든 교수는 적법성이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에 한국이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일본의 전리품으로 인정해주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언급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면서 당시 상황의 시급성을 근거로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든 교수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을 토대로 독도 문제를 동북아 평화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사견을 제시한다.

1) 논문의 전제인 독도 문제가 법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한국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 문제를 일으키는 근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2)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시각이 의심스러우며, 이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 다양한바, 미국의 개입이 실제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독도가 그린에너지 과학탐사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지역 분쟁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여야 할 것

이러한 사용이 일본을 더욱 자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좌장: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평화는 가장 궁극적이 가치이다. 신속하게 이 평화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의 여건이 형성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 한국은 첫째, 분단국가라는 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남아 있고, 둘째, 역사적인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평화는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면, 독도 문제는 일본과 한국의 견해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한국에게는 독도는 지역 분쟁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1) 존 스웬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로비 과정의 특성에 대해 설명 요청.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이루어졌던 당시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압력을 받고 있었는지, 일본의 이해를 바라는 행동과 오키나와를 빼앗는 상반된 상황이 있었는데, 독도가 당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지,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

질문 2) 오병선 독도의 법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식민지법과 현재의 국제법의 차이가 그 원인인 것 같은데, 오늘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법인지에 대한 의견 요청.

질문 3) 더든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갈등관계가 있을 때는 주권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면서 1952년 4월에 주권을 회복했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1948년에 주권을 회복하였음. 아울러 일본은 스카핀 677호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고, 독립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완벽하게 한국 것이 된 것으로 봄.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 요청.

답변) 이왕휘 교수-이호철 교수 토론에 대한 답변 미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임. 그 이유는 미국이 아직도 유일한 초강대국이기 때문. 중국이 비록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도상국에 불과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한 바 있음. 미국의 개입은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은 아직 그에 대응할 능력이 없음.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진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답변) 알렉시스 더든 교수-이호철 교수 토론에 대한 답변 정치적 내용에 대한 부재를 지적했지만, 과거로 넘어간다면 결국 문제는 역사적 부분과 법률적 부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음. 스카핀 677호의 경우, 정보의 공유가 부족했던 점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성에 있어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 같음. 유엔의 입장에서는 피스 파크(peace park)를 선호하지만, 동북아시아 3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

정리
김태길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동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의 과제와 쟁점

대한국제법학회

동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의 비전을 논의하면서 지역평화공동체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역사적 책임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다루며 랭카셔 대학교의 조우 커위엔 교수가 국제법적 쟁점을,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법적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

사회
김부찬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조우 커위엔 영국 랭카셔대학교 교수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토론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테츄야 토요다 아키타 국제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의 해양영토분쟁과 협력: 최근의 발전 동향과 미래 예측

조우 커위엔 영국 랭커셔대학교 교수: 유엔해양법 협약상 바다는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해양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국 · 한국 · 베트남 어업협정의 목적은 어업 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것이다. 쌍무 간의 문제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해양 공동개발: 분쟁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고, 해양 환경보호는 전반적으로 국제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유엔환경계획(UNEP)하에 지역 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해양 안전보호: 항행과 관련하여 결국 해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국제해적법 · SUA Convention 등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법상 노력이 있었다. 지역 협정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비회원국가에서도 협정이 열리기도 하였다. 정부 간의 다양한 협력과 국제기구, 민간기구 등이 있어 해적의 법적 정의를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해양 경계설정의 문제: 바이두만 협정(베트남-중국)은 최초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계 협정이고, 관련 양국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경계로, 단 하나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 대륙붕 확장 주장: 갈등의 소재가 크다. 베트남-말레이시아 · 중국-한국의 대륙붕 확장 요구와 일본의 반대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의 소재가 된다.

• 도서 영유권 문제: 섬 자체는 작지만, 해양 경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해양자원의 문제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센카쿠/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난사군도, 독도, 발롱기섬)

• 분쟁 해결: 대만-중국, LOS협정 298조 규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만 봐도 중국은 제3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의 추세가 국제사법제도를 활용하면서 해양 분쟁절차를 사용한다. 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법에는 한계가 있어 여러 보완조치가 필요하고, 나아가 국가들의 긍정적인 준수 의지가 필요하다.

군함의 무해통항(無害通航)과 관련하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국가가 반발한 바 있으며, 국제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국제법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가?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상설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기능을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 그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 65조에 따르면, '법적인 질문'에 대해서만 권고적 의견을 낼 수 있다.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서는 권고적 관할권 행사를 거부한 바 있다. '법적인 질문'에 대해 사하라 케이스에서처럼 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는 많은 국가가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바뀌면서 65조 ICJ 규정은 유엔 헌장 14조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이는 기존 PCIJ의 규정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규정상 국가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없다.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ICJ의 사법적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920년 호주 동부 카렐리야 사건에서 PCIJ는 한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PCIJ는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유엔 체제에서 권고적 기능이 ICJ의 역할로서 중요하지만, 유엔 자체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권고적 기능을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각국이 권고적 기능을 활용하고자 원한다면 현재는 가능한 상태이다. 유엔에서 재판소의 권고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테츄야 토요다 아키타국제대학교 교수: 조우 커위엔 교수는 국제법이 도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독도 분쟁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영토분쟁은 국제 분쟁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질문은 이것이 '국익의 문제인가?'라는 것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외교관은 직책상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바, 외교관은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김두영 사무차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권고적 기능이 분쟁 해결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고, 원활한 분쟁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유엔 가입 시, 한 국가가 유보하고 유엔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보한 국가는 유엔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권고적 의견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적 기능은 영토분쟁의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두영 사무차장의 발표는 참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창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은 3국과 해안경계선의 문제가 있다. 북한과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의 문제가 있고, 중국과는 분쟁 중이나 섬이 없어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견 차이가 있고, 일본과는 동해와 동중국해의 문제가 있는바, 독도 문제와 대륙붕 설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어업협정을 맺어 세 가지 쌍무협정을 체결하였다.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질문 1) 이창위 교수 중국은 다자간 어업협정 없이 대여섯 건의 양자 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다자간 어업협정을 맺을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협정이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 1) 조우 커위엔 교수 국제법은 한계가 있지만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 해양 분야의 국제법도 역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없었더라면 해양 경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새로운 법이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이창위 교수의 질문에 대해, 중국은 다자간 협정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어차피 양자 간 어업협정상 겹치는 부분이며, 양자 간 협상은 제3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중국은 해양 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다자간 협정이 다른 국가에게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질문 2) 독도 문제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ICJ의 권고적 기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 묻고 싶다.

답변 2) 김두영 사무차장 ICJ에서도 규정에 따른 조건만 따른다면 충분히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해당 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내용만 있다면 기본적인 조건은 갖춘 것이다. 독도 문제도 국제재판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네덜란드-덴마크의 경우에도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이런 의견을 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리
김태길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아시아 지역평화공동체의 협력분야 및 모델

대한국제법학회

장기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이루는 단계적 과정으로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와 일본의 시쯔오카대학 이토 카쯔오리 교수가 경제 및 환경분야에서의 현재의 협력 단계를 평가하고 장기적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
오병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상설중재재판소 중재관

발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이토 카쯔오리 시쯔오카대학교 교수

토론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환경협력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추진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황해지역 해양 환경 오염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황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매우 낮은 지역이다. 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치적 문제보다 중요하다.

황해의 해양 오염은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인구 증가와 다수의 대형 항구, 매우 큰 어획량과 어종 감소, 과도한 양식(전 세계의 70퍼센트)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실제로 규제법이 있다 하더라도 각국의 문제로 규제 실행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황해광역생태계 보전사업(YS LME)이라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참여하였고, 관련국들이 차례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황해의 환경 상태 진단을 위한 공동조사(TDA,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와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SAP, Strategic Action Program)을 활용하였는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내서 2번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평화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지역국가 간의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참여 유도가 북한의 문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일련의 도발적 행위로 인하여 2차 YS LME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 Resolution) 1718호로 국제사회가 금융지원을 막음으로써 UNDP가 환경보호를 위한 금융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모든 참여국이 북한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키게 된다면, 결의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참여시킬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북한의 문호 개방을 위한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의 동반자적 미래를 위한 전망과 도전: 새로운 법적 과제

이토 카쯔오리 시쯔오카대학교 교수: 국제분업의 전통적인 의미는 분야별로 특화 생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재의 무역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제분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공급망 교역의 특성상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국경 간 무역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증가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의 FTA가 무역장벽을 줄이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21세기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자연스러운 무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것, 공급망 교역에서의 장애물 제거, 무역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자 조약상 광범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6가지 내용으로 (1) 원산지 규정의 확대 (2) 무역절차간소화(통관절차의 간소화) (3) 규제의 투명성(규제국의 법률, 규정, 판결 등의 공시) (4) 기업친화적 환경의 제공 (5) 투자자 보호(양자 투자협정상 비차별, 몰수 금지 등) (5) FTA의 확대(양자에서 다자간 FTA로 확대) (6) 시장 접근성 향상 등이 있다.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해상 및 항공 수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경제적 안보라는 관점을 각 국가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 중국 · 일본의 FTA 협정에 대한 논의가 2012년에 시작되었는데, 영토분쟁이 경제적인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다자주의가 필요하냐는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지나치게 전통적인 형태의 경제 문제만을 다루고 있으며, 도하 라운드의 정체로 인해 확장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WTO는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자유무역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급망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것이 WTO보다 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양자 및 다자간 지역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WTO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1)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일반적인 질문으로 새 정부에서 이 지역 내에서 신뢰구축 과정을 매우 중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경향이 YS LME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어떠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정책 경향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함.

답변 1) 정서용 교수 김성원 교수의 질문에 대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부분은 통일부 장관이 관할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의 통일과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soft)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과거의 유럽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쌍무적인 관계이므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DMZ)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 같은 합의는 특정 경계선에서 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이런 문제는 소프트한 부분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꽤 많은 재정지원을 끌어올 수 있고, 통일에 드는 비용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소프트 이슈를 활용하면서 북한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2)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의 국제법 Ch. 7이 저술되었는데, 이토 카쯔오리 교수가 저술한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 첫째, 일본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을 시도했으나 농업 문제로 인해 체결이 좌절되었는데, 최근 들어 일본이 다시 FTA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둘째, 일본은 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중국이, TPP는 일본이, 한국 · 중국 · 일본 자유무역협정(CJK-FTA)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답변 2) 이토 카쯔오리 교수 우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 관해, 발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ISDS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 중재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DS 규제국의 규제 권한에 대해 큰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 FTA에서 농산물 관세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TPP에서는 대부분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농산물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농업에 관해 관세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조금 지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여러 종류의 다자간 FTA가 있는데, 이들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한국 · 중국 · 일본 FTA와 RCEP은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본다. RCEP만으로는 무역의 모든 부분을 다루기 어렵다. 미국이 TPP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런 이유로 TPP와 RCEP은 당분간 함께 유지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TPP와 RCEP을 종국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3) 이장희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접근을 하자는 정서용 교수의 견해는 매우 훌륭해 보인다. 이러한 접근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떠하고,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3) 정서용 교수 YS LME 2단계에 참여하기 원하는가 하는 공문에 대해 북한은 매우 긍정적인 답신을 보냈다. 문제는 북한이 다른 분야에서 일으킨 문제들로 인해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북한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판단한다.

질문 4) 로라 헨리 국제협력 과정에서 환경 보호에 관한 문제가 간과될 수 있다는 점, 바꿔 말해 원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궁금하다.

답변 4) 정서용 교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에 따라서 자금은 원래 목적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리

김태길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제3장

위기를 지나 공동번영으로

전설의 투자가 짐 로저스와의 만남
위기 이후 세계경제와 성공투자법

한경비즈니스/제주평화연구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1973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해 10년간 4200% 수익률을 올린 전설적인 투자가이다. 1980년 은퇴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대륙 100여 개 국가를 여행하며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특히 그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 지형도를 전망해 보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공 투자전략을 들어봤다.

진행
장혜원 동시통역사

주제발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대담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 / 前 KB 금융지주 회장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지금의 세계경제는 매우 독특하다. 역사상 최초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매우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일본은 '무제한'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윤전기를 돌린다고 했고, 미국과 영국도 대량의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세계경제는 조만간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다. 19세기는 영국, 20세기는 미국이 중심이었다면, 21세기는 틀림없이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급속하게 변하며 가장 뛰어난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국가의 채권을 팔고 중국 증시와 선물 시장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 향후 10년간 위안화도 아주 유망할 것이다. 4~6년 안에 남한과 북한이 '통합(Merger)'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여러 곳에서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남한의 자산과 현명한 경영자,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한다면, '통합'을 통해 한국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 고문: 당신은 놀라운 발언을 했다. 4~6년 안에 남과 북이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당신의 예상은 매번 잘 맞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로저스 회장: 만약 1984년에 누군가가 동독과 서독에 대해 5년 안에 통합된다고 했다면 아마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물론 당시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도 통합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북한에서는 중산층이 생겨나고 있고,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북한은 암시장도 매우 크게 형성돼 있는데, 국경 지역의 중국인들을 통해 DVD나 잡지, 해외 문물 등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자신들과 '다른 삶'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또한, 북한의 새 지도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비서)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는 스위스 등 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깥세상을 잘 안다. 북한의 군 장성들도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변화에 놀라면서 집에 와서는 변한 게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실망한다. 모든 것이 바뀔 준비가 돼 있다. 통합된다면 한국은 더 역동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황영기 고문: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

로저스 회장: 현재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일본의 엔화 약세로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화에는 투자했다. 금과 은값이 하락하더라도 북한의 금화 · 은화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이다. 만약 북한이 향후 몇 년 안에 붕괴한다면, 내가 가진 주화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한다. 한반도에 대한 투자는 그런 식으로 했다. 만약 통일이 가까워지고 화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한국 주식을 많이 매입할 것이다.

남한의 자산과 현명한 경영자,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한다면, '통합'을 통해 한국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

황영기 고문: 당신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있는 펀드매니저나 젊은이들은 이제라도 트랙터 운전법을 배워야 하는가?

로저스 회장: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금융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이 시기가 끝나간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MBA 전공자 20만 명이 배출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미국은 농업을 전공하는 사람보다 MBA 전공자가 20배나 더 많다. 하지만 향후 30년간 농업은 매우 유망할 것이다. 농업을 공부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공부한다면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미래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트랙터 모는 법을 꼭 알아두길 바란다. 지금 꿈이 없다면 농부가 돼라.

황영기 고문: 현재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로저스 회장: 궁극적으로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볼 때 돈을 찍어내 경제를 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아베 신조 총리가 내게 알려준다면 내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 이미 일본의 금리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아베노믹스는 결코 지탱할 수 없다. 한국으로선 단기적으로는 통화의 영향 때문에 원화의 경쟁력이 떨어져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 경쟁 상대이자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일본이 거듭해서 실수해준다면 좋을 것이다. 이미 최근 2주일 만에 일본 주식시장은 10~ 20퍼센트 폭락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에 아주 파괴적일 것이다. 나는 아직 일본의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을 매도했다. 내 딸들에게 중국어는 가르쳐도 일본어는 절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황영기 고문: 그렇다면 한국의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긴축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지지하나?

로저스 회장: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지만 한국의 중앙은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에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중이라면 조금 아플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아픔을 조금만 감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무척 좋을 것이다. 통일까지 된다면 더 강성해질 것이다.

황영기 고문: 당신은 중국에 대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 비판론도 많다. 내륙과 연안의 소득 격차가 크고 공산당의 독재 지배 또한 그렇다. 최근에는 중국 내의 그림자금융, 즉 은행이 아닌 금융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5~10년 후의 중국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나?

로저스 회장: 우선 중국의 성장 속도가 둔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거품 형성 등의 이유 때문에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번 세기에 걸쳐 중국은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을 것이다. 미국도 19세기에 총 15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 20세기 들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가 되려던 찰나에 대공황을 맞으면서 모든 시스템이 붕괴했다. 워싱턴과 뉴욕에 살던 모든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성공을 이뤘다. 중국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 한 정당의 독재라는 정치적인 현안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한국도 가장 큰 번영을 구가했던 때는 한 정당이 국가를 주도했던 시기였고 일본 · 싱가포르 ·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나는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한 정당이 이끌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황영기 고문: 이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때에 당신처럼 전설적인 투자자를 만난 게 큰 행운인 것 같다.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로저스 회장: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내 말만 들어서도 안 된다. 자신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부문에만 투자하길 바란다. 아까 내가 '농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농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고 공부부터 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념을 갖고 아는 부문에만 투자하길 바란다. 패션이든 자동차든 스포츠든 자신만이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고, 전문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면 투자를 확장해도 좋다. 신문 · 방송 · 지인 · 브로커 · 전문가 등에게 얻는 팁으로 투자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에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특히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중이라면 조금 아플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아픔을 조금만 감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무척 좋을 것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선진국의 양적 완화 종료 및 후유증에 대한 대응책 필요.
- 남북한의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필요.
- 상품 및 농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 구축 필요.

정리
장승규 한경비즈니스 기자

한 · 중 교역 활성화 방안
중국 도시화에 따른 내수 진출 전략

차이나매거진

오늘날 중국의 도시화(정책)는 중국 내수성장의 주된 견인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에 따라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곳곳에 생성되는 거대시장의 수요에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저마다 중국 내수시장을 세계 경기불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으로 여기고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중국 도시화와 내수성장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한 · 중 양국 시장 주체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교역활성화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봤다. 특히 한국 기업이 중국 소비시장에서 지명도를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중국 시장 진출의 지름길과 새로운 영업방식, 상호협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중국 백화점협회의 지도자 및 중국 유통업계 CEO들과 한국기업들이 경험과 발전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사회
쉬호란 중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

발표
전병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추시우지 중국백화점협회 회장
황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토론
하오지엔 우한중상그룹 동사장
박종득 다원인터내셔널 사장

쉬호란 중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도시화를 진행하느냐가 중국이 당면한 과제이다. 내수 촉진과 도시화 문제를 놓고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이번 주제를 설정하였다.

중국도시화에 따른 내수 진출 전략

전병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에서 최근 회자하는 말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이다. 역사적으로 세계는 신기술, 신시장, 화폐 발행, 전쟁, 분배 구조의 수정을 통해 경제 불황 위기를 극복해왔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은 GDP가 미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으나, 화폐 발행은 40퍼센트 이상인 화폐대국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소비 중심 성장으로 구조를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은 현재 45퍼센트의

저축률을 5퍼센트 정도 낮추고자 한다. 소비 중심의 두 가지 방법은 바로 내수 부양과 도시화이다. 리커창의 신사화(新四化)는 신형도시화이다. 4억 인구의 도시화를 통해 신형도시화를 이루고자 한다.

중국의 도시화는 산업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직업 창출,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농업 생산의 근대화, 시장화와 소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이제 중국은 도시화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가 도시의 빠른 팽창으로 특징지어진다면, 두 번째 단계는 과거보다 느릴 수 있으나 질이 양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도시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이주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고 도시의 계획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 도시화의 단계는 도시화, 자동차 대중화, 패션 대중화, 식문화 대중화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 여행의 폭발적 소비는 40대~50대 인구의 전형적 소비패턴이다. 따라서 중국 내수 대폭발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진정한 소비대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도시화는 광범위한 소비자 기업들에게 활기를 제공해야 하며, 그 소비자 요구는 중국 경제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는 전 세계 소비재와 유통기업을 변화시키며, 전 세계 유통기업의 전쟁터가 된다. KFC가 죽이나 볶음밥 같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판매하는 것처럼 중국화를 통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 중국 유통시장은 중국 업체가 가장 잘 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협조 협력을 통해 상생해야 한다.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격-고급화-브랜드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 산업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향후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중간소재부터 최종소비재 품목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중국의 도시화 현상에 맞추어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 소비재의 경우, 브랜드와 유통채널 등이 주요 요인이며, 중국 파트너와 협력이 중국 소비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다. 또한 중국인들의 생활습관과 문화에 맞추는 중국화 전략이 필요하다.

추시우지 중국백화점협회 회장: 중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요하며, 도시화의 추진에서 가장 유망한 업종은 유통이다. 중국의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여 2006~2011년 백화점 소매 수입이 연평균 16.5퍼센트 성장하였고, 2012년 81개의 회원기업의 소매총액은 동기 대비 8.9퍼센트였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에 중국 사회 소비품 소비총액은 연평균 15퍼센트 가량, 2015년에는 3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소비시장의 막대한 잠재력은 전 세계는 물론 한국 유통업의 호재이며, 한국 상품의 우수한 품질과 과학 기술력은 중국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 백화점들의 시장 집중도가 80퍼센트인 것과 비교할 때, 중국 백화점의 시장 집중도는 10퍼센트가량에 머무르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유통업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대국이며, 이제 더 큰 소비시장을 전 세계에 제공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창조대국으로 향해 가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형식과 플랫폼, 유통채널 기회창조로 중 · 한 비즈니스 교역을 촉진하고 상호합작하게 될 것을 희망한다.

황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한국 백화점들이 전자상거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해보자.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전통시장에는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온라인쇼핑 성장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백화점들이 전자상거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프라인과 브랜드 요소를 부각시키고 백화점의 전통적 경영방식을 온라인에서도 진행하고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커머스는 성장했지만, 오프라인 마켓의 대표격인 백화점은 고전하였다. 그러나 인터넷마켓과 TV 홈쇼핑 등이 빠르게 발달한 한국에서 백화점들은 최고위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포지셔닝 전략으로 생존에 성공하였다. 또한 롯데와 현대백화점 같은 곳은 멀티채널 전략을 선택하여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과 스마트폰 쇼핑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백화점들은 프리미엄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판매와 성장, 강력한 이커머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각자 독자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한국 백화점들의 8대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즉, 섬세한 서비스 제공, 패션 유행 선도, 명품 브랜드 전략, 하이엔드 공략, 문화 창조, 전방위적 서비스, 다양한 인터넷 채널 활용, 직원과 고객에 대한 인간 중심 관리 등이다.

중국의 백화점 업계는 이와 같은 한국 백화점의 8대 성공비결을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1) 전자상거래로 인한 충격에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 (2) 유통 단계를 통합하고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3) 백화점의 장점을 이용하여 하이엔드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4) 패션 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 (5) 지속 발전과 상생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하오지엔 우한중상그룹 동사장: 중국의 전통소매업은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현재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 후베이 성의 유통업들은 백화점, 쇼핑몰, 슈퍼,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소매업은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바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산업화는 정부 주도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도시화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유통업, 백화점들은 철도 건설 등으로 농민에서 도시주민으로 유입되는 많은 인구구조 변화를 받아들이고 1인당 국민소득 증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소비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외, 중국 유통업의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중국에는 많은 신규 쇼핑몰이 건설되고 있다. 이는 쇼핑몰 간의 지나친 경쟁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건설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는 점은 업계들에게 불리한 점이다. 또한 브랜드 위탁 판매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들이 전통적 백화점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나, 기존의 백화점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유통업체들은 세 가지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채널과 유통방식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셋째, 수익모델을 개선해야 한다.

박종득 다원인터내셔널 사장: 한국 시각에서 중국의 유통업을 바라보고자 한다. 중국의 도시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과 임금 상승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도시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 중국 시장이 고객이라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임가공 기지로서의 중국 시장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고객으로 여겨야 한다. 지역별 · 소득별로 맞춤형 · 차별화 전략으로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 연해주 지역은 고급화 전략, 내륙과 농촌 지역에는 저가 보급형 제품 위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상호 파트너십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중국의 도시화는 생산지로서의 중국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중국이라는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한 · 중 교역활성화의 핵심요인으로 등장함.
- 문화가 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갈등 해소와 상호 이해를 진작시키는 문화교류를 통한 한 · 중도시 간 교역활성화 방안이 필요.
- 중국 도시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80허우, 90허우 세대들의 성장에 따른 자동차, 금융서비스, 여행 산업 등 향후 유망산업의 잠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분석이 필요.
- 거대 영토를 지닌 중국의 연안대도시 밀집지역과 중서부의 지리적 특성에 맞추어 전통유통업과 이커머스의 적절한 맞춤식 대응책을 모색해야 함.

정리
채하연 대진대학교 대학원 교수

아시아 경제 부흥
경제 민족주의에의 대처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세계 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맞거나 경기가 둔화될 때면, 도처에 경제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 민족주의는 국내외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 반면 시장경제의 자율적 순기능을 믿고 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의 고유기제에 경제활동을 맡길 때, 사회는 평화 속에서 보다 조화롭게 번영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자유시장원칙을 수호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개방적 대외무역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복지를 증대시키며, 빈곤타파를 넘어 나아가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경제민족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각각의 경제원칙이 자유사회 실현 및 부의 창조와 갖는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경제발전방안의 하나로 경제민족주의 견제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
완 사이풀 완 잔 말레이시아 민주경제연구소 소장)

개회사
라스-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축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기조연설
삼 랑시 캄보디아 국민구조당 대표 및 前 재정부 장관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기조연설 내용 중 보호주의가 필요하다는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내셔널리즘은 지속 불가능하다. 한국 국민 다수가 생선 등 자급이 가능한 식품의 수입에 불만을 토로하지만 식량 자급을 추구할 때 생존 가능한 국가는 극소수다. 경제 번영, 교육 투자, 경제 자유화를 이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훌륭한 정치적 리더십 또한 중요하다.

팜치란 베트남상공회의소 전 부회장: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등의 방식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관세는 사라지고 있지만 건강 요건(health concern), 환경 규제(environment restrict trade) 등의 다양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

토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펭 싱유완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팜치란 베트남 상공회의소 前 부회장
리우 주닝 중국 문화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트리시아 여 말레이시아 라크얏연구소 연구소장

베트남은 1995년부터 아세안의 회원국이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과 북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을 상대로는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 80퍼센트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온다. 하지만 주로 저비용, 로테크 산업이며,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는 좋은 시도지만 충분치는 않다. 동아시아 각국은 베트남 수출품에 경제를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리우 주닝 중국문화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제 내셔널리즘은 특정 국가의 이해를 보호하고, 관세 부과와 자유무역 제한을 요구하는 정책체계(a body of policies)이다. '국익' 보호를 명분으로 한 (시장)개입이다. 내셔널리즘은 소비자가 오직 자국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며, 보호무역주의, 나아가 일부 외국 기업의 국영화까지 요구한다.

오늘날 내셔널리즘은 특히 통화를 통제하는 독재국가에서 팽배하다. 자본 공급 때문에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큰 비용을 전가한다. 내셔널리즘은 국가적 자부심, 외국 상품에 대한 의혹과 공포에 호소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손해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외국산 우유의 경우.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과 저급하고 해로운 품질을 감수해야 한다.

내셔널리즘은 국가적 자부심, 외국 상품에 대한 의혹과 공포에 호소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손해

트리시아 여 말레이시아 라크얏연구소 연구소장: 말레이시아의 최근 성장은 이웃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다. 부패와 관료주의로 인해 사업 비용이 많이 든다. 1971년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은 빈곤 척결이라는 훌륭한 목표가 있었으나, 말레이시아어로 '대지의 아들'을 뜻하는 부미푸트라(Bumiputra)로 불리는 현지 엘리트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는 정실주의, 연고주의 문화를 낳았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자동차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보호주의는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약 690억~700억 링깃의 손실이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민간 투자가 높았지만, 1998년 이후 민간 투자가 정부 투자보다 적어졌다.

정부유관기업(GLC)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시가총액의 약 36퍼센트, 쿠알라룸푸르종합지수(KLCI) 시가총액의 약 54퍼센트를 차지'한다. GLC와 정부유관투자회사(GLIC)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주요 참가자다.

말레이시아 경제는 정부가 크게 지배한다. 민영화된 부문에서는 일부 선별된 개인이 수익성 좋은 입찰이나 도급을 받는다. 연고주의는 정부가 지배적일 경우, 오직 동조자에게만 전기, 통신 부문의 독점권을 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경제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며, 부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낙후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유무역은 파괴

펭 싱유완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무역은 생산요소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케 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유치산업' 논쟁, 우리는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저개발(산업)을 보호할 것이다.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관건이다. 또한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해 통화의 안정도 필수다.

무역의 효용은 동등하지 않은(unequal) 경제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무역의 균형(balance of trade)'을 요구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잘못됐다. 중국의 무역 흑자는 미국 시민의 투자와 지출에 사용됐으며, 따라서 적자는 상쇄된다. 미국은 이러한 요구 대신 중국에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지난해의 일본 상품 무역 금지 캠페인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금지하는 것이다. 많은 일본 기업이 투자처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자유무역은 어느 한 당사자가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효용이 있다.

바룬 미트라 인도자유연구소 소장: 개인도, 기업도 무역을 하지만, 정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무역 협상을 하고, 협상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도는 제조업보다는 IT산업으로 더 알려져 있다. 아마 1940년대에 일본에 뒤이어 자동차를 생산한 유일한 나라일 테지만 현재 인도의 자동차 브랜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오늘날 인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남고 있다. 유치산업 논쟁은 연고주의만 낳았을 뿐이다.

인도는 수출 주도가 아닌 내수 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했고, 이는

연고주의라는 결과를 낳았다. 연고주의는 다른 어떤 계층보다 빈곤층에 큰 타격을 입혔다. 섬유산업과 IT산업은 보호도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완전히 도외시되기까지 했으나 오히려 번창했다. 인도 IT제품의 약 80퍼센트가 수출용이다.

자유무역은 공정무역이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윈-윈 상황을 이끌며,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이득을 준다. 경제 내셔널리즘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한다.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삼 랑시 캄보디아 국민구조당 대표 및 전 재정부 장관: 경제가 낙후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자유무역은 파괴적이다. 자유무역에 경제를 개방하기에 앞서 우선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과도기가 필요하다. 먼저 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하고, 부패를 통제해야 한다. 농민들이 무역 자유주의라는 명분에 따라 토지를 잃고 있다.

질문 1) 캄보디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캄보디아의 번영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

답변 1) 삼 랑시 대표 첫째는 훌륭한 리더십이고, 둘째는 교육이다. 캄보디아의 지도층은 마피아 또는 갱이며, 이들은 자유주의를 이용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마피아 치하에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발전을 이루었다. 두 나라는 국익을 지키고,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다. 마하티르와 리콴유는 민주주의자는 아니지만 비전이 있다. 교육이 필요하다. 전쟁과 독재로 세 세대를 잃었다. 로테크 투자만 들어올 뿐이다. 우리는 따라잡아야 한다.

답변 2) 바룬 미트라 소장 자유무역은 효율적이고 강력하다. 이는 일방적이어야 하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보호받는 산업은 또한 가장 비효율적이다. 농업이 그 예다. 순수한 무역 일방주의는 정부의 보호 없이도 인도의 IT산업과 섬유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답변 3) 펭 싱유완 교수 세율이 낮고, 자유무역을 하는 홍콩을 보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다.

답변 4) 최병일 원장 보호주의는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을 고려해야 한다. 내셔널리즘과 보호주의의 수혜자는 기존의 참가자들이다.

최종 발언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아시아 역내 시장 구축은 번영을 이끌 것이다. 독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과 개방경제 덕택에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뎌냈다.

유럽연합의 서비스 부문은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동일한 논의와 논쟁을 거쳤다. 우리의 번영은 대(對) 아시아 무역에도 크게 의존한다. 우선 과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이다.

사실 (경제) 자유화에는 근로기준 확립 등의 사회적 귀결이 따른다. 하지만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커다란 반대를 받고 있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1996~1997년과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아시아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EU FTA의 협상이 타결됐을 때, 독일의 자동차업계는 반대했지만 후에 누가 수혜를 얻었는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더욱 수월하게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수혜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소비자가 승리했다. 자유화는 더 큰 번영을 이끌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캄보디아 등 후진국 경제의 관건은 인권 보호와 부패 통제.
- 경제 내셔널리즘과 보호무역주의는 종종 연고주의와 부패를 야기하며, 이는 가격 상승과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
- 경제 자유주의는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며, 평화와 번영 이룩.
- 일방적 무역 자유화는 국가가 연고주의에서 탈피하고, 부패를 통제하며, 국민 · 소비자 · 생산자 모두에게 직접 이득을 주기 위해 고려해봐야 하는 방안.

정리
노노이 오플라스 필리핀 최소정부지지회 회장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해부한다
무역, 금융,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및 분쟁 패턴

동아시아재단

아시아는 인구증가와 함께 비교적 건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무역 · 금융 · 투자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을 서서히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세안 · 중국 중심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그룹과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경향 또한 목도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협력 및 갈등에 대한 한국 · 일본 · 중국 · 말레이시아의 입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FTA와 RCEP, TPP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 **RCEP과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역내 투자유치 방안은 무엇인가?**
- **일본 아베 내각의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동아시아 무역투자정책은 무엇인가?**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발전 방향과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 코트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발제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연구실장
왕 용 북경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
마이클 여 말레이시아 아시아 전략리더십연구소 공동 창립자 겸 CEO

아시아 경제위기가 1997년에 있었고, 그 이후 공식적인 형태로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정체성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세안 10개 국가에 한국 · 중국 · 일본이 참여하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아세안+3 국가에 호주 · 뉴질랜드 · 인도를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모습으로 아시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는 지금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세션에서는 중앙대 석좌교수이자 코트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인 안충영 교수의 사회로 아시아 지역의 무역, 금융,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및 분쟁 패턴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충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아시아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정치 리더십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중동이 아닌 아시아 · 태평양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TPP에는

캐나다 · 멕시코 · 칠레 · 브루나이 · 호주 등이 참여하여 17차례에 걸쳐 역내 자유무역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RCEP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TPP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한국이 TPP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역내에서 RECP과 TPP의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은 한 · 미 FTA에 이어 한 · 중 FTA 뿐만 아니라 RECP, TPP에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역내에서의 역할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반도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육로 역할을 하는데, 대륙해양 세력과의 대치상태에서 중진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소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아시아의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대비해서 한국은 다자간의 위험보다는 양자 간의 협력에 더욱 집중하고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임원혁 실장은 한국은 지역통합과 함께 헤징(hedging)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며, 양자동맹과 함께 포용적인 지역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임원혁 실장은 한국의 지정학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한미동맹과 다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 · 미 FTA가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TPP에 성급하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며, RECP또한 중요한 교역협력단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TPP와 RECP 모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TPP와 RECP를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원혁 실장은 RECP은 아세안과 중국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TPP는 미국의 주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 더욱 유리한 협정이며,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완화된 조건이 수립될 때, TPP를 수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리라 전망했다. 이것은 미국이 처음에 원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TPP는 베트남과 일본이 중요한 열쇠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임원혁 실장은 한 · 중 FTA에 대해 장기적인 입장에서 한국게 거대한

한반도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육로 역할을 하는데, 대륙해양 세력과의 대치상태에서 중진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소임을 해야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 현재 한국에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 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세부적인 협상조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혁 실장은 한 · 중 FTA의 조정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격적으로 한 · 중 FTA를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는 FTA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을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 등에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는 금융협력의 중간단계이며, 중국은 이러한 전환기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

RECP과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

왕용 베이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아시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생성된 역내 경제 불균형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유럽,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는 금융협력의 중간단계이며, 중국은 이러한 전환기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수출 주도적인 성장정책과 내수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발전시키며,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TPP와 RECP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용 교수는 중국은 현재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고, 시장의 가치를 강조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과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직 의문이라며, 국영기업에 대한 이슈는 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를 개혁하며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RECP을 통해 중국은 보다 전략적이고 개혁적으로 변화하며, 현재 중국도 TPP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망했다.

미 · 중 정상회담에 대해 왕용 교수는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상회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기에 이루어지게 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인 의존성이 서로 크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다시 경제 회복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를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그동안의 궤적을 살펴보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고려하면서 미 · 중 관계를 하나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왕용 교수는 향후 미 · 중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TPP, RECP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여 말레이시아 아시아전략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해 중국은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위안화가 국제교역의 통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ECP으로 아세안의 위치를 높이며, RECP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 지도부의 정치적인 의지와 의사소통을 통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위기 극복방안과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일본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디플레이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아베 내각은 침체한 일본 경제를 회생시키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를 공격적인 재정 정책, 유연한 회계 정책,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으며, 구체적인 성장 정책은 2013년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앞으로 과감한 통상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FTA, RECP, TPP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를 추진하여 2퍼센트의 물가안정 목표를 조기 달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에서 13.1조 엔의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사회 진출, 공격적인 농림수산정책(통상 분야에 있어서 일본이 우위를 점하자는 생각), 민간투자의 확충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또한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하여 도쿄 · 오사카 · 아이치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담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마 히로히사 경제공사는 일본은 앞으로 과감한 통상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FTA, RECP, TPP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RECP, TPP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 · 기계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면서 한국이 먼저 FTA를 체결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 · 중 · 일 FTA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교섭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마 히로히사 경제공사는 현재 일본은 RECP, TPP를 활용하여 FTA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회생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소마 히로히사 경제공사는 한 · 중 · 일 국가들이 서로의 업무담당 범위를 논의하고 있으며 한 · 중 · 일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자세가 되어 있고, 또한 중국도 관세 인하나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한 · 중 · 일 FTA의 실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 중 · 일 FTA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교섭 범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세안의 역할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 방향

마이클 여 소장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달에 대한 처우라든가 민간 분야에 대한 역할,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 경쟁법 등 아시아의 경제 협력에서 더욱 진전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 RECP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TPP가 RECP보다 먼저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여 소장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와 협력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MI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금융화폐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분담금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 · 중국 · 일본이 차지하고 나머지 20퍼센트를 아세안 국가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CMI는 1,200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이후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늘려 2,400억 달러로 급격하게 늘었다. 거시경제연구소인 MRO를 설치한 것이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여 소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금융규제의 틀을 잘 설치하고, 호주 · 인도 · 뉴질랜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발리에 있었던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채권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1,600억 달러를 통해 인프라(Infrastructure)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아시아가 현재 존재하는 제도금융의 틀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세안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협력은 더욱 중요하고 역내 투자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여 소장은 현재 존재하는 아시아 통화기금의 가능성에 대해 일단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아시아 통화기금이 정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은 IMF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경제공동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마지막으로 안충영 교수는 역내에서 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공급망과 가치사슬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각 국가가 FTA 및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보다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각 국가가 서로를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안충영 교수는 아시아 국가 간의 균열을 방지하고 TPP, RECP가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경제적인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 중 · 일 세 국가가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보다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FTA, TPP, RECP 등 경제적 필요성을 통한 초국가적인 경제 협력이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정리
신현석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펠로우

새로운 한 · 중 경제협력 20년을 위하여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한 · 중 간 경제협력은 1992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교역, 투자, 산업협력 및 인적 교류 등의 측면에서 양국은 서로의 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한 행위자임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외교 레버리지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 · 중 간 경제협력은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 및 시진핑 체제하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지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한 환경 속에서 오늘날 양국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는 또한 한 · 중 양국에서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를 위한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신정승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소장, 前 주중대사

발표 및 토론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곽복선 경성대학교 교수
쉬창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주임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

현재 한 · 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쉬창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주임은 1992년 수교 이후 한 · 중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으며, 중국의 3대 무역 상대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중 · 일 무역 규모 수준을 초과할 것이며, 2015년에 달성되리라 예상했던 한 · 중 양국 간 무역액 3,000억 달러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한 · 중 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 간 상호 투자 분야에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첫째, 한국 시장에 대한 중국의 이해 부족, 둘째, 외자 유치 분야에서 한국의 보수적인 태도 등을 지적했다. 한국이 한국이나 중국 현지에서 투자유치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제안하며, 이는 투자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곽복선 경성대학교 교수는 한 · 중 양국의 경제 관계가 상품교역과 투자기업의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라는 기본구조 위에서 최근 들어 협력과 경쟁 가능성이 동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해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교류가 1990년대의 산업 간 · 수직적 분업에서 2000년대 들어 산업 내 · 수평적 분업으로 변화되면서 전기전자, IT, 기계, 부품 및 소재 분야에서 경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양국 경제관계의 문제점으로는 상호 경제교류 규모에 비해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이 미흡함을 제기했다. 양국 기업 간의 진정한 협력관계 구축이 어렵다며, 양국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실질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환경 분야의 상호 협력과 중국의 도시화, 한국의 지역개발 관련 경험을 살린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조만간 중 · 일 무역 규모 수준을 초과할 것이며, 2015년에 달성되리라 예상했던 한 · 중 양국 간 무역액 3,000억 달러도 조기에 달성할 것

중국 국내 경제 현황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은 어느 국가나 장기적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며, 일정 단계에 이르면 중등 수준 혹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며, 중국도 30년간 고속성장을 구가하였으므로 최근 들어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경제와 중국 시장의 발전 잠재력이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경제는 과거 대량의 자원과 염가의 노동력을 대가로 발전하여 자원 · 환경 · 노동력의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5가지 정책, 즉 (1) 경제구조 조정의 가속화 (2) 중국 경제의 혁신수준 제고 (3) 경제 과실의 분배, 즉 민생문제 개선 (4) 자원 절약형, 친환경적인 발전 모델 추진 (5) 지속적인 개혁개방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개혁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이끌어 온 4가지 보너스, 즉 인구 보너스, 토지 보너스, 개방 보너스, 개혁 보너스가

소멸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경제의 발전전략이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7~8퍼센트대의 중성장시대에 진입할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한 · 중 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중국 내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력 강화와 내수시장 마케팅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

자오진핑 부부장은 중국이 내수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을 함께 취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도시화를 통한 도시 인구 증가는 주민 소득 증가로, 주민 소득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도시화 추진 과정 중의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곽복선 교수는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은 지역개발과 산업구조 개선 및 산업수준 제고라는 두 개의 틀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지역개발 관련, 도시화 정책에 따라 소비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도시군 형성과 관련한 스마트 시티, 환경과 에너지, 통신 관련 프로젝트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 및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가 비슷하므로 이 분야의 상호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곽복선 교수는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1) 중국 정부의 세무관리 강화 (2) 친노동형 법률환경의 확대에 따른 노무관리의 어려움 (3) 통관상의 애로 (4) 가공무역과 관련된 문제 (5) 노동 비용 및 각종 비용의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문제 (6) 중국의 도시화 진전에 따른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 대부분 통상적인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한 · 중 양국 정부 혹은 유관

도시화를 통한 도시 인구 증가는 주민 소득 증가로, 주민 소득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도시화 추진 과정 중의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투자를 창출할 것

부처가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 투자기업 내수시장 마케팅에 대해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자금조달 편리 제공,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의 한국 기업의 참여, 주요 유통기업의 파트너링, 중국 대기업들의 부품 아웃소싱에 한국 기업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한 · 중 FTA에 대한 견해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한 · 중 FTA는 (1)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환경 마련 (2) 한 · 중 양국 경제관계의 업그레이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 중 경제협력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 · 중 간의 교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한 · 중 FTA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양국 간 농업 분야의 교역에서 한국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한국의 대 중국 농산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또한 중국도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어 중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농산품과 관련한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조치 강화,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한 · 중 FTA 체결에 대해 '대기업은 이익이고 중소기업은 피해'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일부 중소기업 품목군의 경우는 수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군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장개방 지연보다 효과적 대응방법임을 강조했다.

쉬창원 주임은 중국은 현재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조속한 FTA 체결을 희망했다. 한 · 중 FTA는 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자바오 전 총리에 이어 리커창 총리도 한 · 중 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2년 이내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한 · 중 정상회담 관련 건의사항

양평섭 중국팀장은 한 · 중 간 교역 규모가 커질수록 양국 간 경제 현안도 증가할 것으로, 경제 현안을 풀어 갈 채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한 · 중 양국 간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대화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양국 모두 경제 분야에서 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 · 중 경제 미래 20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오진핑 부부장은 이번 한 · 중 정상회담에서 한 · 중 FTA에 대한 새로운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장기적인 각도에서 한 · 중 FTA 체결을 통한 한 · 중 · 일 FTA, 더 나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곽복선 교수는 양국 지도자가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양국 간의 지역개발 협력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항만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해양경제 시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길 희망했다.

쉬창원 주임은 한 · 중 FTA의 진행이 다소 느린 감이 있으므로, 양국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진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 · 중 FTA는 양국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앞으로의 한 · 중 경제관계가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을 함께하기 위하여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가 비슷한바, 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간 경제관계의 발전뿐 아니라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분야의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
- 중국은 장기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전개한다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므로 중국의 정책동향을 잘 파악한다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들의 중국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가 낮은바, 이해 제고 및 시장 진입 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의 지원이 필요함.
- 한 · 중 FTA에 대한 중국측의 태도가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바, 조속한 체결을 위해 민감한 분야에서 중국측이 양보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되므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긴요함.

정리
조명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아시아 브랜드의 유럽 시장 진출과 세계화 전략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973년 동진산악을 시작으로 40주년을 맞이한 블랙야크는 2013년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유럽, 미국 등 아웃도어 본거지로의 진출을 가시화하여 '2020년 글로벌 No.1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은 '현재의 기술력에 해외마케팅을 강화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히말라얀 오리지널'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살려 국내 업계 최초로 네팔에 매장을 오픈하였고, 네팔 1호점을 기점으로 유럽과 미국 진출은 물론, 북유럽과 러시아 등 신동력 성장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국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2015년에는 글로벌 TOP5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다. 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블랙야크의 세계화 전략과 성장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회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토론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1973년에 창립된 블랙야크는 2013년에 40주년을 맞이하였다. 해외 유명 브랜드(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몽벨 등)와 비슷한 시기에 창립되었다. 산악인의 정신(큰 꿈, 높은 목표, 작은 실천의 시작)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한국 시장 선도, 중국 시장 안착, 유럽 시장 진출을 이루었다. 2012년에 5,000억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8,700억 매출 목표, 2015년 매출 2조(해외 비중 30퍼센트), 2020년 글로벌 1위(4조 매출, 해외 비중 50퍼센트)의 목표를 갖고 있다.

블랙야크는 한국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과 기능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1) 2008년, 고어텍스에 크리스털을 입힌 원단 소재의 의류 개발 (2) 2011년, 몸에 피로감을 줄이는 듀오백 기능의 배낭과 근피로도를 감소시키는 three zone 등산화 개발 (3) 2012년, 각 신체 부위의 피로도 감소와 근육량 강화를 위한 이너웨어 개발 (4) 2013년, 땀 흡수와 기능성이 강화된 속옷과 아웃도어의 세탁력을 높이고, 사용 수명을 연장한 아웃도어 세제 개발 등이

그것이다.

블랙야크는 만리장성에 대한 관심과 환경 책임 활동으로 중국인의 사랑을 얻었으며, 일부 언론 조사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다. 2013년 2월 유럽(독일, 뮌헨의 ISPO)의 아웃도어 행사에서 블랙야크 제품에 대한 큰 평가(아시아 최고의 제품상)와 40주년 창립 기념 축하를 받았다. 한국의 디자인과 감각, 히말라야의 문화와 색깔(color) 및 글로벌 맞춤형 패턴에 기초한 블랙야크의 유럽진출 전략은 "블랙야크다운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을 위한 블랙야크 비전 경영은 호기심에서 자긍심으로, 개인의 능력과 투혼에서 일관된 조직력으로, 규모와 매출액 기준에서 가치와 지속 가능성 기준으로, 기능성과 전문성의 토종 브랜드에서 감성과 문화를 가진 글로벌 브랜드로 나가는 '글로벌 넘버 원 정신'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본다.

블랙야크의 미션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에게 블랙야크를 소유하고 즐거움을 선물하자.'이다.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자 한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블랙야크는 3R(three responsibility) 정책을 갖고 있다. '소비자 만족 책임', '환경 책임', '사회적 책임' 등이다. 소비자 만족과 환경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위하여 '블랙야크 (공익) 재단'을 설립한다.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국제 경영의 4가지 모델이 있다. 경영 장소와 경영 메커니즘으로 구분하자면, 세계화, 현세화, 세현화, 국지화 등이다. 블랙야크는 현세화의 전략 중 제1 유형(국내 메커니즘 + 해외시장→현지화 →현세화)에 해당된다. (제2 유형은 유한킴벌리로 세계화→세현화→현지화→현세화) 국내에서 세계에 진출하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큰 성공이 기대되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리라 기대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청년들의 창업 기회 제공(사회적인 격려와 제도적인 지원).
- 1퍼센트의 작은 가능성을 갖고 산을 올랐던 산악인들처럼, "꿈은 크게, 목표는 높게, 실천은 작게"(에베레스트 첫 등정, 힐러리 경의 경영철학).
- 품질 향상과 기능성 강화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 유럽 진출로 얻는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명품 아웃도어 브랜드로 자리 잡기.
- '블랙야크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현세화 전략의 성공과 더불어 BMW, Apple과 같은 세계화 전략으로 나아가기.

정리
신종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기업과 사회의 장기 공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사회와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이 만약 단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에만 전념을 하게 되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기업은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성취하면서 나아갈 때 지속경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수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세션에서는 사회공존을 위한 영리-비영리 영역 간 기업활동의 통합 방안과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 및 성공 메커니즘을 조망해보았다.

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
정승화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강철희 연세대학교 교수
양오석 한동대학교 교수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
최영근 상명대학교 조교수
정승화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안세연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아이만 타비쉬 죠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이경묵 서울대학교 교수: 기업과 사회가 장기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 기업은 사회발전과 정의구현에 기여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당성이란 해당 기업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정의된다. 모든 국가는 발전과 정의를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구별된다. 이러한 발전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며, 추가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가 지각하는 정당성은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거래 조건과 차선책이 제공하는 거래 조건의 차이로 측정해 볼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즉 경제적 기대, 윤리적 · 법적 기대, 재량적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가 달라진다는 점이 현재의 이슈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대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기업의 정당성은 증대될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 장수할 수 있다. 높은 애사심, 브랜드 충성도, 주주들의 주식구매 등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정당성은 기업의 생존을 보존할 수 있다. 외부 주체들이 단기적으로 희생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즉, 투입요소를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있게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규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창업이 활성화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에 뛰어들 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과 질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관심을 갖게 한다.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내는 기업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름다운 재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원봉사 참여시간을 종속변수로, 사회공헌 전담조직의 유무와 자원봉사 지원유형(휴가 일수 보상, 현금지원, 인사평정에 대한 반영, 기타, 혼합지원, 미지원)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정책에 따라 참여율 및 참여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정책의 내용에 따라 그 효과는 다소 상이하다.

다음은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 발표이다. 경영학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방법론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묘사하는 연구에 불과하고, 실증연구는 드문데, 이는 아직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다. 자원기반관점(RBV)을 기반으로 파트너십 또는 전략적 제휴가 그간 일반 벤처기업,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파트너십은 투자위험을 분산, 자원의 획득,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 조직학습을 촉진하여 역동적 능력을 배양하고 정당성을 강화하여 시장 진입과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적, 사적, 사회적 영역과 같은 둘 이상의 조직에서 파트너십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즉, 투입요소를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있게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규칙이 적용되는 사회를 형성해야

기존 연구에 따르면 파트너십이 다양할수록 재무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다수 보유할수록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는지, 어떤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2010년까지 인증한 565개의 사회적 기업 중 연락이 가능한 517개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70개를 회수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주관적 성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민간 지원기관과 맺었을 경우, 재무적 자원, 판로지원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을 경우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은 비영리조직이 자발적으로 활동한 오랜 전통이 있었으나 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주도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증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더 감소하고, 정부와의 파트너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두 특성이 추후 연구되어야 할 주제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조직구조가 중요하며, 부족한 경영역량을 경영전략으로 극복하는 것이 그다음 중요

양오석 한동대학교 교수: 사회혁신기업을 제시하면서 사례로 히즈빈즈라는 카페를 다룬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경영자 임정택은 정신장애우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히즈빈즈라는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정신장애우를 바리스타로 고용 및 훈련을 제공하여 지금까지 바리스타 26명을 배출하였다. 최근 현재 5호점이 개설된 상태이다.

이런 독특한 부류의 섹터에 있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혁신기업으로 부르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성공과 성공요인, 지속 가능성, 경쟁전략, 생존전략, 고용과 수익 간 관계, 서비스의 질 대비 근로자의 만족도, 성장과 유지, 업무평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

성공한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에 대해 선행연구를 공통요인과 고유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목표시장, 사회적 정당성, 실천적 타당성과 같은 고유요인은 히즈빈즈가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불충분한 부분 역시 많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회자본, 사업환경, 경영역량, 조직구조, 사회적 기업가정신, 경영전략의 순위로

성공요인이 나열되나, 히즈빈즈는 사회적 기업가정신, 조직구조, 경영전략, 사업환경, 경영역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사회자본의 순위였다. 이후 세부적으로 평가요소별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기업이라 할 수 있는 셋을 놓고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민첩성, 사회적 목적, 자율성, 경쟁적 공격성 등을 비교한 결과, 사회혁신기업은 사회적 목적 합류로 기존의 기업가 정신 국면을 강화한 것이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사회혁신기업은 Born-social이며, 장애인 고용 비율 및 지속적 관리가 성공기준이며, 비즈니스모델의 특징으로 전략적 포지셔닝, 내부 가치사슬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조직구조가 중요하며, 부족한 경영역량을 경영전략으로 극복하는 것이 그다음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회자본과 같은 재정지원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재정적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이윤철 항공대학교 교수: 기업이 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과 사회가 장기 공존하기 위해선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소재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조선 산업, 가전/휴대폰 산업의 예를 보면, 한국 기업은 오랫동안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글로벌한 경제 웅위를 얻었으나 경제적 가치가 전부는 아니다. 사회적 정당성을 잃은 기업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는 엔론의 사례와 착한 기업이 오래 살 수 있다. 기업과 사회의 공존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투명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지속가능 경영으로 이어진 개념은 최근 공유가치 창출로 이어졌으며,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마이클 포터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사업의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고려가 요구

사업의 방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사업의 방향은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만 하고,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은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가치사슬 상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등과 관련된다.

특히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세부적으로 조명하였다. 평가 주체는 기업이 자체 평가 후 이를 공인된 외부기관에 검증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1단계로 공기업 및 대기업, 2단계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조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평가 주기는 매년 이뤄져야 할 것이며, 평가 방식은 지속경영보고서를 발간할 때 자사가 달성한 사회적 공유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공인된 외부기관에 검증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달성한 이윤과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치사슬에서 파생된 사회적 가치를 환산해서 공표하고, 이를 인증받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개별 기업이 창출한 공유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요구되므로,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요구되며, 사회적 기업도 CSV 차원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창출한 공유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요구되므로,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요구

질문 1)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자인(Sein, 실존)과 졸렌(Sollen,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학문)으로 학문을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공유가치 창조로 이 양자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즉 공유가치 추구는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바람직해야 한다. 정책전문가가 압력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인의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경묵 교수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답변 1-1) 이경묵 교수 성공하는 대부분 기업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만 사회에도 기여한다. 기업의 혁신으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가치뿐 아니라 사회 장기생존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본다. 목적은 기업 가치의 창출이나 결과적으론 사회를 발전시킨다. 일부 기업은 사회 가치 창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답변 1-2) 최영근 교수 경쟁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인간사회에 대한 토론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유인원에 속하는 보노보의 행동에서 유래한 프로보노(pro bono)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보노보들은 먹이를 먹고 양보하고 암컷을 양보하였다. 오늘날 프로보노란 말은 전문직의 재능기부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사회에서 분명 나눔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두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는 다소 비싸고 맛이 좋지 않은 커피라도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커피를 구매하자는 캠페인으로 점점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즉 인간사회에서도 공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답변 1-3) 양오석 교수 사례가 별로 없어서 아직 졸렌에 대한 연구에 치우쳤으나, 자인도 분명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서는 공유가치창출(CSV)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존 자체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답변 1-4) 이윤철 교수 사회적 가치를 잘 추구한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듯하다. 기업 다수가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곤 했다. 기업과 사회의 장기생존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조건 없는 신임보다는 적절한 감시체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질문 2) 김인석 총장 요새 공유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확대재생산 시스템을 완성했기에, 자급자족의 시대로 가는 시기에 있는 것인지, 확대재생산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공존해야 하는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자본주의를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들었다.

답변 2-1) 조동성 교수 공존이냐, 수렴이냐, 보완이냐에 대한 질문이다.

답변 2-2) 최영근 교수 어려운 질문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나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된다. 자본주의가 초기에 효율성을 가지고 발전해왔고, 비록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부를 형성하는 데는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 다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계는 협동조합들로 재편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는 점차 조직구조가 병렬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존과 상당히 관계된 형태라고 판단한다.

답변 2-3) 이경묵 교수 과거 기업활동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는데, 요새는 정부가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적 기대로 인해 공유가치와 같은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양극화, 지식기반사회로 증가된 생산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하나로 수렴하기보다는 기존 기업 형태가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한 기업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전개될 것이다.

답변 2-4) 이윤철 교수 시스템이 대체되진 않을지라도 사회와 공존해야 한다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2-5) 양오석 교수 수렴보다는 공존에 가깝고, 대체보다는 보완이 가깝다. 이는 공존을 향한 전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답변 2-6) 조동성 교수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발전에 나름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리

박동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세계경제 속의 CSR, 기업의 표준을 바꾸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사회책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즈음 ISO 26000의 이해는 아주 중요하다. 외국의 기업들은 CSR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력 향상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내 100대 기업의 반수 이상이 ISO 26000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CSR을 넘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공유가치 창출 CSV(Creating Shared Value)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도 꾀한다는 것이다. 또한 CSR은 회사가 일궈온 지속가능경영 중점 과제와 성취 결과를 보여주고, 미래의 발전을 이끌 인재육성 전략과 핵심기술력 개발을 통한 발전 등 '사람과 기술' 중심의 지속가능 활동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회환원이 아닌 본질적인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김영호 한국 CSR 표준화포럼 회장을 통해 기업의 CSR의 국제표준과 이에 대한 아시아 기업의 대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前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

발표
김영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한국 CSR 표준화포럼 회장

토론
오다케 요시키 Aflac Japan 창업자, 최고고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전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 정통적인 기업이 자본주의 영리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을 보면 기업도 사랑과 공감, 신뢰를 기업문화 속에 내장해야 하며, 그런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4.0시대, 세계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CSR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CSR의 표준화의 사례와 기업의 경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김영호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한국 CSR 표준화포럼 회장:
21세기 개막을 전후하여 CSR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 2001년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에 타당성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2003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국제기구 NGO를 포괄해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전략자문그룹(SAG, Strategic Advisory Group)구성하여 그 결과로 2005년 ISO회원국의 찬반투표를 통하여 ISO SR작업반(WGSR, 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이 구성되었다. 그로부터 6년간 8차 총회를 거쳐 2010년 77개의 참여국과 40여 개의 국제단체가 투표하여 93퍼센트의 찬성을 얻어 ISO 26000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11월 1일 국제표준으로 공식 발간되었다.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협약이 이루어졌으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고 ISO 26000의 제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과히 대단한 표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책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 ISO 26000의 구조와 성격: ISO 9000과 ISO 14000에 이어서 ISO 26000으로 종합과 확산되고 있다. 대단한 기대와 관심 속에 공표되었으나, 세계경제가 위기에 놓인 시기였다. 모든 기업은 지속 가능성보다는 생존 가능성에 더 관심이 많았기에 현실적으로 파괴력을 갖지는 못했다.

• 검정(檢定, verification)제의 문제: 사회적 평가에 대해 검정되는 제도로 출범한 것도 특징이다. 인증받지 못하는 기관은 없지만, 인증은 받으나 사회적 존경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의류업체 갭(GAP)의 경우, 인도의 하청기업에서 아동 착취를 했다는 것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사회적 평가가 엄청나게 실존을 덮쳤다. 도요타의 경우도 그렇다. 각 나라별 국가 표준을 다시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패턴은 검정제로 가고 있다.

2004~2005년 일본 신문과 매스컴에서 연일 CSR을 엄청나게 이슈화시키던 현장에 있었다. 일본은 적극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국이 훨씬 더 소극적이고 매스컴도 다루지 않는다.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이슈화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CSR 바람이 가장 미미하게 불면서 진행되어 왔다. 상륙하기 전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곳에서 경제정의지수 등을 개발하고 기업에 상도 주었지만, 유일한 선생을 한국 CSR의 시초로 보고 구로부터 부천까지 '유일한로'를 기념으로 만들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CSR표준화포럼이 개최되었다. 빈총회, 퀘벡총회 등을 거쳐 한국에서도 SR총회를 유치하여 서울의정서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로 추진되었으나, 7차 회의에서 한국은 하지 말자는 결과가 나와버렸다.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개최되고 한국에서는 불발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CSR보고서는 한국 무역의 장애요인으로서의 CSR을 다루었다. 북유럽에서는 이를 적극적인 무역전략으로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상징적인 보고서이다. 기업 측의 저항적인 심리 자세가 있었다.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중요하다.

기업 영업방식은 핵심적인 전략은 같이하되 CSR전략을 덧붙이는 형태로 점잖은 기업으로 보이려 하는 도피적 경향이 있다. CSR Washing(CSR 세탁)으로 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SR의 정착 가능성은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녹색성장, 노동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등과 중복 · 중첩되는 부분이 매우 많기에 복합적인 시각에서 키워가야 한다.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포터 교수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를 내세웠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CSV에 열광하는 분위기도 있다. CSR은 한국에서 정착이 불가능한가라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CSR과 CSV는 대체적인가? 보완적인가? CSR이 경영원칙이라면 CSV는 이를 실현해줄 수 있는 경영의 전략적 도구이다. CSV로 CSR을 대체할 수 없다.

개별 기업의 관점보다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공감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다소 작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미 세계 표준화가 만들어진 마당에 기업들이 CSV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CSR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평가를 높이는 것은 메커니즘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기업의 재무적 평가를 높일 수 있는가? 아직은 불투명한 점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연결되는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R is R'의 조건, 즉 'Responsible 하면 Return 된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 등이 코스피 지수보다 높았으나 요즘은 낮아졌다. CSR을 잘하면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것을 반박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값이 조금 비싸도 책임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많을 때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책임노동이 함께 갈 때 CSR이 정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이 함께 갈 때 책임 경쟁력(Responsible Competitive)이 높아질 것이다.

멀티매트릭스(Multi matrix)-CSR(기업사회책임), SRI(사회책임투자), SRC(사회책임소비), SRL(사회책임노동), SRS(사회책임학교), SRB(사회책임기업), SRG(사회책임정부) 등 모든 것이 함께 다자관계로 접근할 때 멀티매트릭스 시스템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국제협정(International Framework)을 살펴보면, 2007년의 중국 · 스웨덴 CSR MOU는 스웨덴과 중국이 국제협력의 도구로 이용한 사례이다. 2012년부터 노르딕 CSR Joint Project를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하나의 연대로 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위기가 끝나면 CSR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홍보수단이나 구호성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가 아니고 'CSR을 시작해서 위기가 극복되고 SR자본주의로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CSR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한국이나 일본은 발꿈치만 조금 높이면 된다. 사회책임자본주의를 높여서 자본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다케 요시키 일본 아프락(AFLAC) 창업자, 최고고문: 40년 전 일본에서 생명보험 회사를 창업했고, 아프락 창업정신 자체가 CSR, CSV와 연관되어 있다. 경영과 일본 사례를 함께 얘기하겠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경제산업성에서 내놓았다. 일본의 경영자 80퍼센트가 CSR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일본에는 창업 100년이 넘어선 기업이 25만 개가 있다.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전 세계 기업의 50퍼센트다. 200년 이상은 3,000개 이상이고, 1,000년 이상 된 기업도 14개 이상이다.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이 태어난 이유는 96퍼센트가 중소기업, 영세기업이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299명 이하인데, 2위 독일은 일본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이들은 경영이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종업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키워나간다. 투기나 투자에 손을 대지 않는다.

일본증권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한다.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지바 현 어미상인이라는 분이 상도를 지키면서 일하고 있다. 인간경영을 하려면 그런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가 커질수록 덕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은 조상들이 계승해준 정신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사회책임투자 자문회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공무원펀드를 포함해서 5조 정도 된다. 이 일을 하면서 기업의 CSR을 지켜보았다. 외견상으로는 굴지의 기업들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40여 기업이 CS팀을 운영하고 있다. 숫자상으로는 성장해왔으나 기업의 자선활동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왔다.

법적 · 윤리적 책임 다음이 자선적 책임인데, 한국 기업에서는 총수 관련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사회적 책임을 홍보수단이자 워싱(washing)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다소 유감스럽다.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펀드가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남양유업의 사례처럼 소셜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팩트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홍보수단이나 구호성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선순환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CSR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퍼포먼스로 나타나야 한다. 정책입안은 시켰으나 환경지수와 동반성장지수가 낮아진다면 퍼포먼스와 연결이 안 되어서일 것이다.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선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CSR을 논의하면서 서구에서 발전된 모델이나 유명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슬프다. 한국적 재해석과 리패키징이 필요하다. 금융의 CSR과 가스산업의 CSR, 제조와 서비스의 CSR은 다를 수밖에 없기에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의 진정성을 보려면 좀 더 장기적으로 기업을 봐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기업이 너무 단기간에 집중하게 되면 CSR은 홍보수단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장기투자를 위해 세금공제나 전략적인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동반성장, 몰아주기 금지 등을 이야기한다면 재벌이나 보수층의 반발이 있다. 글로벌 로밍 CSR을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하겠다.

질문 1) 하라다료 일본 오사카 시 의원 공익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훌륭한 생각이라고 본다. 전 세계에서 CSR을 가장 잘하는 다국적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하다.

답변 1) 오다케 요시키 최고고문 CSR과 CSV의 기본이 되는 정신을 가진 경영자가 세계 각국에 많다. 자본주의 정신을 수정한다는 논의가 많이 벌어지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다 보니 불완전하다. 금융자본주의가 만연하면서 세계에 대량으로 돈이 넘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질문 2) 스즈키 시즈오, 일본 기업인 한국은 6년 전부터 기업을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국가가 법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600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들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답변 2) 류영재 대표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법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해주었다. 현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200개가 인증되었다. 취약계층 취업이라는 부분은 좋지만, 계속 이익을 만들어가면서 홀로서기를 해나가기가 어렵다. 98퍼센트 이상이 정부 지원이 끊기는 상황에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정부가 응석받이로 만든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정부 지원자금에 기웃거리게 한 것은 장래에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양적인 부분의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장은 멈추어 있다.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주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대적 의미의 경제는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가 같이 가기에 기간을 길게 보면 상호보완적이라고 봐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본 이념을 보라.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하면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익이 증가한다는 이기심의 경제학을 만들어냈다. 지금도 그 이론은 강하다.

정리
장소영 인간개발연구원 실장

비즈니스 넥스트 패러다임과 아시아의 미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1세기를 맞이한지 13년째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20세기에 정립된 낡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뒤로하고 어떤 변신을 시도하고 있을까? 21세기는 기업들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글로벌 석학들은 21세기형 창조경영 시대를 열려면 디지털화, 세계화, 민주화의 3가지 커다란 트렌드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본 세션에서는 지구촌에 어떤 변화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비즈니스계의 새로운 승자가 되기 위해 어떤 변신과 준비가 필요한지, 기업 앞에 다가오는 비즈니스의 넥스트 패러다임은 무엇인지를 집중 조명해보았다. 특히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이동 방정식, 지구촌을 바꾸고 있는 넥스트 패러다임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CEO들이 기업경영 사례를 통해 비즈니스계의 넥스트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좌장 겸 사회

최은수 MBN 정치부장

발표

문경안 ㈜볼빅 회장
정병국 한국 3M 대표이사 사장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이사
안태국 투스카로라 대표이사

최은수 MBN 정치부장: 21세기 기업 경영 모델이 바뀌고 있다. 세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수직사회가 수평사회의 양방향(two-way) 체제로 변했다는 점이다. 명령과 복종이 중시되던 수직사회의 일방형 조직은 고객과 소통하는 양방향의 수평형 조직으로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푸시(push)의 시대에서 풀(Pull)의 시대로 변했다는 점이다. 기업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을 고객에게 강요하는 푸시의 법칙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의 생각을 미리 읽는 풀의 법칙으로 기업 경영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변화는 사람이 일하는 피플워킹(people working) 시대에서 돈과 시스템이 일하는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중요한 변화는 이성의 시대가 감성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 정책보다 디자인,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감성적 접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소셜 시대의 도래에 주목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초연결성을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문경안 ㈜볼빅 회장: 볼빅은 흑백 골프공 시대를 끝내기 위해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했다. 어떻게 브랜드를 키울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컬러볼 컨셉을 생각해냈다. 컬러볼은 볼의 식별을 쉽게 해주고 누구 볼인지 쉽게 찾을 수 있게 편리성까지 가져다주었다.

컬러볼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뽑기와 같은 마케팅 도구를 개발했고, 세계적인 프로선수들을 후원했다. 프로들이 좋아하고 캐디들이 추천하는 볼이 되자 컬러볼 매출도 급증했다. 시장점유율 3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급증했다.

정병국 한국 3M 대표이사 사장: 3M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같은 장수기업의 비결 뒤에는 혁신의 노력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8,000여 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에게 '창조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15퍼센트의 룰을 도입해 하루 근무시간의 15퍼센트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고 있다. 잠을 자든지, 영화를 보든지, 회사는 상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도는 40퍼센트의 법칙이다. 5년 동안 만든 신제품이 당해 연도 매출의 40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게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기술을 융합하고 세상의 메가트렌드에 접목해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가고 있다.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 대기업의 영업사원을 마지막으로 비타민하우스를 창업했다. 비타민하우스의 성공 비결은 '발상의 전환을 한 아이디어'였다. 샵인샵(shop in shop) 개념을 도입해 약국 안에 비타민하우스 전용 판매대를 만들었다. 나아가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영양사들을 약국에서 비타민하우스를 판매하는 '상담영양사'로 취업시켰다. 비타민하우스 제품 매출이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명령과 복종이 중시되던 수직사회의 일방형 조직은 고객과 소통하는 양방향의 수평형 조직으로 변신을 요구

세 번째는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후발업체로서 나중에 납품대금을 받으면 경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선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 그 결과 회사가 자금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아가 연령대별 맞춤형 비타민을 개발해 고객의 니즈를 찾아주었다.

안태국 투스카로라 대표: 투스카로라는 레저, 아웃도어 토털 회사이다. 아웃도어 시장은 6조4,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대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 투스카로라는 '착한 기업'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특정 아이템 하나를 1등 제품으로 육성해 이 제품이 다른 제품 매출을 끌어 올릴 수 있게 했다.

착한 기업으로 승부를 겨루기 위해 4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을 공략했다. 이곳에서 가격 거품을 완전히 제거해 '착한 가격'으로 승부했다. 고품질 제품이지만 받을 가격만 받자 고객들이 진정성을 알아주게 됐다. 이어 고품질 제품을 받을 가격에 파는 '행복 제품'으로 승부했다. 세 번째는 협력업체-유통업체-고객 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행복기업'의 개념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에 앞장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공유가치를 창출해냈다.

정리
유길상 한국어교사 원격평생교육원 대표이사 사장

증권업 환경의 변화와 리서치센터의 역할

한경비즈니스

최근 증권업계는 변화의 필요성과 맞닥뜨렸다. 이유는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증권사들의 주수익원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주식거래 수수료였다. 이 중 기관투자자의 거래에 있어서 리서치센터의 분석은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를 통해 리서치센터가 수익원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리서치센터의 수익성이 급감하는 중이다. 물론 앞으로도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본 세션에서는 이렇듯 변화한 증권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리서치센터들의 전략을 소개해보았다.

사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발표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애널리스트들에게 진한 동료애를 느낀다. 돌이켜보면 리서치 업무가 한때 큰 영광을 얻은 적이 있었다. 작게는 투자자를 위해, 크게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왔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상황이 참 어렵다.

먼저 기존 증권 시장에 비해 리서치 업무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투자자들이 주식투자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오차가 크고 방향성이 다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리서치 자료의 범위가 국내의 특정기업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매매의 패턴이 변했다. 프로그램 매매 혹은 인덱스형 거래의 증가가 그것이다. 또 증권사 간의 경쟁 격화로 낮아진 주식거래 수수료도 리서치센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주식 중심의 리서치센터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금융시장의 업종별 상품규모 추이를 보자. 증권의 비중은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09년 41.2퍼센트에

달하던 증권 관련 금융상품은 2012년 1분기 38.8퍼센트까지 줄었다. 실제로 증권업의 수수료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주식뿐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의 수수료율도 줄어들고 있다.

증권업 1인당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 있다. 2009년 7,000만 원 수준이던 것은 2011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당연히 증권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 은행 이자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리서치와 가장 연관이 많은 법인영업을 보자. 2003년 기준 프로그램 거래는 16퍼센트였으나, 지금은 프로그램이 38퍼센트에 달한다. 한편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의 리서치 폴은 순위와 실제 법인영업 거래량의 상관도는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한국 증권사보다 더 수익에 민감한 외국계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글로벌 IB는 기관 주식영업에서 사람이 직접 하는 리서치 비중을 줄이고 기계화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국내 시장은 아직 브로커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나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갈 것인가. 먼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해외 종목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해외 증권사와 정보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주식뿐 아니라 채권, 금융상품 등에 대해 분석까지 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해외 채권 및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리서치 내에서 급여 차별화를 확대해야 한다.

예전보다 상황은 어려워졌다.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늘어났다. 요구되는 사항은 더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는 덜 자고 연구의 범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국내 리서치센터는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KTB투자증권은 생긴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리서치센터의 능력은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고민을 많이 했다. 특색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업종의 현황이 어려워지고 애널리스트가 한계에 부딪힌

이미 글로벌 IB는 기관 주식영업에서 사람이 직접 하는 리서치 비중을 줄이고 기계화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국내 시장은 아직 브로커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으나 변화는 있을 것

것은 맞다.

각 증권사 그룹마다 특징이 있다. 그래서 KTB투자증권의 1기가 어떻게 안착하느냐 고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2기가 왔다. 2기는 KTB그룹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했다. 이전의 리서치센터를 이노비즈 리서치와 코어비즈 리서치로 나누었다.

이전의 리서치센터들이 했던 일들은 주로 코어비즈 쪽이 담당한다. 코어비즈는 이코노미파트와 라지캡(Large Cap) 경기산업이 포함됐다. 특히 효율화를 극대화했다. KTB그룹의 핵심은 IB(Investment Bank) · PE(Private Equity)에 있다. 그래서 KTB리서치는 그룹 안의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노비즈파트는 테크 소프트웨어, 미디어 바이오 등을 맡고 있다. 다른 소형주(Small Cap)와 다른 점이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수는 1,800~1,900개인데, 실제 리서치센터에서 분석하는 기업 수는 100여 개밖에 안 된다. 아울러 소형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리포트가 별로 없다. 일종의 시황이라고 본다. 그래서 대형주 분석 애널리스트와 중 · 소형주 분석 애널리스트들을 섞어 수직계열화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어 IT 소형주에 가장 강한 사람은 삼성전자 애널리스트일 수도 있다. 아울러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즉 그룹의 여러 가지 사업, 이를테면 벤처투자, 사모 펀드 등의 투자를 돕는 것도 고려 중이다.

무엇보다 생산성이 중요하다. 국내 중형 증권사의 라이팅 애널리스트는 20여 명 정도다. 즉,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비슷한 관점이나 타 증권사와 비슷한 자료는 지양하려 한다. 아울러 자동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이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우리투자증권友는 에셋클래스의 다양화, KTB는 내부 역량의 강화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각 패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확실히 비주식 금융상품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이다. 그래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 데 많은 역량을 기울인다. 물론 최근 리서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흐름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틀렸다. 타 연구기관 등에 비해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보고서의 질은 훨씬 높다. 세상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목표는 확실하다. 개인의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금이나 투자기관에서 애널리스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많다. 나아가 각 대기업도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을 더욱더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특히 시니어 애널리스트에게 자신의 영역에 갇혀 있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불과 3~4년 전보다 애널리스트의 업무는 많아졌다. 두 배는 된 것 같다. 특히 분석 업무보다 서비스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 고민이다. 질적인 측면보다 양만 늘어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연구해보자는 입장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애널리스트의 역량을 보다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애널리스트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고객들에게는 재무설계, 인생설계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 IB고객들에게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기업고객들에게는 신사업 진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즉 '아이디어'를 더 키워야 한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시대다. 저성장 시대에선 기존처럼 주식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기만 하진 않는다. 즉 이제는 전체 주식 중 오르는 종목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때 필요한 게 관점의 전환이 아닌가 한다. 즉 '떨어지는 종목'을 찾는 애널리스트가 진정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다. 그간 한국의 애널리스트들의 문제 중 하나는 '바이(buy)'만 외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정말 '셀(sell)'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이는 기업,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반의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 사실 애널리스트가 쉽게 셀 리포트를 쓰기는 힘들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업계 전체 혹은 금융 당국에서 어떤 '룰', 이를테면 셀 리포트를 반드시 쓰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애널리스트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때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한국의 자산운용시장은 이제 완전히 변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개인고객의 돈보다는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의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분의 5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200곳이나 된다. 이 주식은 팔기

힘들다. 거래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즉 국내 기관 영업은 아예 게임의 룰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결국 영미계 혹은 중국계 자금의 한국 투자자금을 국내 증권사들이 거래하는 것이 새 수익원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모두 글로벌 IB의 몫이다.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줄 때가 된 게 아닌가 싶다. 한국의 증권산업은 위기에 몰려 있다. 특히 리서치의 경우 더하다. 자칫하면 안방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한국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보는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현대차를 분석할 때 글로벌 경쟁사까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부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센터장 및 한경비즈니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현재의 언론사 폴, 그리고 리서치센터 내의 중요도가 너무 주식 쪽에 쏠려 있다. 현재 비주식 금융상품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아졌다. 이런 점을 애널리스트 평가와 리서치 내 비중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임진균 IBK 센터장: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무조건 훨씬 중요해진다. 즉 저성장시대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무척 힘든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다. 애널리스트 무용론이란 일종의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본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애널리스트의 생산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애널리스트의 업무 성과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리
이홍표 한경비즈니스 기자

아시아의 연대협력과 신사업 신기술이 세계를 구한다

일본 다마대학교

아시아 대표국가 한 · 중 · 일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뒤로 하고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이다.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가 연대협력할 때 유럽연합처럼 화폐개혁까지는 힘들지라도, 새로운 구도의 경제적 파워와 시너지가 탄생할 수 있다. 경제적 성장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신흥대국 G20 대열의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아가 아닌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연구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하나로 아시아를 파악할 수 없고, 한국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대화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과는 역시 역사로도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으나, 아시아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한 신사업 신기술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함께 계획하고 설계해가면서 만들어 갈 한 · 일 경제협력을 논의해 보았다.

주제발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토론
가와이 아유무 일본 야마토 그룹 대표
조우진 일본 다마대학교 교수
교도쿠 테츠오 일본 BE 연구소 소장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은 아시아 시대를 맞이해서 아시아 3국(한국 · 일본 · 중국)은 지금 세계 제2의 국가로서 일등 국가인 미국과 함께 나란히 견주는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3국 간의 번영과 변화를 일으켜서 아시아의 행복, 평화를 기원하며 새로운 물결의 아시아 3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를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와이 아유무 일본 야마토 그룹 대표는 전 세계의 리스크 중 대표적인 것이 수자원 리스크라고 말했다. 물이 있어도 그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고, 이 전염병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와 고령자들을 죽음으로 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찍이 창업하여 IT사업을 통해 상장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물 때문에 죽어가는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 물을 이온화해서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사례1〉 먼저 다마 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오사카 히마와리 유치원에 독감 억제 실험을 해보았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실제로 교실에 가습기를 설치하고 가동해서 어떠한 억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독감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작년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치원이나 고령자 복지시설에서 독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는 전염병 예방이 중요하다.

〈사례2〉 2012년 12월 케냐에 갔을 때, 그곳에 사는 마사이 족은 빗물에 마실 물을 의지하고 있었다. 빗물이 마르면 강물에 의존해야 하는데, 강물을 긷던 여성이 악어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자연의 깨끗한 빗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잡균이 엄청나게 번식한다. 그래서 이 빗물을 탱크에 받아 물을 이온화시켰다. 그 결과 탱크의 물은 썩지도 않고, 잡균에 오염되지 않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사례3〉 대규모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했을 때 재해 규모는 오리무중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콜레라의 우려 때문에 오염된 물로 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오염된 물에 이온화 방법을 사용하니 잡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이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예정이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공헌을 일본에서부터 서서히 시작하고자 한다.

아시아 3국 (한국 · 일본 · 중국)은 지금 세계 제2의 국가로서 일등 국가인 미국과 함께 나란히 견주는 국가가 되었으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교도쿠 테츠오 일본 BE 연구소 소장은 45년 전 하네다 공항에 한 미국인이 내렸는데, 그는 매우 충격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미래연구소 소장이었던 하먼 칸이었는데, 일본인에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21세기는 일본의 세기이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먼 칸은 21세기가 왜 일본의 세기라고 했는가?

첫째는 일본인의 근면함 때문이라고 했다. 뉴욕의 빌딩을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곳은 십중팔구 일본인의 사무실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 관료들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관료가 되려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하며, 실제로 그들은 굉장히 우수하다. 셋째, 일본인의 저축성이다. 1,400조 엔의 저금이 지금 일본에 있다. 일본사람은 저금을 굉장히 좋아한다. 넷째, 일할 사람의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틀림없이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일본의 세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쿄도쿠 소장은 되물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근면 성실한가, 세계대학이 맞는가, 일본 관료가 우수한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물론 일본인은 분명히 저축을 좋아하는 민족은 맞다. 임금도 값이 저렴했지만, 지금은 그때처럼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붕괴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일단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 어찌 보면 그동안은 평화와 풍요로움에 젖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하면 칸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붕괴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교도쿠 소장은 안동에서 구입한 지팡이를 짚고 오늘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이퇴계 선생은 500년 전에 일본의 선인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었던 유학자였는데, 그래서 안동에서 구입한 이 지팡이를 쓸 때마다 한국의 아주 커다란 그분이 남겼던 가르침이 자신에게 전해지고 무엇보다 동양의 가르침은 그 깊이가 아주 깊다고 말했다. 우리 현대인들은 광범위한 것을 원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것보다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인이 두께가 없어지고 얇아졌다고 말했다. 또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게, 두께,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인간의 최고 가치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21세기는 일본의 세기라고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적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양의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고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인데, 그는 국가가 침몰하는 것은 첫째, 철학이 없는 정치를 할 때이고, 둘째는 감성 없는 지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이나 지성, 개념 논리가 감성으로 뒷받침되느냐가 중요하다.

국가가 침몰하는 것은 첫째, 철학이 없는 정치를 할 때이고, 둘째는 감성 없는 지성 때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구 구조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끼리 협의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예컨대 산성비와 온난화 같은 환경문제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문제도 국경을 초월한 아시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자원문제라고 말했다. 자원문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국가별 자연적인 문제를 지도로 표시해보면 특히 아시아 지역에 리스크가 높은 나라가 많다고 보았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 아시아의 공통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수준은 물론이거니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큰 문제이며, 인류 공통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이노베이션이 화두가 된다. 아베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중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종래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이한다는 발상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위기감이 선행하는 발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이라 한다면 예컨대 지금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아시아 경제 성장률은 2012년에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받아 기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개념도 바뀌고 있다. 아시아는 21세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그만큼 아시아라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의 과제가 세계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공통의 미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경이 없어지는 현상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당연히 과학기술 아카데미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이하면서 아시아라는 틀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오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에서도 가속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인도, 아프리카 국가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 미 · 일 과학기술협력 합동 고급위원회는 미국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말했다. 일본의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일본이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이 닫히지 않는 형태로서 할 필요가 있다. 학술계에서는 국제 공저 논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한 나라에 닫혀 있지 않고 국제적으로 갈고 닦는 환경이 오래전부터 이행됐다고 말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세계적으로 국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 중국 ·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한 대학교육프로젝트인 캠퍼스아시아가 착실하게 진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관으로서 글로벌 인재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적으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협동해야 할 의의가 있으며, 한발 앞서 가 공통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같이 생각해 나가는 자세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생각을 시프트하고,

그 집합으로서 사회 전체를 시프트하며, 공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태껏 좋다고 생각되던 것이 나쁜 것으로, 지금까지 위였던 것이 아래가 되는 그러한 가치관의 역전이라고 설명했다.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가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지성이라고 말했다. 지성에 비중을 둔 시대가 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영상미디어 분야에서는 '케이팝'이라든지 제주도가 촬영지였던 '대장금'과 같은 한국 드라마가 매일 일본에서 방영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개개인으로서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속에서 국경의 벽은 점점 낮아지고, 같은 현상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해줬으면 한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시프트 시대의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과학기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리

호경아 인간개발연구원 과장

글로벌 애널리스트 평가의 현황과 한국적 발전 방향

한경비즈니스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의 꽃'이라 불린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주식 시장을 움직인다. 그러나 이들이 거두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 언론사나 평가기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애널리스트의 성과를 측정한다. 본 세션에서는 세계적으로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금융투자업의 환경에 맞는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발표
김동순 중앙대학교 교수

김동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 평가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중요하게 연구되어왔다. 애널리스트에 대해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본다.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영미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평가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스티튜트인베스터((Institutional Investor, 이하 인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월스)이다.

인인 평가는 정성적 방식이다. 주로 펀드매니저에게 애널리스트들의 주식종목 선정, 이익 예측치 보고서의 질, 전반적인 서비스를 4점 척도로 묻는다. 펀드매니저의 선정은 자산운용사의 사이즈에 따른다. 월스 평가는 정량적 방식이다. 최소한 4개 이상의 주식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기반으로 목표 주가의 1년 수익률을 평가한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 평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각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역할이 2라면 부정적인 역할이 1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언론사 평가에서 톱 랭커들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은 시장을 7퍼센트 정도 이긴다.

그럼 외국계 증권사는 어떻게 내부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지 보자. 주로 고객사의 만족도이다. 국내 증권사 역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애널리스트를 평가 중이다. 물론 증권사 자체 평가의 경우, 지나치게 단기 성과 위주로 평가가 진행된다. 언론 폴도 비슷하다. 단기 성과가 중시된다. 특히 일종의 미인대회와 같은 성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있다. 먼저 언론 폴은 좀 더 계량화된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육성도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업계 전반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에서 일종의 연구개발(R&D) 부서다. R&D 없이는 기업의 성장도 없다.

이준재 리서치센터장: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큰 것이 사실이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가 되어야 한다.

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정량적 방법을 도입해야 할 시기가 됐다. 그래야 경험이 적은 애널리스트도 성장이 가능하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각 증권사별로 특화되는 분위기가 있다. 혹시 외국의 사례에서 각 증권사별로 가지는 특징을 평가하는 애널리스트 폴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리
이홍표 한경비즈니스 기자

Interpretation: KOREAN/ENGLISH
14:00-15:20

제4장

자연환경과 인류복지

개발도상국가의 친환경적 개발의 방향과 이슈

제주한라대학교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사회개발의 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개발의 절대적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류공영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친환경적 도시 개발의 경험과 이슈를 에코시티 개발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사회
전용욱 세종대학교 부총장

발표
정회성 사단법인 환경과 문명 대표

토론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원장
이주연 포스코 ICT 전무이사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전회성 사단법인 환경과 문명 대표는 현대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빈곤과 환경문제이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지구온난화 등은 과잉 소비와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가 많은 국가는 저개발 국가이고,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개발도상국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삶의 질 개선과 환경보전이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가장 큰 이슈이며, 대량빈곤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가는 환경악화와 기후변화의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개발과 환경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증가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Human Environment)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보호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후에도 UN새천년개발목표(UN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이어졌으나 다수 국가가 극단적인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2012 Rio+20 정상회의에서는 "The Future We Want"라는 의제로 지속 가능한 개발, 녹색경제, 빈곤 퇴치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비전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개발은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빈곤 극복은 개발도상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는 개발 전략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성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대학원 원장은 환경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환경 정책 전략을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국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화학공업에 치중된 산업단지의 발전으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또한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에 있으며, 이 지역의 오염 물질량이 산업단지보다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 지역 특색에 적합한 환경 정책과 대체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국제협력의 활성화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제주가 천혜의 자연경관,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지닌 학술적 ·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문성종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과 환경 자산의 가치보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태환경 보존 및 탄소 흡수원의 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기후변화로 가장 피해가 많은 국가는 저개발 국가이고,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개발도상국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공간계획에 대한 소개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전략이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의 환경도시(ECO-CITY)로 자리매김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환경오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특색에 적합한 환경 정책, 대체에너지의 개발, 국제협력의 활성화가 필요.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됨.
- 환경친화적 개발은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빈곤 극복은 개발도상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는 개발 전략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성 유도가 중요함.

정리
이준호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

동아시아 기후변화와 수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남북극과 고산지대의 빙하감소 등으로 전 지구적 해양순환대류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발생하였다. 육지 및 해양환경 생태계가 예측 곤란한 방향으로 변동되면서 동아시아 해양어종의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해양환경의 변화가 어종의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다양성을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사회 및 인사말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김수암 부경대학교 교수
샨 시우쥐엔 중국황해수산연구소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수암 부경대학교 교수: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해역은 전 세계 수산업에서 어획산업 36퍼센트, 양식산업 80퍼센트를 차지하며, 수산업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장이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해양의 수온 변화로 볼 때 우리나라 주변이 가장 크게 온난화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의 어류 분포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한 예로 고등어가 현재 많이 북상하여 분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해양생물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의 산성화에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산성화로 인해 산호초 지역이 황폐화되면 그 지역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전멸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밀집한 양식장의 피해 가속화, 태풍으로 인한 해안 지반 피해와 어업 일수 감소 등의 피해가 있다. 강수 증가 및 강수 감소 역시 어업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어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어민들이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아시아는 세계 수산업의 창고이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현재 실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 전반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어업협정 및 국가 간 어업 관리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

샨 시우쥐엔 중국황해수산연구소: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기후변화, 오염, 서식지 파괴, 남획 등이 있는데, 그중 기후변화 영향이 지대하다. 지구온난화는 명백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으로 그 정도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64개 지역 해양생태계 중 59개 지역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기후변화는 수산업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는 해양자원 피해와 어획량 감소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 감소, 세계 무역 악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후변화는 해양의 수온과 염도, 강수량 등에 변화를 초래하며, 어류 자원은 변화한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느라 생리학적 · 행태학적 변화를 겪게 된다. 플랑크톤이나 불가사리가 대량으로 발견되거나, 생태계가 어류 주도에서 해파리 주도의 생태계로 변모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1970년에는 한류성 어종이 주로 존재하였고, 2000년에는 아열대성 어종이 주로 존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종의 다양성이 줄고 있다. 미래의 온대 지역과 열대 지역의 어류는 오직 열대성 어류만이 존재하고, 아열대성 어류와 온대성 어류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 결과, 미래에 열대 어종이 주가 되어 우리의 식량이 변하고, 어종의 변화에 따라 국가 경제, 더 나아가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산업에서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어종 서식지 파괴, 어종 분포도 감소,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등의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황해에 관련해서, 계절 변화를 기준으로 중국의 어획량을 살펴본 결과, 소형 어류, 특히 참조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1960~2008년을 비교한 결과 참조기의 성장 계수, 연령 구조, 크기 변화, 전체 폐사율, 번식 현황 변화, 번식 가능한 연령대 변화 등 생리적 · 생태적 변화가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어업협정 및 국가 간 어업 관리기구를 출범시켜야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1980년대의 먹이사슬과 현재가 완연히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처럼 먹이사슬이 바꾸어놓고, 어종의 영양 상태, 어종의 성장, 어류의 생식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어류를 비롯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생물 종들이 발견된다.

황해에서 환경변화가 생태계 자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북태평양에서도 유사하리라 추정된다. 이에 수산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변화로 이에 의해 수산업이 붕괴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는 주요 어종의 변화, 새로운 어종 출현,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백화현상 등이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구조 시스템을 바꾸어가야 하며, 이에 맞는 수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수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서는 어종별 실시간 생산량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별 어업 취약성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수립 방안으로 어업별 · 어종별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저감 방안 강구, 어업 생산의 구조 변경, 녹색성장과의 연계, 어촌 공동체들의 역량 강화, 어업제도의 유연화, 국제적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한다. 이들은 피해 완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하는 정책 수립에 큰 힌트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구조 시스템을 바꾸어가야 하며, 이에 맞는 수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

질문 1) 김준택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동북아시아 해역의 수산자원 관리법칙기구에 대해 한국 · 중국 · 일본에서 동북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1) 김수암 교수 정부 간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행동 없이는 힘들다.

질문 2)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 소장 북한과 수산 데이터를 공유하는가?

답변 2) 샨 시우쥐엔 중국황해수산연구소 한국과 중국 간에만 데이터를 공유한다. 북한은 공유

가 아니라 참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역해양생태계(LME, Large Marine Ecosystem) 프로젝트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3) 박윤곽 한국수산 서귀포 서해 기후변화에 관련한 연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가?

답변 3) 샨 시우쥐엔 중국황해수산연구소 중국에서 최근 들어서 서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현재는 결과 및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자료를 모니터링 중이다.

질문 4) 강재관 해양수산연구원 기후변화를 보면 온난화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 제주도 어민들은 오히려 수온이 내려가서 어장 형성이 안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농작물 지도처럼 어장 예측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답변 4) 정석근 제주대학교 교수 기후변화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개념이다. 기후변화는 짧은 기간이 아닌 50~100년의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 어장 예측 지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방어, 삼치, 참다랑어의 북상 경향이 있고, 멸치는 일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추후 정리하여 발표 예정이다.

질문 5) 송창수 서귀포시청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데이터가 있는가? 수산업에서의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그 비중이 미미할 텐데 의미가 있는가?

답변 5) 김도훈 교수 수산업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더라도 탄소배출량을 검증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도 선진국이 시행하는 방식처럼, 탄소배출을 적게 하여 잡은 어류를 구분하여 이에 환경 라벨을 붙여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선행연구 분석 필요.
- 국가 간의 어업협정 및 국가 간 어업관리기구 출범을 제안.
- 수산자원 관리법칙기구에 대해 한 · 중 · 일을 넘어 동북아시아로 확대하도록 정부 간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
- 우리나라 정부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업인과 민간인들의 정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간 생산량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어업별 · 어종별 취약성 평가해야 함.

정리
하승목 제주대학교

기상-관광 융 · 복합 모델을 통한 기상산업 성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우리나라는 전 지구 평균보다 기온 상승폭이 2배에 이르는 등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인간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 및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을 중심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후변화 적응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급변하는 기후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상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풍력 등) 산업과 연계된 지역의 발전 모델과 관광 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기상-풍력-관광 융 · 복합 모델을 통한 기상과 에너지, 기상과 관광을 접목하여 토론하였다.

사회

김백조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장

발표

조석준 前 기상청장

토론

이중환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
양경호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과장

조석준 전 기상청장: 이상기후와 기상변화의 진폭이 커짐에 따라 기상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관측은 이제는 날씨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사막, 가뭄화, 물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I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른 새로운 기후변화 예측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은 강수량은 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가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시스템은 전 세계 7위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관측한 기상정보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관측 정보를 토대로 기후모델을 만들고 정책 형성에 참고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 추적 시스템, 상세 시나리오 작성, 지역 맞춤형 기상 · 기후 정보제공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는 7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제주 날씨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스토리가 있는 관광으로 기후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상품화하거나, 제주 물 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의 기상 기후변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양경호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기후변화와 관광의 관계는 쌍방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기온과 날씨가 크게 차이 나는 편이다. 이런 제주도의 기후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날씨관광 지수 개발이다. 제주도의 다양한 관광상품에 따른 지수를 개발하는 것인데, 일례로 승마 쾌적 지수, 골프 라운딩 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둘째, 날씨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오름 걷기나 장마의 민속 관광상품, 익스트림 스포츠 등 날씨 맞춤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날씨보험이다. 날씨보험은 악천후로 인해 관광하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2009년 삼성에서 이와 같은 날씨 관련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델로 삼아 제주 관광과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날씨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상품이 있다. 제주도 날씨를 제주 지역의 역사, 토속문화 등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환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 기존의 에너지원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안전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풍력발전은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030년 제주 지역 해상 풍력에너지의 개발을 계획 중이다. 또한 이런 풍력발전과 관광산업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풍력-관광-기상 산업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기상예보도 풍력발전과 연관해서 영향 평가와 낙뢰 대비 및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에 기상데이터 융복합 실무팀을 제안한다.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맞춤형 날씨 관광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일차 풍력, 태양광, 조력발전, 에너지개발연구원, 염분차 발전, 망고 재배, 아열대 산업 등의 상품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여름철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기후

기존의 에너지원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안전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체험센터, 태풍 관련 체험센터 등의 체험센터가 필요하다. 기상기후기술 국제교류센터가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 풍력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협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과장: 지금까지의 지구의 기후변화로 봤을 때, 간빙기와 4도 차이가 나고, 앞으로의 기온도 3도가량 상승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에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위험한 기상 요인들은 관광과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저탄소 관광, 슬로시티 등 생태학적인 관광이 필요하다.

정리
신진호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연구관

기후변화 대응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원의 효율적 구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세계적으로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겨울철 기온 상승이 두드러져 온난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률 또한 매우 높다.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탄소 제로 섬)'라는 정책을 내세워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을 보전하고,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에너지의 융 · 복합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사회

김동국 제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소장

발표

김일환 제주대학교 교수

토론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오시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PD
문성창 한국전력공사 팀장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남재철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국립기상연구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서귀포시로 이전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 건설은 97퍼센트 이상 진행되었고, 내년 완공과 동시에 연구직원 200명이 입주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립기상연구소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풍력에너지와 자원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미래의 풍력 예측 시스템 역시 기상연구소에서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풍력단지 조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안전문제 또한 세심하게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시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PD: 앨빈 토플러는『부의 미래』에서 에너지 문제가 일부 계층에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에너지 관련 논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발전 방향과 단계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학계나 관계자들의 기존 연구 발표를 참고하면,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방향에서의 에너지 개념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 수치에서 보면 연구수요 추이 변화와 과거의 데이터를 추정하여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도출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일관적인 데이터 추정치보다 더 면밀하게 변화를 반영할 예측 통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번 연구발표에서 2019년 예상하는 데이터에서는 너무 빠른 용량을 연구한 것 같다. 본 연구의 용량은 실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그리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결국은 해상풍력을 연구하고 실현할 도입기를 15년이나 18년 이후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 추정치에만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향후 적극적인 연구를 이어간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좀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화에 대한 논의에서 전기자동차가 비즈니스 모델인지 기술 모델인지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이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넷째, 스마트그리드가 제주도를 수출기지라 발표했는데, 제주도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관련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등, 관심을 갖고 여러 신생 에너지 연구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에 공감한다.

문성창 한국전력공사 팀장: 풍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풍력은 에너지 발생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기상이나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 부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풍력은 연료가 따로 필요 없으나, 많은 풍력을 연계하여 한계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용량 저장장치를 사용하여 한계용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풍력 발전을 제주자치도에 한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즉, 바람 많은 동쪽과 서쪽에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고려한다면 육지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풍력 발전을 제주자치도에 한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이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신재생에너지 중에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탄소 제로 섬)'로 만들자는 것은 좋은 방향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요즘에는 환경, 에너지 급등,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다. 현실적이고 원천적으로는 현재 공급되는 자원인 '원자력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청정에너지 공급과 수요자에 대한 논의에서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에 대한 문제를 과거부터 계속 논의해 왔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많이 논의한 것처럼 이제는 최신 에너지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관리가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에너지 공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에너지 형태와 소비구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앞으로 대규모보다는 중소 규모로 바뀌어야 하며, 재생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둘째로, 분야별로 연계해서 가야 한다. 즉 도시계획과 도로, 환경 관련 부서들이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건물과 관련해서도 건축학과 연계해서 건물 구조를 연구하고, 급탕과 난방, 순환관계 등도 검토해야 한다. 여러 분야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코디네이터도 있어야 한다. 제주 지역은 풍력 발전만 논의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저장과 변환을 같이 연구해야 한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서비스 개념이 없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 개념을 부여해야 한다. 에너지 발전과 개발에 국민도 긍정적인 사고와 관심을 품고 함께 연구해야 한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김일환 제주대학교 교수: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여가'를 갖게 되며, 3만 달러에 이르면 '힐링'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갖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와 관계자들이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홍보와

연구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지금은 '에너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면서 국민이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실례로 영국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바탕은 국민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 각자의 의식에 '클린에너지'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에 나서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제주 지역이 풍력단지 조성에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지역의 특성상 태풍이나 자연재해 같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도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연구는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계적인 부분으로 연구하였음. 하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는 데이터보다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풍력은 안전 부문에서 많은 해결 과제가 있음. 사전에 연구된다면 바람 많은 동쪽과 서쪽에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여 육지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과정까지 연구해야 함.
- 환경과 에너지 급등,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현실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에너지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관심 역시 필요함.

정리
김홍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와 섬 지역의 물 관리 전략

제주개발공사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섬 지역의 물 공급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이 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수문지질학적 환경을 지닌 하와이 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 사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관리 전략을 모색하였다.

개회사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발표

윌리엄 탐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윌리엄 탐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하와이 섬의 담수는 강수량 감소, 온도 상승, 물 수요 증가로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관리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하수 관정 분포패턴을 재구성하고, 효과적인 산림 관리를 통하여 더 많은 양의 강우와 안개비를 집수하고 보전하며, 폭우와 유출수를 집수하여 재사용하고, 폐수를 처리하여 재사용하며, 그리고 효과적인 물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강우는 하와이 주 섬들의 1차적인 담수원이다. 자연에서 강우를 집수하고 보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하며, 담수 공급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의 도전은 물방울이 지면에 닿는 순간부터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관리하고 유속을 늦추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하수 관정은 조율되지 않는 상태로 개발되어 있었다. 관정 주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관정 위치를 선정할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 이것은 관정의 수량과 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아주 적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수원들로부터 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정 간격 유지가 시행될 필요가 생겼다. 관정 분포를 최적화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대수층으로 함양되는 물의 양이 감소할 때 특히 중요하다.

기후변화의 초기 예상은 강수량이 향후 100년 동안에 걸쳐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섬들의 경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섬 대부분은 물길의 흐름을 바꿀 강도 없다. 강수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분산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고, 이로써 섬 공동체는 더 많은 양의 빗물을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수계의 상류 산림지역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은 불균형한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식물종들이 어떻게 물을 빨아들이고 사용하는지, 또 증산작용으로 물이 어떻게 손실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산림관리 업무가 수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종들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적극적인 산림관리는 또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접근은 하수와 폭우의 재생 및 재사용에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역시 근해 해양 수와 산호초로의 토양 유실을 감소시키게 된다. 빗물을 집수하는 것은 대수층으로 함양될 수 있는 강우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근해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육상 기인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게 된다. 산호초는 기온 상승, 해양 산성화, 육상 기인 오염물질로 인하여 세계 전역에서 위협받고 있다. 농부들 역시 더 많은 표토를 유지할 방법이 있다면 반길 것이다.

기후변화는 또한 온도 상승의 결과로 식물이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물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 농업 부문의 물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잡용수(non-potable water)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 잠재적으로 대규모 존재하는 잡용수 원천은 하수 처리수이다. 제대로만 처리된다면, 다양한 음용 및 비음용 곡물에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물은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으므로 하수 재사용은 처리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하수를 처리하고 재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간 협조만이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물 절약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다. 섬의 한정된 담수 공급은 이 자원들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을 요구한다. 물 절약 프로그램들은 기술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물 소비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책정

구조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토지 사용 계획도 중요하다. 토지 사용 계획은 강우 패턴과 분포에 맞출 필요가 있다. 농작물 재배는 자연 강우로 필요한 관개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급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다른 자원들과는 달리 수자원은 모든 생명에게 필수적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 수준의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로컬 수준에 있다. 일련의 로컬 수준의 새로운 협력 조치를 지향하는 매우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이 시급하다. 우리는 국가 또는 심지어는 지방 규모의 대책들을 기다릴 수가 없다.

이중선체로 건조된 카누를 타고 1500년 전에 중앙 태평양을 가로질러 항해했던 하와이인들(그들을 안내할 대양에 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과 같이, 우리는 중간 궤도 수정을 하고 앞에 다가오는 폭풍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로를 변경해야만 한다. 우리는 실수를 경험하고, 배우며,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태평양 도시지역 섬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자 지하수 관정 분포 패턴 재구성, 효과적인 산림관리, 더 많은 양의 강우와 안개비 집수 · 보전, 폭우와 유출수의 집수와 재사용, 폐수 재활용 등의 효과적인 물 절약 정책을 펼침.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의 한정된 담수 자원에 대한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절약을 포함하는 수자원 관리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 관리 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정리
문수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과장

섬 지역 물 공급 시스템 혁신 방안

제주개발공사

이 세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물 공급 시스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수도 현황 및 개선방향과 선진 물공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표
이상호 국민대학교 교수
윤엄석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장

이상호 국민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인 물 부족 문제의 심화와 기존 물 관리 방식의 한계점 노출에 따라 효율적인 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지능적 물 관리 기술인 스마트 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융합하는 차세대 물 관리 시스템이며, IT 융합기술과 수자원 관리 기술, 인프라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용수의 다원적 생산과 관리, 그리고 물 공급의 최적화를 통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을 가능하게 한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몰타 섬의 경우, 섬 지역으로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었는데,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물 부족의 문제를 다양한 수원 확보로 해결하고자 한 호주 퀸즐랜드의 "워터그리드(Water Grid)" 사업이나 싱가포르의 "NEWater" 사업 등도 스마트 워터그리드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섬 지역의 혁신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다중 수자원의 활용, 물과 에너지 관리의 통합, 물 수요와 생산의 최적 제어 등이 필요하다.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이러한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물 관리 지능화 솔루션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검토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윤엄석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은 1,848.4제곱킬로미터이며, 제주시가 52.9퍼센트, 서귀포시가 47.1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천수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동부와 서부에는 하천 발달이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언덕 또는 해안변 등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자연부락을 형성하면서 물을 자체 공급하여 왔으나, 용천수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빗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는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설용량은 1일 50만 8,000세제곱미터, 1일 급수량은 20만 8,000세제곱미터, 1인 1일 급수량은 357리터이다. 취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저수지(어승생), 담수장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수장은 2012년 12월 말 기준, 총 18개로 광역 상수도 9개, 지방 상수도 9개 및 100여 개의 마을 상수도가 있으며, 정수 처리방식으로는 소독, 완속여과방식, 급속여과방식, 기타 막여과 순으로 하고 있다. 상수도보급률은 2000년대 중반 거의 100퍼센트를 달성하고 있으며, 상수도 관로는 총연장 5,345킬로미터이며, 이 중 도수관로가 72킬로미터(1.3퍼센트), 송수관로 425킬로미터(8.0퍼센트), 배수관로 1,827킬로미터(34.2퍼센트), 급수관로 3,020킬로미터(56.5퍼센트)로 전국 수도관로 총연장(17만 3,014킬로미터) 대비 약 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의 역사는 1953년 금산수원을 개발하여 공급한 것이 최초이며, 196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 및 어승생 수원지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근대식 상수도 공급이 시작되었다. 지역 간 균형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을 실시, 1996년 처음 시작하여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먹는 물 수질기준은 법정 58개 항목 외에도 자체 감시대상으로 38개 항목을 추가하여 2013년 현재 총 96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상수도 시설사업으로는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이 있다. 이는 제주도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1994~2000년까지 총 1,310억 원을 투자한 1단계 사업, 제주도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2000~2008년까지 총 996억 원을 투자한 2단계 사업, 2009~2013년 2월까지 총사업비 458억 7,500만원(국비 22,937, 지방비 22,937)을 투자한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인 3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진행 중이다. 또한, 도서 지역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 또는 마을 상수도를 연계시켜 지역 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망정비와 노후관 교체, 관망블록화사업과 누수탐사, 노후계량기 교체 등을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양적 팽창 등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상수도 사업도 시설 확충을 건설단계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개량 단계로 접어들어 있으며,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정량의 개발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유지관리에서 이슈화되는 과제는 유수율 향상 문제로, 관망 현대화를 통한 지능형 관망구축사업, 즉 스마트 워터그리드 구축사업,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 농작물 재배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 대규모 축산분뇨 등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깨끗한 지하수질 보존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수질 관리문제가 있으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게 되면서 원수 확보를 위한 동력비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점차 수질문제를 고려하여 지하수 개발이 중산간 지역으로 이용되면서 더욱 많은 동력비가 요구되고 있어 에너지 절감도 필요하다.

'제주도의 상수도는 지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상수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 수질 개선 등의 사업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지하수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지역은 지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자원은 없는 실정으로, 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후손에게 깨끗한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생명수로서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 적정량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제주도의 상수도는 지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 수질개선 등의 사업이 지속되어야 함.
- 섬 지역의 혁신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효율 향상과 다중 수자원의 활용, 물과 에너지 관리의 통합, 물 수요와 생산의 최적제어 등의 정책 필요함.
- 섬 지역의 경우, 스마트 워터그리드는 지역별 맞춤형 물 관리 지능화 솔루션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입과 검토가 필요함.

정리
문수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과장

물의 보전과 전략적 활용

제주개발공사

세계 물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자원의 보전전략 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세션에서는 고부가가치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보전전략과 더불어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종합토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형 물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표

윤성택 고려대학교 교수
고기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장

토론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준범 미육군극동공병단 박사
강기춘 제주대학교 박사
함세영 부산대학교 교수
김용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윤성택 고려대학교 교수: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관측망 자료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제주 지하수는 특징적으로 용존실리카 함량(중앙값 32피피엠)이 높은 반면, 총 용존이온 함량(중앙값 123피피엠)과 불소 농도(중앙값 0.1피피엠)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화산암 지역 지하수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한다.

지하수 대부분은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지하수(전체의 약 22퍼센트)에서는 특징적으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 지하수의 청정성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비량 조절 등 적극적인 수질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제주 '먹는샘물'의 지구화학(수질) 특성을 국내외 먹는샘물의 자료와 비교 평가하였다. 제주워터는 특징적으로 알칼리 유형의 Na−HCO3 유형을 나타내어 국내외 먹는샘물의 일반적인 수질 유형인 Ca−HCO3 유형과 대비되었다. 용존 성분 중에서는 특징적으로 용존실리카와 칼륨(K) 이온이

상대적으로 부화(富化)되어 있으며, 미량원소 중에서는 바나듐(V)의 함량이 현저히 높다. 또한, 질산성 질소와 황산염이온의 함량이 낮아 청정성을 나타내었다.

전 세계적으로 시판 중인 병입수 약 4,000여 브랜드 제품의 수화학(수질)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화학(수질)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제주워터의 수질 특성은 '청정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차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제주워터의 pH(중앙값 7.8) 및 용존실리카 함량(중앙값 약 30피피엠)은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며, 오염 지표인 질산성 질소 함량은 현저히 낮아 하위 20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용존실리카는 골격의 건강을 돕고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제주워터의 바나듐 함량(중앙값 8~9피피비)는 분석 대상 시료 중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바나듐은 인슐린 조절에 관련하여 당뇨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지하수의 청정성과 수질 측면의 차별성을 지속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수화학 특성과 기능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주 지하수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 · 연구 자료에 기초한 최적의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고기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장: 제주도의 수문지질학적 특징은 대략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주도는 2만~100만 년 사이에 분출된 젊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얇은 용암누층(Lava Sequence)의 지질구조를 이루며, 연평균 2,061밀리미터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다. 또한,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 없으며, 일평균 45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천 유출이 발생한다. 이런 관계로 제주도는 내륙지역(14.4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44~45퍼센트의 지하수 함양률을 보이며, 지하수는 기저지하수, 준기저지하수, 상위지하수, 기반암지하수 등 4가지 형태로 부존하고 있다. 특히, 지하 화산암층의 평균 공극률이 25퍼센트에 달해 지하수 관정당 일평균 2,400세제곱미터를 취수할 수 있는 높은 지하수 산출률을 자랑하며, 지하수 수질은 대체로 약알칼리성 연수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바나듐 · 마그네슘 · 중탄산 등 특정 성분이 높은 지하수도 부존하고 있다. 지하수위는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을 반영하여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엔 낮은 변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9~10월이 최고수위를, 3~4월에 최저수위를 나타낸다.

2011년 말 기준, 제주도에는 지하수를 포함하여 연간 6억 3,400만 세제곱미터의 수자원이 개발되어 있으나 전체의 84퍼센트를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이용량은 개발량

대비 28.3퍼센트인 49만 3,000세제곱미터/일(1억 8,000만 세제곱미터/년) 수준이다. 수자원별 이용량은 지하수가 연간 1억 5,100만 세제곱미터로 전체 이용량의 84퍼센트를 점하고, 용천수(어승생 수원 포함) 1,700만 세제곱미터/년, 빗물은 800만 세제곱미터/년 등이다. 특히, 2005년 이후 골프장에서의 빗물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 연간 700만 세제곱미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 취수량은 2012년 말 기준 연간 70만 4,000세제곱미터이며, 전체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0.3퍼센트 수준이다.

1991년 12월 (구)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사용자 편의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진행되어 지하수 고갈과 해수침투 발생 등 지하수 문제가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고 제주특별법에 다양한 지하수 관리제도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1일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지하수 관리 3대 원칙(공공관리, 적정관리, 과학적 관리)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관리 강화, 통합 수자원 관리, 고품질 브랜드화, 지하수 관리 선진화의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2022년까지 약 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1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하수의 개발 · 이용을 법적 · 제도적 장치로 통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즉, 지하수 관리는 '보전과 이용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법적 관리와 함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물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물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으나, 1992년 더블린 물환경회의에서 '물은 경제재(Economic Good)'라는 가치가 부여되었고, 뒤이어 1997년부터는 '물은 공공재이면서 경제재(Water as a Social and Economic Good)'라고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명의 근원이며, 인류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 양은 유한하고 또한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공공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물은 담는 그릇의 모양이나 다루는 방법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물이 지닌 경제적 가치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제주도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연간 6억 4,500만세제곱미터)을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경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3,000억~161조 원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속 이용 가능량의 1퍼센트 지하수(645만 세제곱미터/년)의 경제적 가치는 58억~1조 6,000억 원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 지하수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20여 년간 지하수 관리제도의 개선은 물론 감시체계 구축 및 지하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온 결과,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의 정착과 함께 제주 지하수의 제반 특성도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제주 지하수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지하수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지속 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하수의 전략적 활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하수로 지하수를 관리한다'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제주 지하수의 차별적 특성 지속 발굴 및 홍보 강화, 연구개발 등을 통한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지난 20여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주지하수의 보전관리의 제도적 정착 및 학술적 규명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정리
문수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과장

Going global
Interaction
Yi Seong-Woo

제 5 장

문화교류와 글로벌 협력

대학포럼을 통한 동아시아 대학 간 교류협력

제주대학교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대학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대학 국제교류 실무자들과 자국 대학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학 간 학술교류 협정 체결 및 학생 교수 교류 협력 방안, 참가대학 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사회

강영훈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본부장

발표 및 토론

겐지마 후쿠미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유학생센터 교수
에미 탐바 호주선샤인코스트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리드 웨이 데이슨브로크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교무처 부처장
장천 중국 무한대학교 국제교류부 아시아 유럽 담당자
강영훈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본부장

'동아시아 지역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대학교 간 교류협력 방안

- 제주대학교, 하와이대학교, 우한대학교, 호주선샤인코스트대학교, 나가사키대학교의 국제교류현황 및 국제교류처의 발전과 역할, 각 대학교의 국제교류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
- 국제무역으로 영어에 대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내에 영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 동아시아 내에 영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학문교류가 활발함.
- 각 국가와 대학교들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
- '국제화'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한 노력 : 대학캠퍼스 내 국제화 정책, 대학들과 연계를 통한 국제화 목표 달성
- 학술 연구와 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화 실현
- 국제교류사무국이 학생들의 국제화 교육에 대한 책임
- 타 학교 국제교류사무국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 각 학교별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참여 장려와 장학금 수여

질문 1)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자신의 학교로 유치하려는 경쟁이다. 이 경쟁구조 대신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가?

답변 1) 리드 웨이 데이슨브로크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교무처 부처장 경쟁과 협력의 중간 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하와이대학교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의 5퍼센트의 변호사 육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한다. 우리 학

교는 경쟁구조로 가는 것보다 학문에 도움을 주길 원한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명성과 이름을 키우는 것으로 현재 몽골에 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질문 2) 강영훈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본부장 하와이대학교는 학교 내에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달라.

답변 2) 리드 웨이 데이슨브로크 교무처 부처장 복수학위(dual degree)를 중국 상하이톤지대학교와 하와이대학교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3+2제도로 하와이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나머지 박사과정은 중국에서 받는 것이다. 브루나이는 부자나라로 유명하다. 브루나이대학교는 국제교류로 유명하다. 이 대학교는 무조건 국제교류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국제교류는 꼭 필요하다.

질문 3) 강영훈 본부장 나가사키대학교의 경우는 어떤가?

답변 3) 겐지마 후쿠미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유학생센터 교수 영어로 하는 강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일본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이슈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학위를 고려하기도 한다.

질문 4) 강영훈 본부장 에미 탐바 처장은 제안할 것이 있나?

답변 4) 에미 탐바 호주 선샤인코스트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아시아 국가와 호주, 미국 간의 국제교류에는 차이점이 있다. 서구국가의 경우, 교환학생으로 보내기보다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는 편이다. 제주대학교에서 금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 학생들은 서구 대학으로 가고 싶어한다. 각 대학에서 제정 측면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복수 학위 같은 경우도 이중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이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본다.

질문 5) 무한대학교가 중국 내 10위 안에 드는 수준 높은 대학인 것을 듣고 놀랐다.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 학교인가?

답변 5) 장천 중국 무한대학교 국제교류부 아시아유럽담당자 우리 학교는 중국에서 상위 10위 안에 항상 들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가 가장 유명한데, 무한대학교가 그 차이를 점점 좁히고 있다. 인문학이 가장 강점인 학교이며, 자연과학 쪽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GPS 등 여러 기술 관련 학과가 유명하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학생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벗어나 국제교류와 공공의 목적을 계획하고, 정책과 함께 생산하여 동의한 활동을 경영하고 전달함.
- 해외 교류 학생들의 증진을 위해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향상시키려 노력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함.

정리
최은영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의 평화와 대학 교육

제주대학교

작금의 동아시아는 지역의 안정과 통합을 향한 국가 간 협력보다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뿌리로 하는 해양영토분쟁, 자국 중심의 역사관 등으로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 오늘날처럼 첨예한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한 동아시아가 평화 속에 공동 번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래를 책임질 젊은 대학생들에게 평화의 가치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교육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대학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대학 교수 및 동아시아 전문가가 참여하여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역사적 화해를 위한 평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기조연설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사회
고성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장

발표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동경대학교 교수
방수옥 중국 복단대학교 교수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장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총장은 현 동아시아 상황은 안정과 불안정이 공존하는 불확실성 아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정치 · 안보 협력의 약화라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을 언급했다. 그리고 해양 영토 분쟁과 자국 중심적 역사관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 · 해결할 것인지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패러독스'가 미래에도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동아시아가 협력과 상생과 공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학 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평화교육은 1995년 유네스코를 통해서 전 지구적 합의가 이루어진 교육의 대원칙 중의 하나라는 점도 강조했다.

허향진 총장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대학이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문화' 개념은 1989년 7월 1일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야무수크로(Yamoussoukro)에서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등장했다. 여기서 '평화의 문화'는 삶의 양식이자 가치관, 행위양식, 연대의 원칙으로 제창되었고, 이 회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영구적으로 평화와 인권의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아울러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학의 평화교육을 위해 내용적으로는 자국 중심주의 역사교육이나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자극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와 인류 보편의 공영을 위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대학의 독자적 역량이나 학자들 간의 개별적 교류협력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학과 학자들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연구와 교육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평화교육을 위해 본 세션에 참석한 국내외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지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공헌하는 연구와 교육의 아름다운 모델을 찾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다다시 교수는 학문적 성과의 국제적 확산의 필요성, 국경을 넘나드는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등으로 한국 · 중국 · 일본 대학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 간 교류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존재 구속성이 있는 분야에 관해 한 편의 주장과 논리만 옳다고 강변하는 배타적 절대주의나 각자 나름의 가치관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상대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을 배격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화와 교류가 더욱 필요하며, 특히 동아시아 역사인식에 관한 서로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한국 · 중국 · 일본 3국은 여러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2국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일관계에서 한국의 중개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영토문제나 역사문제로 인한 2국 관계의 대립이 다국 간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2국 관계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국 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3국 관계를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다시 교수는 한 · 중 · 일 3국이 자연과학과 같은 존재 구속성이 희박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역사학이나 정치학과 같이 존재 구속성이

강한 분야의 공동연구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공통된 역사를 자기 나름으로 해석해버리는 태도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원칙을 설정한 토대 위에서 역사 공동연구가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미야 다다시 교수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교류의 심화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임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대학교의 역할을 제안했다. 즉 대학교육은 자국 나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왜곡된 시각에 집착하면 안 되며, 폐쇄적이고 일국 중심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교육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수옥 푸단대학교 교수: 방수옥 교수는 우선 중미관계의 상황과 발전 추세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녕과 평화에 큰 의미를 가지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은 역내 안보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방수옥 교수는 분리주의의 만연, 영토 · 변경 및 해역분쟁, 무기확산과 군비확장, 테러리즘의 위협 등이 오늘날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한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이 상호 관련된 동아시아 영토분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 확산과 군비경쟁, 그리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방수옥 교수는 세계화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세계역사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대학과 세계정치가 동질화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가치관이 타국의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대학 간 국제교류는 외국 대학과 교육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로 한국 · 중국 · 일본 3국 간 대학생 교류활동, 대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대학생 현지답사, 유학생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평화발전을 위해 (1) 화이부동(和而不同), 다원일체(多元一體) 협력모형, (2) 상호 교차적 '방사형' 협력체제, (3)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한 지속적 발전 등을 제안했다.

대학교육은 자국 나름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왜곡된 시각에 집착하면 안 되며, 폐쇄적이고 일국 중심적 시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교육의 교류를 촉진해야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 김남국 교수는 유럽의 경험에 기초한 평화구축체제로서의 지역통합을 기본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유럽통합의 세 가지 요소로 아이디어, 국가이익, 국제환경을 제시했다. 아이디어가 항상 먼저 제시되고, 이어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경쟁하며, 마지막으로 국제환경이 그 경쟁의 맥락을 조건 짓는다고 보았다.

김남국 교수는 동아시아의 경우, 통합에 대한 아이디어의 추상성이나 비대칭적 국가이익, 지역국가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여전히 통합의 목적이나 방법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환경 면에서도 중 · 일 간 치열한 경쟁 속에 미국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내 중국의 헤게모니를 통제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통합에 호의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럽통합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주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했다. 첫째, 기능주의적 접근은 정치적 공동체의 '시민'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소비자'를 양산해 왔다. 둘째, 통합이 항상 본질적인 선은 아니며, 합의가 결여된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은 단지 통합을 위한 통합으로 변질될 것이며, 그러한 눈먼 공동체는 상황이 변화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셋째, 무엇을 위해, 누구에 의해, 어떤 방법을 통해 통합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통합에서 경제적 이익은 정체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는 유럽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 문제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는 국가 간 권력의 비대칭성이 크고, 통합의 최종 목표에 대한 동의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비대칭적인 국가중심체제를 넘어서는 수단으로서 탈근대적인 연대(Postmodern solidarity)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시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교수는 지역통합은 결국 배타적인 민족주의 없이 민주적 개인으로서 애국심(patriotism)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합하여 평화를 위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대학교육은 이 과정에 기여해야

지역통합은 결국 배타적인 민족주의 없이 민주적 개인으로서 애국심(patriotism)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합하여 평화를 위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대학교육은 이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방향은 '국가들의 아시아'를 넘어 '시민들의 아시아'를 향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장: 피터 벡 지부장은 대학의 평화교육에서 간디와 마틴 루터 킹 같은 훌륭한 평화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함석헌 선생처럼 한국의 훌륭한 평화운동가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학의 평화교육 역할과 더불어, 피스보트(Peace Boat)와 같은 일본 NGO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터 벡 지부장은 한국 · 중국 · 일본 3국 간 민족주의로 인해 역사와 영토분쟁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중국의 민족주의가 크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역사인식이나 영토분쟁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미국에 남아 있는 남북전쟁의 잔재에 대해서 언급했다. 150년 전에 끝난 전쟁임에도 아직도 침략논쟁이 남아 있고, 심지어 남군과 북군 국기게양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갈등의 핵심은 완전 해결이 아니라 해소이며,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터 벡 지부장은 동아시아 갈등 해소 방안으로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과 사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핵심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됨.
- 하나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거시적 방향'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 · 중국 · 일본 3국 간 역사 및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분리주의, 영토 · 변경 및 해역 분쟁, 무기확산과 군비확장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호교차적 협력체제와 개방적 지역주의가 필요함.
  - 동아시아는 국가 간 권력의 비대칭성이 크고 동아시아 통합의 최종 목표에 대한 동의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국가 중심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탈근대적인 연대(Postmodern solidarity)가 필요하고, 또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시민을 만들어내야 함.
  - 그동안 한국 · 중국 · 일본 3국 간 관계가 안정화되는 데 한국의 중개 역할이

중요했으며, 향후 양국 간 관계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국 간 관계의 구축에 한국의 지속적인 중개역할이 필요함.

-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서기 위한 대학의 평화교육이 필요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 '평화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제시되었음.
  - 동아시아 대학 간 연구교류의 방향은 자연과학과 같이 존재 구속성이 희박한 학문분야의 연구교류를 확대 · 심화시키는 것임. 반면 역사학이나 정치학 같은 존재 구속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의 원칙을 분명히 설정한 토대 위에서 상호 이해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임.
  - 대학교육은 배타적인 민족주의 없이 민주적 개인으로서 애국심(patriotism)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합하여 평화를 위한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기여해야 하며, 그 방향은 '국가들의 아시아'를 넘어 '시민들의 아시아'를 향하는 길임.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젊은 대학생들이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
  - 특히 대학의 평화교육은 각국에서 발현되는 대결적 역사인식과 과도한 민족주의를 약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동아시아 대학 간 교육과 연구의 교류가 보다 더 확대 · 심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아시아 캠퍼스 프로그램이나 평화를 주제로 한 공동연구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제주포럼이 모태가 되어 동아시아 대학 간 평화교육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정 체결이나 프로그램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정리
고경민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제주한라대학교

아시아 국가 중 특히 한국 · 중국 · 일본은 오랜 문화교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통의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한편 동시에 각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전통적 · 현대적 예술 분야에서 이들 국가 간 문화교류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구촌시대의 환경에서 어떻게 국가 간 문화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사회
한희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발표
박양우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
권오석 KBS 글로벌전략센터 한류 추진단 국장
류보 중국 난카이대학교 교수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공보문화원장)
이지윤 SUUM P&A 대표

박양우 중앙대학교 교수: 박양우 교수는 지금은 문화관광시대라고 할 만큼 과거의 산업구조의 틀에서 벗어난 창조산업이 대세이며 정보(IT)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콘텐츠를 필요로 함에 따라 문화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설정했으며, 이는 모두 문화가 견인해야 할 국정기조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는 문화정부이며, 국제문화교류는 문화융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보다는 문화산업 분야의 교류 증가와 민간차원의 문화교류가 꾸준히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 중국 · 일본 3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편협한 민족주의로 인한 갈등을 아직 갖고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며, 상호주의, 쌍방향 교류, 교류 지역의 다변화, 문화콘텐츠 교류를 기본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다 내실 있는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제도적 지원정책 공조와 저작권 문제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며, 문화예술인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앞으로 한국 · 중국 · 일본 문화장관 회의의 정례화와 의제의 실행으로 새로운 교류협력 아이템의 발굴과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석 KBS 글로벌전략센터 한류추진단 국장: 권오석 국장은 방송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1997년부터 드라마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류가 부가가치 상승효과로 이어졌으며, 영상콘텐츠 중심에서 대중음악까지 확대되면서 콘텐츠 유통과 소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류의 주요 성공요인은 방송사의 제작역량 강화에 있으며, K팝 스타와 드라마와의 시너지 효과, 수출 장르의 다양화, 글로벌 맞춤 전략, 해외 실시간 방송,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의 양방향 문화교류를 위해서 일방통행식 문화수출, 지나친 상업성과 편중된 시장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해소

류보 중국 난카이대학교 교수: 류보 교수는 한 · 중 예술문화의 교류는 고대 한반도와 중국과의 왕래에서 시작되어 진나라 문화의 언어문자, 민속, 건축, 회화 등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대 한국은 외래문화를 흡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문명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해왔으며, 근대에 이르러 중국문화와 더불어 서양의 문명도 흡수했다고 주장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성향의 불교 예술의 양분을 흡수했고, 특색 있는 불교 미술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예술 대가인 백남준은 동양문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동시에

서양 예술언어와 표현 형식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기에, 그의 예술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국가의 예술가에게 영감과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TV 부처'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기교가 깃들어 있고, 전 세계 대중들에게 동양 지혜의 결정체인 선종사상이 갖춘 심오함과 풍부함 하나하나를 전하며 근현대 한국문화와 사회 발전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 한국문화의 우수성은 드라마, 대중가요, 전자제품 등을 통해 세계로 전파되고 있지만, 한 · 중 양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전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의 전제조건하에 양국 간 우수한 문화전통에 대한 계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 공보문화원장: 미치가미 원장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다른 문화의 이해는 동아시아에서 진행하기 쉬운 면도 있으나 '겉모습이 닮았으니까', '같은 아시아인이니까'라고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밝혔다. 나라가 다르고 가치관이나 습관이 다르다는 벽을 쉽게 인식하여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이 통하지 않는 좌절감(Frustration, 욕구불만)을 가중시키는 예가 적지 않으며 '다르다'라는 당연한 인식에서 시작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본문화와 공공외교에 상호이해 향상을 위해서는 선입견과 오해에 근거한 좁은 시야로 정의감에 의한 비판은 가장 위험하며, 국제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양국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겸허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 중 양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전통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의 전제조건하에 양국 간 우수한 문화전통에 대한 계승이 필요

이지윤 SUUM P&A 대표: 이지윤 대표는 글로벌 현대미술 교류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이야기하고 한국 현대미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현대미술의 국제교류란 학술교류, 전시교류, 국제적 문화공유이며, 현재 한국의 현대미술 발전은 199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현대미술이 알려지면서 창조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조적인 문화교류의 발전을 위해 오늘날에는 그간의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의 문화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아시아 주도의 문화 프로젝트와 페스티벌 등 새로운 문화 플랫폼 구축과 국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내실 있는 문화교류를 위해서는 국가 간 제도적 지원정책 공조 및 저작권 문제의 공동대처가 필요함.
- 문화예술인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장관회의의 정례화와 의제의 실행, 나아가 새로운 교류협력 아이템의 발굴과 협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문화 플랫폼 구축과 국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교육의 중요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정리
이준호 제주한라대학교 기획처

제 6 장

국제협력을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

21세기: '아시아 & 여성의 시대'
양성평등을 통한 경제적 잠재력 달성하기

제주평화연구원/전문직여성세계연맹

21세기는 그 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세기'라 불리는 동시에, 여성의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세기'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OECD, 세계경제포럼과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보고서가 지적하듯 아시아는 낮은 양성평등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여성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서 커다란 기회이자 과제이다. 이 세션에서는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전문직여성) 세계연맹의 회장과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의 대담을 통하여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잠재력 발현에 대해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진행
임종령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주제발표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 세계연맹 회장

대담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 세계연맹 회장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세계연맹 회장: 21세기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은 여성의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여성 인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잠재력은 더욱 커졌으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들이 여성 이슈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윤리적 면에서가 아니라 이윤 추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더욱 나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을 85퍼센트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지난 80년간 여성 인권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왔다. 아시아 경제에서 소외된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이다.

양성평등을 통한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둘째,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사업으로 (1) '여성 경쟁력 강화 원칙'(WEP: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Equal Payday Campaign), (3) 여성기업인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결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납품에서 일정 부분을 여성기업에 할당하는 등 여성기업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EP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200여 개의 기업이 WEP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1만 개의 기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대담

질문 1)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2014년 BPW세계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제주도를 개최지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1) 프레다 미리클리스 회장 2014년 BPW세계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가 김만덕 같은 뛰어난 여성 CEO를 배출하고, 강인한 여성의 역사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질문 2) 조동성 교수 오늘 발표에서 김만덕을 3번이나 언급했는데, 김만덕에 관해 평가해달라.

답변 2) 프레다 미리클리스 회장 김만덕은 우리 BPW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다. 성공한 여성 CEO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지역 주민과 국가 전체에도 헌신하신 분이셨다.

질문 3) 조동성 교수 미리클리스 회장께서 김만덕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만덕을 통해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비즈니스와 사회적 책임은 함께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양성평등의 문제는 현대화의 과정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미리클리스 회장의 모국인 호주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현대화를 거쳤는가?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

답변 3) 프레다 미리클리스 회장 노르웨이는 쿼터를 정해서 여성의 취업문제를 해결한다. 호주에서는 '주식시장 성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분기별로 재무보고서를 보고하듯이 여성 취업률과 임원의 비율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여성임원이 없으면, 그 이유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 후, 여성의 취업과 여성임원의 비율 확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1) 이명희 표선고등학교 영어교사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교육 분야에 제안해 주실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답 1) 프레다 미리클리스 회장 21세기는 녹색경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학과 수학 분야에 더 많은 여성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의 달성은 단지 구호나 당위성을 통한 주장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강화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호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식시장 성 다양성 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BPW세계대회에서 '김만덕 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여성의 잠재력을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정리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여성의 리더십: 경쟁력과 미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21세기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로 여성의 세기이다. 여성 리더십의 키워드인 공감과 부드러움, 섬세함이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 치밀함, 감수성, 유연성, 관계지향성, 소통 능력이 대안적 리더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특성은 여성성과 여성 정보기술시대에 적합한 리더의 자질이다.
인류의 반이 여성이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여성 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여성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계기로 여성 리더십의 경쟁력과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보는 자리로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는 물론 사회 ·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미가 큰 논의의 장이었다.

사회
김정숙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

주제발표
아이린 산티아고 필리핀 민다나오 여성위원회 명예위원장 · 대표
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토론
김근화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박영혜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박명희 동국대학교 교수 · (사)한국미래소비자포럼 상임공동대표
윤정웅 제민일보 편집국장
이정림 일본 조규훈 현창사업회 회장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권한 강화된 여성의 10가지 특징

아이린 산티아고 필리핀 민다나오 여성위원회 명예위원장 · 대표: 여성은 사회 참여를 넘어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필요로 한다. 힐러리는 국민에게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분야의 개혁을 위해 파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 신화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는 오랫동안 내면화해온 자신의 사회화 과정과 가치관, 원칙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변혁적인 여성 리더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념적 장벽, 기술적 장벽, 정치적 장벽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 37년 동안 풀뿌리에서부터 국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과 거버넌스는 파워임'을 상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즉 누가 파워를 행사하는가, 어떻게 그 파워가 발휘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파워가 발휘되는가이다. 권한 강화된 능력

있는 여성의 10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권한 강화된 여성은 다른 여성들을 고무시킨다. 연못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연못을 더 크게 만들어 많은 여성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2) 권한 강화된 여성은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젊은 여성들에게 멘토링을 해 준다.

(3) 권한 강화된 여성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의 죄책감은 원죄에서 비롯되는데, 여성이 일하러 가면 가정을 무시한다는 죄책감을 가졌다. 그러나 권한 강화된 여성은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스스로 도덕적 나침반을 만들어서 옳은 일을 행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4) 권한 강화된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5) 권한 강화된 여성은 괴로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

(6) 권한 강화된 여성은 다양성을 존중한다.

(7) 권한 강화된 여성은 '총명한 분노'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다. 권한 강화된 여성은 불의와 억압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정치적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분노의식을 가진다.

(8) 권한 강화된 여성은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줄 안다.

(9) 권한 강화된 여성은 파워를 주장한다. 파워를 휘두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난 저런 파워는 싫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파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파워는 역량 발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단 '선한 것'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10) 권한 강화된 여성은 말한다. 더는 기다리지 마라!

가정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국가에서든 변혁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성이 파워를 주장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 즉, 파워는 선한 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리더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변혁적인 여성 리더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념적 장벽, 기술적 장벽, 정치적 장벽을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극복해야

김성은 경희대학교 교수: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며,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는 총 7개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국가 중 하나가 될

만큼 성장했고 부유해졌다. 수출 규모 세계 7위, GDP 세계 15위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소수 기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빠르게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거액의 설비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소수 재벌이 내수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했다. 수출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판매가를 통제하면서 이것이 정경유착의 관행을 낳기도 했다.

'기술무역 수지배율'이 매년 갱신된다. 기술 수출액을 기술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25 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꼴찌이다. 일본과 맞먹는다고 하지만, 일본이 4.6인데 반해 우리는 0.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일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를 일본에 갖다 주는 셈이다.

다행히 중국과의 대외 무역이 활로가 되었지만,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R&D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충분치 않다.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연구원 수가 5배, 연구비가 2배 더 많다. 산업구조에서도 중국은 지난 10년간 2000년의 섬유 산업 중심에서 2012년 컴퓨터나 조선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R&D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R&D 분야에서 "기술은 베껴서 이기라"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특허 괴물에 팔아버린다. 중소기업의 R&D 기술개발이 중소기업에서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리에게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정거래 관행에서는 소위 '단가 후려치기, 가계산서 요구, 골프나 술 접대 요구, 언론과 인터뷰한 업체에 보복하기' 등의 폐단이 신뢰를 깨뜨리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대통령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는 구호는 많았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에서의 '5대 원칙과 3대 보완과제'나 이명박 정부의 '4대 가치, 5대 추진방향, 8대 중점과제, 80개 실천과제'가 있었는데, 서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지 동반성장에 대한 공허한 메아리만이 있었다.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이 40퍼센트를 가지고 간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10년 만에 30배인 30조 규모가 성장했다. 내부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반영된다. 구직자들이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망하나 일자리가 없다. 이를 반영하듯 30년 만에 청년고용률이 최저이고, 초혼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지프 슘페터의 예견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이 자본주의 제도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혁명 등을 통해 사회주의가 등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조직의 관료화, 부의 집중, 기업가 정신의 추락, 상인의 몰락, 이에 대한 지식인의 분노 등은 실제로 슘페터의 사회주의 등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공정거래 관행이 확립되고,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지녔던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하고 새로운 신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다 팔면 캐나다의 6배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경쟁력 순위가 낮은데, 이는 한국의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국가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27위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인 87퍼센트가 우리나라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그리스보다 더 크며 지하경제 투명성은 개발도상국보다 낮다. 대한민국이 '접대왕국, 성 접대, 성폭행, 지하경제'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반 람스타드는 "한국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한국 남성 일부는 '한국 여성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를 비롯한 결정권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한국 여성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1년에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가정이 매우 많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여성 경제 기여도(Global Gender Index)'는 경제활동 참가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16위였다. 우리나라는 최고인 것도 많지만, 꼴찌인 것도 많다. 룸살롱이 아니라 투명한 시스템에서 기회와 꿈이 보장된 신뢰 사회로 가야 한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양육(nurturing)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가지고 있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직위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도덕성이 높을수록 상거래가 투명하고 신뢰사회가 되어 번영할 수 있다. 투명성을 갖춘 신뢰사회가 되어야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신뢰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여성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G2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직위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질수록, 도덕성이 높을수록 상거래가 투명하고 신뢰사회가 되어 번영할 수 있다.

김근화 여성인력자원금고 이사장: 아이린 총장이 "이제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때이다"라고 했는데, 지도력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영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퍼스널 리더십(Personal leadership)이 개발된 사람이 퍼블릭 리더십(public 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다. 어머니 같은 리더십, 퍼스널 리더십이 개발된 사람은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한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지속적인 능력을 갖춘 자만이 퍼스널 리더십이 있는 자이다. 사소한 것에서 너무 욕심을 부린다면 정작 할 일이 없다.

제3의 여성 운동을 이야기하고 싶다. 1 · 2차 여성운동은 페미니즘 중심의 여성운동이었고, 보통의 여성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이 없고, 결혼이 삶의 전부인 여성이 사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 '친가정적 직장, 근로조건의 보장이나 향상, 업종선택' 등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OC 업종 주변적 노동력으로 주로 돕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면서도 여성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최고 지도자까지 여성이 뽑혔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찬사를 보내지만, 변화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페미니즘 중심이 아닌 제3의 여성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김귀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고 여성의 이주노동도 높다. 이 여성들의 연대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정책도 펼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거버넌스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제안한다. 여성에게 주어진 일이 많다. 여성의 노동가치에 대한 실현 등이다. 여성이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 녹색교통, 유기농, 슬로푸드, 자원순환 등 녹색경제를 확산하는 에코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을 여성에게 접목시킨다면, 수평적 권력이 이뤄지고, 수천 수백만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사회 계획(Community planning)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박명희 동국대학교 교수: 아이린 총장과 김성은 교수의 말 중에 여성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장으로서 경험에 따르면, 그 안에 프레임이 있어서 변혁자가 없으면 판을 깨기 힘들다. 리더십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한 사후 변화가 없다. 그만한 공공조직의 리더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윤정웅 제민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고 시급한 사안임에도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관행을 없애고, 강제적으로라도 관리직 여성을 발굴 ·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 공천 할당, 경제 고용 여성할당제 등이 예이다. 국가 경제력이 양과 질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 조직적으로 (아이린 총장의 발표에서처럼) '총명한 분노'를 실천하기를 바란다.

박영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WEP에 대해 말을 말했는데, 조금 더 기업이 쉽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라. 각 기업체가 목표를 정하고 공개하고 그 진척사항을 발표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쉽다. 가장 중요한 것은 CEO 지위이다.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의 서명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이 있는데, 성 격차 지수가 116위라는 언급처럼 임금 격차가 매우 심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 그 캠페인을 전문직여성클럽(BPW)가 하고 있다.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아이린 총장의 발표 중 '죄의식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에도 공감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 탓이라고 하며 상처받기 쉬운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 감정 관리를 잘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동료, 친구 등 지지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이린 산티아고 총장은 베이징세계여성대회 당시 사무총장이었고, 태국 분이 의장이었는데, 여성 장애인들의 베이징세계여성대회참여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 '여성이 여성을 돕는다'는 것을 실천하였다.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관행을 없애고, 강제적으로라도 관리직 여성을 발굴 ·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

이정림 일본 조규훈 현창사업회 회장: 여자 직원들이 직장의 꽃이라고 하며 얼른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전력을 유용하게 이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여성의 저력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기업의 발전이 달려 있다.

질문 1) 이인실 변리사 김성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순위가 상위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최근에 발전하여 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기술은 선진국 대열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답변 1) 김성은 교수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아직까지 열악하다. 연구센터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고 고부가가치 연구가 해외가 아닌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
임애덕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여성의 비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대에 여성들의 파워가 재계 · 정계 등 글로벌 사회 전체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여성 리더십'은 최대 화두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인재 육성과 인력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이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온 여성들의 변화와 성장을 기념하고 이 시대 여성 지도자들의 안목과 혜안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
김정숙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

오프닝 공연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환영사
문숙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발표
김금래 前 여성가족부 장관
랜디 데이비스 UNDP 젠더팀 국장
정미령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

김금래 전 여성가족부 장관: 유년기(1950~1960년)에는 전쟁 후 사회 전반의 경제적 빈곤과 혼란 속에서 남아선호, 남존여비, 법적인 성차별이 무수히 존재했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속에서 생계형 여성 가장 또는 특정 직종에만 일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대 배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민주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부모님의 지지 속에 자존감을 키우며 자랄 수 있었다.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20대에는 산업화로 인해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부각되었고, 직장을 결혼 전 임시직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여성운동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아리에 속한 동기들과 함께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며 사회의 변화를 위해 역사, 경제, 정치를 비롯한 여성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각종 성차별 문제의 철폐를 위해 신문 독자 투고란에

기사를 싣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결혼식 폐백을 할 때 신부의 부모님도 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고, 당시 많은 찬반 논란이 이루어졌다.

30대가 되면서 여성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게 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 발족 이후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매스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40대에는 여성정책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베이징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성의 직접 정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기였고,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급증했다.

50대에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여성비례대표 50퍼센트 할당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여성인재 발굴과 양성 및 고위직 진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성들만의 네트워킹을 위해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부처 장관이 되기까지 여성운동을 위해 힘써 왔다. 선진화된 한국을 위하여 정치, 행정, 경제 등 여성 참여는 더욱 강화, 확대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한 현실 속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

랜디 데이비스 UNDP 젠더팀 국장: UNDP는 UN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빈곤 퇴치, 불평등과 배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인간의 경제적 · 시민적 · 문화적 · 정치적 · 사회적 권리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폭넓은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참여 증대와 불평등 제거는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 교육에서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국가들은 기아, 아동 건강 및 산모 사망률 감소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한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글로벌 성장에 더 많은 공헌을 하였다. 농업자원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보장은 개발도상국 내 농업 산출량을 2.5~4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자료를 공유하고 싶다. 교육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는 상당히 감소되었지만, 특정 국가에서의 발전은 고질적인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각국 의회의 여성 참여율은 20.4퍼센트로 MDGs와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동의한 30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25년 이전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역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회적 보호 없이 저임금으로 불안전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모사망률이 급증하는 추세로, 산모 사망의 40퍼센트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성 불평등으로 여성의 HIV 노출 위험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고, 성폭력 발생빈도는 사회경제적 혼란 상황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양성평등의 진전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법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UNDP가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필수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여성의 법적 권리의 보장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민사 및 형사 법률을 개혁하는 등 많은 국가의 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UNDP는 국내법으로 도입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돕고, 국제법 조약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며, 여성의 권리 영역을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개별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폭력 법안을 개발하고, 성 인지적 법률 및 사법 제도를 구축하고, 사법 영역의 절차에서 여성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돕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 권리 강화이다. 여성에게는 더 다양하고 좋은 직업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여성은 유사 직종의 남성 임금의 평균 72퍼센트 수준을 받는다. 또한 자원, 재산, 신용 및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및 통제에서도 지속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 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은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농업 산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벽들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참여 증대와 불평등 제거는 국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DP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개설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적 세금, 성 인지적 무역, 무보수 노동과 같은 개별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배양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하다. 캄보디아에서는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비율을 정하고, 파키스탄에서는 국회의 여성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의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민간 영역에서도 여성들의 고위직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의회, 시민사회조직 등에서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는 자영업여성연합과 같은 여성조직이 활성화되었고 다수의 빈곤 여성들을 대변한다. 각 사회의 영역에서 여성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다양하고 전방위적이다. 여성 리더십의 비중을 높이는 일과 전반적인 여성의 법적 경제적 처우 개선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참여증대가 가장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각 사회의 영역에서 여성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다양하고 전방위적

정미령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 정미령 명예교수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대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지위와 권익향상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최초의 현대여성교육은 1777년 폴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생겨났으며, 퀴리 부인은 여성교육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된 인물이다.

1895년부터 시작된 노벨상 수상에서 여성 수상자는 43명인데, 총 수상자 중 단 5퍼센트에 해당한다.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노벨상 수상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로 미얀마의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이며 국회의원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 정치, 경제 복합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노벨상을 받은 43명의 여성 중 12명은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 이유를

뇌과학적 영역에서 살펴보자면, 여성은 뇌 활동 특성상 언어능력이 뛰어나 문학상에서 남성보다 우세하다. 현재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여성 정치 지도자로는 호주 총독 쿠엔틴 브라이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태국 수상 잉락 친나왓 등이 있다.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10대부터 '습관성 능력'을 꾸준히 길러 성공적 리더십을 양성해야 한다. 10살에서 16살까지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기간이므로, 이 시기 이후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10대 시절부터 쉬운 집안일부터 전공서적을 탐독하는 등의 어려운 일까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왜냐하면 10대는 인지심리학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확립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성의 발달도 극치에 이르게 된다. 발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간다면, 습관이 능력으로 발전된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성 능력'이라 칭한다. 결국, 청소년 시기에 전문성, 지식, 교양을 동시에 쌓는다면 성공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김금래 전 장관의 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성 리더의 역할에 대한 과정을 살피고, 랜디 데이비스 UNDP 젠더팀 국장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여성의 글로벌 파워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여성 인력의 확대와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시사함. 마지막으로 정미령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는 미래의 청소년들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0대의 습관적 능력이 결국 리더가 되는 중요한 밑거름임을 강조함. 과거, 현재, 미래의 리더 역할과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음. 발표자들 모두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보장될 수 있을 때,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에 동의함.
-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인력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 및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 따라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 및 다양한 분야의 인력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재택근무를 통한 유동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및 육아 휴직을 필수화하여 대체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성인력 고용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
- UNDP 랜디 데이비스 국장의 발표를 통해 UNDP의 다양한 역할 및 통계 자료를 보면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는 국가 발전전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는 UNDP 외 여러 국제기구와의 꾸준한 협력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시행 도구를 개발해야 함. 이 지역 국가들은 아직 여성을 위한 권리와 법적 제한들이 미비하여,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이 있는 것이 현실. UNDP는 해당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개발협력 전문가와 정책 제안자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양성평등 정책과 사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UNDP가 제시하는 여성의 법적 경제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이 전문가들의 직접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제안이 될 것.

- 10대 여자아이들의 '습관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할 수 있음. 독서, 운동, 친구들과의 모임 등이 있겠지만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양과 소양을 쌓는 일로 책 읽기에 몰두하는 경향이 큼. 하지만 책을 읽을 여유도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군집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함. 10대인 여학생들이 많은 사람과 마주하고 서 있을 때의 두려움을 없애거나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자신의 특기를 보여주고, 축제의 장에서 끼를 발산하거나, 여러 대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함. 하지만 시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운동능력이나 특기 등을 기를 기회가 부족해짐. 따라서 공부 외의 자신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적 능력과 동적 능력을 모두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기 아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정리
송혜인 · 김수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1세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량강화

사회과학종합대학원

이 세션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국제적인 조직인 BPW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21세기 여성의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발표의 장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인력자원 개발을 꼽을 정도로 여성인력 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BPW 세계연맹이 UNIFEM (UN여성개발기금)과 UN Global Compact가 개발하여 발표한 WEP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여성권한강화원칙)를 널리 알리고, 21세기에 있어서 여성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 WEP가 추구하는 양성이 평등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구현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며 더 나아가 경제,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현주소 및 미래를 위해 토론하였다.

사회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 BPW 한국연맹 총무이사

발표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 세계연맹 회장
박희자 BPW 한국연맹 회장
허범도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니나 안 커닝햄 그룹 부사장

박희자 BPW 한국연맹 회장: BPW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통해 세계 전 지역에서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과 UN 부속기관에서의 활동과 기여를 통해 여성지위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BPW 한국연맹은 남녀정년차별 철폐,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UN헌장 조인 촉구 및 입법 활동,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BPW의 2011년~2014년 주제는 "Empowered Women Leading Business", 즉, 여성의 리더십 확대와 여성 기업인의 역량 강화로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임원을 더 많이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다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1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2014년 5월 제28차 BPW 세계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의 거상 김만덕이야말로 BPW가 제시하는 주제에 걸맞은 여성으로 이 세계대회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세계 여성들의 활동을 공유할 기회가 될 것이다.

프레다 미리클리스 BPW 세계연맹 회장: 제주의 김만덕 정신, 해녀문화, 설문대 신화에서 여성이 가진 힘의 위대함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바로 여성의 에너지와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증거이다. 21세기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여성이 비즈니스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국가, 글로벌을 포괄하는 여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여성권한 강화원칙(WEPs)', 동등임금 원칙에 따른 '동등임금의 날(equal pay day)'과 여성을 임원으로 지지하는 '여성경제권 강화'를 주목하기 바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TC(International Trace Centre),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UN Global Compact Office), 국제사용자기구(IO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등 여러 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과거 여성에게는 사회적 제약에 따른 여성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런 장벽에 대처해야 한다. 그리하여 남성우월의식을 깨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역공동체와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이룰 때, 비로소 남성과 여성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진보하게 되고 지역공동체와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경제권을 확보하여야 사회에서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1930년에 BPW세계연맹이 설립된 이후의 목표와 비전이 이런 발전을 주도하여 왔다. 2014년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섬 제주에서 BPW 세계대회가 열리게 되어 21세기 여성 리더십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이게 될 것이다.

허범도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제주포럼 2013에서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미래형 여성 정책과제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번영과 발전의 밑거름은 바로 한국 여성이었고, 여성파워야말로 강력한 한국의 힘이 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통해 여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고, 여성의 헌신과 기여로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정책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이 발전하여 왔다. 2013년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여성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본다. 여성의 기대수명과 여성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우월한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즉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직에서 여성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여전히 여성비율이 낮다.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래의 정책과제는 바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때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는 착시현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하는 동시에 유리천장 같은 관행의 형태로 존재하는 숨겨진 차별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대다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남성과 기업이 참여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을 국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니나 안 커닝햄 그룹 부사장: 21세기 인생의 질은 바로 엔터테인먼트에 있다. 나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기획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는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970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 나는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고자 당시 미국 유학을 하였다. 현재 정책결정자인 내 위치가 매우 마음에 든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지위보다 권한 강화를 위해 여성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세상일에 동참하고 세상의 다양성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권한 강화의 방법이다. 전통적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타인에게 존경받는 것, 자신의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경제력을 갖는 일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여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박세리 선수,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등 여성파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섬세함으로 위기에서 남성보다 강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여성의 힘은 김연아 · 박세리 선수 등 한국 여성을 보더라도 그 뛰어난 능력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였지만, 아직도 경제분야에서는 남성임원이 55퍼센트인 반면 여성은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 리더십의 강점은 협력, 포용력, 통합력이 우월하며 조화, 배려, 공감의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전문인이란 자기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고, 공식교육, 엄격한 훈련, 지속적 자기계발과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립하며, 업무 실수율이 극히 낮은

사람을 일컫는다. 대표적 여성 리더십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도덕성과 정직성, 선견지명과 통찰력, 사랑과 관심, 가치관, 의지력, 헌신성, 지적 능력, 승부욕, 책임감이 뛰어난 왕이었다. 성공하는 여성리더를 위한 어드바이스를 하고자 한다. 야망, 열심, 몰입, 전문화, 소통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강인한 인내력과 조직원을 감싸는 리더십을 양손에 쥘 수 있어야 진정한 여성 리더가 된다.

박영혜 BPW한국연맹 전 회장: 제주포럼에서 여성 세션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BPW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여성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모아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길 바란다. 하토야마 총리의 말처럼 평화, 안정, 번영 분야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앞으로 하나의 아시아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해녀연구자로서 2014년 BPW 세계대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것을 축하한다. 해녀의 지식과 기술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해녀의 숫자가 급감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바다 경제활동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해온 해녀야말로 BPW 이념에 부합하는 여성상이다. 2014년 BPW 세계대회에서 제주 해녀를 소개할 기회를 부탁한다. 지속 가능한 여성문화로 해녀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21세기형 여성 리더십 실현을 위한 미래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정책결정권자로서 정치 · 경제 · 공공 분야에서 여성 비율 확대가 필요함.
- 여성 리더십의 강점을 활용한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
- 여성 경제권을 비롯한 여성권한 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기여 확대.
- 여성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을 통한 21세기형 리더십 함양 지지.
-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적극적인 여성의 역할이 필요함.

정리

고영림 BPW 제주클럽 국제관계위원장

May 29-31, 2013
Marsha
BOGOLIN
Beverley von
ZIELONKA

제 7 장

제주의 미래비전

국가 미래전략과 제주의 역할

제주발전연구원

이 세션에서는 세계환경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고찰하고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출범한 정부의 미래전략 방향의 핵심과 가치를 조명하면서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창조적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2013 제주포럼의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면서 새로운 국가비전과 지역의 역할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회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토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제주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관광의 천국이며,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제주 관광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버려야 할 것', '지키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 '새롭게 창출해야 할 것'에 대해 제주 도민과 관이 공유가치를 확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 제고도 중요한 과제이나 이를 위해 우선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며, 온 국민이 제주도 방문을 통해 국민 행복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관광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며, 창조의 가능성과 무한한 변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 관광은 제주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관광이 제주 발전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 도는 현시점에서 늘 앞서 가는 생각과 또 다른 벤치마킹의 대상을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제주 기업은 지역산업을 그 자체로서 관광 자원화하는 노력과 이에 따른 경영과 상품 출하 과정의 변신이 필요하다.

이병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계기로,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결의사항 이행을 위해 제주도에서는 세계환경수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세계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환경수도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세계 유일의 환경수도가 되거나 복수의 환경수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중 한 가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전자의 경우를 선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 근거나 현실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UNESCO의 보전지역 지정과 같은 자연자산 부분,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모델도시 등 현재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것만으로는 세계 유일의 환경수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복수의 세계환경수도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환경수도 추진 전략을 위해서 현재 달성된 것과 단기 · 중기 ·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연계성과 기대효과를 엄밀히 분석하여 세계환경수도의 모습을 우선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Hardware) 관점에서 제주가 가진 자연자산에 대한 우월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산 총량관리 개념을 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환경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곶자왈 지역의 생태 · 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Software) 관점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지속 가능성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와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국가적 어젠다를 융합한 세계환경수도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결해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아직 정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과제나 현재 논의되는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전체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전 정부와 대비되는, 지방이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관점의 전략이 될 것이다.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중앙 → 지방' 방식과 반대로 '지방 → 중앙'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국가 중심의 모델에서 벗어나 '행복한 국민 → 행복한 국가'의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추진체계도 내생적 발전에 적합하게 중앙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지역이 주도하는 내생적 발전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큰 방향에서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이 분권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제주도의 발전에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생적 지역발전은 발전의 동인을 지역 내부에서 찾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 있는 내생적 자원이 많아 자원의 활용 및 개발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지닌 다양한 자원을 발상의 전환과 창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다. 이의 원천은 기존의 과학기술 R&D,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 정보통신(ICT)기술이며, 기술 ·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 경관 선정, 1,000만 관광객 시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했고, 의료와 교육, 마이스(MICE, Meeting · Incentives · Convention · Exhibition) 산업 등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레저, 예술, 농업,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다양한 영역을 창의적으로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의료-관광 결합, 숙박-체험형 문화상품 결합, MICE-교육서비스 등의 융 · 복합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사업 가능성이 높은 융 · 복합 조합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융 · 복합을 시도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과 혁신적인 발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융 · 복합의 속성상 산학연 협력시스템과 지식 커뮤니티 구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연구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00세 시대의 의미는 (1) 인류의 꿈인 '건강장수'가 이루어지는 것, (2)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장과 사회의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 (3) 삶의 패턴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4) 100세 시대를 지탱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란 빈곤, 질병, 출산, 보육, 아동,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과 같은 것이며,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일종의 '사회안보'로서 공공재이다. 따라서 복지는 넓은 의미에서는 '삶의 질'을 의미하고, 다차원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삶의 질의 향상이 지속되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초저출산 · 고령화와 같은 위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술진보에 적응하고 기술혁신을 활용하는 창조적인 복지이어야 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제주관광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주만의 특화된 명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 및 전반적 질적 고도화해야 함. '개별 맞춤형' 여행테마 개발 및 수용태세, 해양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특히 해변/해저 등 해양을 활용한 관광도시 조성(해상공원, 해저관광도시, 크루즈 등)도 필요함.
-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위해 먼저 개념 정립이 필요. 추진 전략 중 현재 달성된 것과 단기 · 중기 · 장기적으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연계성과 기대효과의 분석이 필요함.
-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큰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중앙이 주도하는 '외생적 지역발전정책'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관점의 전략이 될 것임.
- 창조경제와 연계한 제주 지역 산업정책을 위해 제주산업의 화학적 융합(서비스 R&D 확대, 산학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 지원제도의 융 · 복합으로서 새로운 컨트롤타워와 '책임공무원' 제도 강화가 필요함.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위해, 제주도는 건강친화 생태계의 전범(典範)으로서, '건강장수 제주'가 되어야 함. 새 정부의 복지모형을 구현하는 맞춤형 고용복지 자치단체로서의 제주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정리
정지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과거 첨단과학기술단지는 각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어 왔다. 이제 세계는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신산업의 창출이나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혁신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향후, 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단순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초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류 공존을 위한 혁신 요충지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세션은 세계 각국 사이언스파크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회

데이비드 풀러 호주울릉공대학교 과학단지 관리자

발표 및 토론

헬렌 정 홍콩사이언스파크 실무책임자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나이치콰이 남부대만과학단지 투자서비스 담당자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과학단지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논의

헬렌 정 홍콩사이언스파크 실무책임자: 과학단지의 설립 여부는 국가의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 과학단지에 국가적 차원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단지를 국가의 주춧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3요소인 과학발전, 인재개발, 마켓 수요확보가 필요하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은 미래산업은 '혁신산업'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T, BT 등의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산업은 미래의 대한 목표인 동시에 또 다른 미래를 개척하는 관문이다.

제주의 첨단과학단지의 미래비전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한국은 세계 8번째로 큰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의 부재로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이 높은 현실이다. 그에 비해 현재 R&D 분야에 지원되는 국고는 세계 2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제주를 모델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최근 많은 기업이 제주로 이전했으며, 제주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세계 유수의 학자들 및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웰빙(well-being), 웰다잉(well-dying) 등 많은 사람이 바라는 삶의 수준에 부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요소들은 이미 제주 자체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인 홍보하고, 더불어 과학단지의 활성화와 국가의 과학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과학단지의 미래비전과 향후 방향성

데이비드 풀러 호주울릉공대학교 과학단지 관리자: 과학단지의 발전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유치와 성장, 그리고 과학단지 기 입주자들의 유지에 집중하고, 또 과학단지 주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협력하는 에코시스템을 조성하는 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 과학단지 모델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1) 미래 산업의 방향, (2) E-사이언스(E-science)와 이에 대한 연구, (3) 적극적인 협력관계 및 다양한 클러스터 확보, (4) 인재의 유치와 유지, (5) 지역사회와 자원.

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속도에 발맞춰 과학단지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유치하고 유지하여 첨단과학단지의 미래를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첨단지식사업을 기반으로 한 제주의 가능성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지난 3년간 제주의 인구유입률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나타냈고, 또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값비싼 물류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제주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이는 저렴한 물류비와 인건비를 통해 기본적인 기업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이론과 맞지 않는다.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의 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IT와 B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과학단지 사업은 물류비를 따로 들이지 않아 넥슨과 다음 같은 일류 IT 기업이 차례로 제주도로 이전하고 있다. 필요효과(Need effect: 위치요소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필수요소)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정보교류를 통한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를 비교하였을 때, 제주도라는 위치는 기업이 일하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도시의 성장은 네트워크 효과인 요소를 중점으로 도시를 성장시켜야 한다. 이는 국제 허브도시를 이루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이미 제주첨단과학단지의 성장 속도는 국제 허브도시 설립 달성 임계점에 도달하였고,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필수동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정책적인 개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완전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과학단지의 발전모델, 의학설비산업의 예

나이치콰이 남부대만과학단지 투자서비스 담당자: 산업 클러스터의 구성, 잘 정비된 인프라, 삶의 질, 이 3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형성될 때 성공적인 과학단지를 형성할 수 있다. 입주기업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TF팀을 구성하고, 법률비 등 각종 자문비용 지원,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오피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과학단지의 성장정체를 해결하고자 한다.
남부대만과학단지를 예로 보면, 55개의 바이오 테크(Bio-Tech) 기업 중 38개 기업이 의료설비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가 해당 분야에 집중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하우와 상품을 마케팅하고, 또 인재성장을 지원하며 브랜드파워를 키워 단일 기업의 성공이 아닌 단지의 영속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질문 1) 데이비드 풀러 과학단지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1-1) 헬렌 정 홍콩의 과학단지로 예를 들자면, 홍콩 과학단지의 크기는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단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공의 지표는 단지의 크기나 규모에 구애되지 않고, 기업 각각의 네트워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인프라와 기업에 대한 지원, 진정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가능한 점들을 파악해, 기업의 성장 발전과 더불어 과학단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 1-2) 장래웅 경북테크노파크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그룹화하여, 업종별로 분류된 기업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협력 가능한 다른 지역의 과학단지나 관계기관과의 클러스터를 통해 물류나 지식의 교류가 가능토록 지원하며, 특히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 북경의 테크노파크와의 협력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연계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도 단체 비즈니스 미팅(박람회 형태)을 기획하여, 다수의 입주기업을 해외 유수 과학단지의 입주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답변 1-3) 나이치콰이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IASP) 등에 가입하여 인지도 높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간의 교류를 진행코자 한다. 또한, 남부대만과학단지에는 의학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스탠퍼드대학교 등 의학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산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진행한다.

질문 2) 데이비드 폴러 과학단지가 성장하려면 네트워크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향후 10년 후 과학단지 입주기업들의 네트워크는 어떠한 형태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는가?

답변 2-1) 정수연 지난 10년간 제주첨단과학단지의 88개에 이르는 입주기업의 유치와 발전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바, 단지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기업 간 네트워크는 참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지원활동의 참여 독려는 오히려 적은 인력으로 일을 진행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지원이 아닌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잦은 지원요청과 기업의 업무진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 등). 정말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을 찾아 지원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답변 2-2) 데이비드 폴러 한마디 덧붙이자면 IT부터 시작하여 BT,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이어지는 산업의 발전은 이후 어떠한 산업이 미래 과학단지의 성장동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단지 주변에 위치하는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해당 지역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미래의 산업단지가 가야 할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답변 2-3) 유카, 핀란드허브컨셉 CEO 지금까지의 과학단지는 비교적 저렴한 부지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점이 성공적인 과학단지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에 있다는 이유로 기본 인프라와 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양질의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탄탄한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업이 아닌 근로자 우선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첨단 과학단지에 성공적인 기업 유치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과학단지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혜택과 편의성 개선 필요. 재정적으로도 법인세, 소득세 감면, 인재 개발 비용 지원 필요함.
- 과학단지 인근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극적인 개선 및 환경 조성 지원 필요. 국가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 설립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주변 도로환경 등 기본 인프라 확장 및 개선.
- 단지 운영 주체들도 단지 내 기업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고충처리 등 실질적인 지원해야함. 유사 단지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형성(공동연구, 기관 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투자유치 및 기술교류 활성화) 필요.
-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통해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단지 활성화 도모해야 함. 지역사회와 단지 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아이템 발굴해야 함.

정리
박성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주임

21세기 박물관의 비제도권 및 학제적 교육의 중요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박물관은 오랜 기간 동안 비제도권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주도 내에는 현재 건립 중인 항공우주박물관을 비롯하여 80개 이상의 박물관이 존재하지만,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세션에서는 박물관이 갖는 교육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박물관의 21세기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사회
최용복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캐롤 네비스 前 스미소니언재단 정책분석실 이사

토론
앨런 크네즈비치 前 스미소니언 박물관 매니저
이서구 한국천문연구원 실장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
부소영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캐럴 네비스 전 스미소니언재단 정책분석실 이사: 21세기에는 박물관의 학제적 연계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많은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비제도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이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학문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며, 중첩되어 있어서 제주도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접근에도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잘 적용될 수 있다. 한 예로, 과학이 예술과 잘 결합될 수도 있고, 비행기와 조류학 분야가 잘 결합될 수도 있다. 가장 다학제적인 연계가 활발한 분야는 인류학이며, 스미소니언재단을 이러한 문제를 잘 연계하기 위해, 현재 19개의 박물관과 8개의 연구센터에서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천문과 관련한 연구센터가 박물관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다. 요즘 미국에서도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분야가 박물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예: 미국에서의 히스패닉 계열이나 타 인종들이 미국문화 이해와 미국정착을 돕는 사례).

다학제적이란 용어의 뜻은 다른 분야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테드(TED) 강의가 대표적인 예이다.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다학제성을 띄고 있으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와 연결된 분야 등에 대해 눈뜨게 해주는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하다. 백남준은 영상기술과 비주얼아트를 결합한 다학제적인 창조적 한국 인물이며, 스미소니언에도 그의 디지털 지도가 걸려 있다. 이렇게 예술과 인문학, 기술이 결합되어야 한다. 제주항공박물관은 학제 간 교류 및 창조성이 융합되고 이러한 학제적인 교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연간 3,000만 명 직접 방문, 인터넷으로는 연간 2억 명이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 스미소니언 박물관 방문객들은 박물관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기관으로 이해하고 방문하고 있으며, 요즘은 1박 2일 동안 박물관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박물관에 교육을 위해 데려오는 것에도 많은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은 매우 활동적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요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박물관을 오는 다양한 목적(역사성, 정보성, 교육성, 흥미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창조적 경제 등 창조 분야는 항상 각 분야가 중첩된 경계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처음은 경계지점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시작점이다. 제주의 박물관들은 '생각하는 정원, 돌 박물관' 등 새로운 분야에 창조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중요하다

박물관은 본질적으로 다학제성을 띄고 있으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와 연결된 분야 등에 대해 눈뜨게 해주는 교육적인 기능이 중요

이서구 한국천문연구원 실장: 예전에는 과학관과 박물관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박물관에 대한 개념은 과거의 개념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융합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박물관과 과학관에서 연령별로 찾고자 하는 가치가 다름도 제주항공박물관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천문과학관은 대전 시민천문대가 처음이었는데, 저녁의 천문탐구

이외에도 재미 요소를 위해 주말에 진행하는 음악회가 10년째, 500회까지 천체투영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료이긴 하지만 오후 2시면 이미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이며, 운영은 아마추어 동호회가 연주한다. 요즘 관람객은 천문관에서도 음악과 과학과 우주가 섞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

과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감과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며,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도에 이미 80여 개, 비공식적으로 100여 개의 박물관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 박물관 경영의 어려움(운영과 관리)에 대한 답을 학제 간 연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의 경험에서 답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학제 간 연계 시 개별 학문 간 충돌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둘째, 국내 학제적 연구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점, 특히 한국 박물관이 IT 분야에 편중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학제 간 연구는 새로운 분야가 대부분인데, 도전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까? 넷째, 제주도 내 박물관 경영의 어려움에 창조관광이라는 요소를 통해 극복하려면 어떠한 사례들이 적당할까? 이 질문에 관련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다양한 경험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소영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학제적 연계란 주제는 현재 세계적인 박물관의 트렌드이다. 다양한 분야의 통합이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여 재방문객들을 창출하게 된다.

미국 스미소니언의 경우 박물관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에게 콘서트를 열 정도이며, 이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할 정도로 박물관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 또한 워싱턴 정재계를 대상으로, 연중 박물관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업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정도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에 다양한 영역을 결합한 재미 요소와 이벤트 요소는 현대의 박물관에는 필수 요소이니, 제주항공박물관에도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과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감과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며,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이 필요

앨런 크네즈비치 전 스미소니언박물관 이사: 박물관은 방문객들을 위한 자원이 되어야 한다. 자원이라 함은 방문객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생물학, 국가, 예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은 진정성 있는 사실적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학제적인 전시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요소에 흥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새롭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현대에서는 기존의 편방향 정보전달보다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다.

박물관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 등에게 풍부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섬유박람회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야까지 영역이 확장됨을 볼 수 있었고, 우주먼지를 연구하여 이를 미디어 예술로 작업하여 크게 인기를 얻은 전시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특정 분야가 학문적 전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미생물학자는 질병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종이접기 분야를 적용하여 질병의 분자구조를 알게 되어 생리학적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도 있다.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과 복원 ·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리학, 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될 때, 감동을 전할 수도 있으며(예: CSI과학수사대),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박물관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 등에게 풍부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최용복 제주대학교 교수: 캐럴 네비스 박사가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제를 잘 제시해주었다. 앨런 크네즈비치 이사와 이서구 실장은 박물관 관리 · 운영의 효율성과 재미의 조화를 강조해주었으며, 부소영 교수는 박물관을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벤트적 요소에 대한 실제 사례를 잘 지적해주었다.

결국 다양한 영역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적 · 창조적 영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흥미와 재미 요소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논지에 모두 동감하는 것 같다.

질문 1) 김대성 제주 YMCA 앨런 크네즈비치 이사에게 질문한다. 지금 토론하는 것이 너무 유럽적인 접근일 수도 있으나, 학제적 교류 등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이 서구적인 접근이 아닌 제주다운, 본원적 기능을 먼저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답변 1) 앨런 크네즈비치 이사 동의한다. 항공우주박물관의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등 한국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장 큰 원칙은 박물관 계획/관리/운영에 대한 올바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물관이 추구하는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더불어 해당 지역 및 방문객, 직원들과도 항상 교류해야 한다.

새로운 박물관 운영 프로그램이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교류하고 연계하여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 리더십을 갖추고 방문객들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

답변 2) 캐럴 네비스 박사 박물관 개관 이전에 많은 수요자 분석과 개관 후 수많은 이벤트와 행사 등을 완료한 후에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 분석이 뒤따라야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박물관은 하나의 단순한 방문 목적지가 아닌 여러 분야가 결합한 교육적 공간이며, 다양한 학제적 창조성의 영역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하게 학제 간 연계를 시도하고, 이를 박물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끼는 창조적인 분야를 창출해야 함.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며, 이에 대한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정리
박재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부장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보,통신 등의 발전으로 지구촌 1일 생활권이 도래하고, 종전의 국가 간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상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외국인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비자 요건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 세션에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정책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사회자

마샤 보골린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기조연설

한효근 IOM 이민정책 연구원 부원장

발표

스티븐 매키니 서울글로벌센터장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비벌리 폰 질론카 브랭섬홀아시아 미들 · 시니어스쿨 교장
헤롤드 데일 제주도교육청 EPIK 원어민 교사
딘 브라운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마샤 보골린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제주는 향후 발전 가능성과 잠재성이 많은 섬으로 2005년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고 2020년 세계 환경수도로 지정되고자 추진 중에 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완성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안팎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발표자들은 외국인 관련 정책들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현재 우리의 현황, 앞으로의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한효근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범정부 차원으로 지난 2008년 수립되어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라는 비전 아래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국경관리, 외국인 인권옹호라는 4대 추진 목표로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단순기능인력

편중 심화', '결혼이민자 편중 및 시혜적 정책', '외국인 관리미흡', '이민자 출신국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추진상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계적으로 치열한 인재유치 경쟁과 관광객 유치 경쟁의 가속화되고 유럽국가들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에 따라 정부의 이민정책 관련 역할이 증대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개방을 통한 국가이익 확대를 열망하는 반면,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병존하면서 국민들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문호개방과 통합정책의 균형을 요구했다. 이에,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비전이 제시되고,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의 핵심가치 아래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 '대한민국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정책목표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2013년 초에 수립되어 이민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티븐 맥케니 서울글로벌센터장: 서울글로벌센터는 약 52만여 명의 서울특별시 거주외국인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청에서 2008년에 설립한 종합적인 외국인 지원센터이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정규 외국인 직원들이 근무하며, 영어, 중국어는 물론 타갈로그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10개국의 다국적 언어지원을 통해 외국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비자 등 출입국 관련 업무에서부터 소비자상담, 운전면허증, 휴대폰서비스 개통과 사용, 은행 업무까지 외국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사업가들이 창업 시 4개국어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벼룩시장, 자원봉사, 글로벌 콘서트 등 서로 다른 문화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및 양로원과 고아원 방문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나눔으로써 사회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비즈니스 창업학교와 한국어 교육 등 무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도 서울글로벌센터 같은 외국인지원 종합센터가 설립되어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생활이 자유로운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되길 바란다.

제주도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정책과는 다르게 추진이 되어야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제주도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정책과는 다르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책을 추진한 지 13년이 되었고,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의 슬로건으로 국제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나 외국인 정책이나 국제화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 방향성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주만의 세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외국인자문위원회가 제주를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안산시에는 외국인 공무원이 근무한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도 계약직으로라도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 사는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들 같은 외국인 전문인력과 오피니언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에 활용하고,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롤드 딘 제주도 교육청 원어민 교사: 외국인으로서 제주에 거주하며 가장 힘든 점은 언어의 장벽이다. 원어민 교사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된 부분이 한국어 수업에 대한 불만이다.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강의시간이 대다수 원어민 교사의 스케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률 문서와 계약 서류들, 즉, 세금, 은행 관련 문서 등이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어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 벌금을 내거나 추방되기도 한다. 버스시간표도 영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연락담당관 역할을 할 누군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원어민 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딘 브라운 외국인자문위원회 위원: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우수한 점과 개선점을 말하고 싶다. 우수한 정책으로는 첫째, 제주는 비자 면제 지역이라는 점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은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KC-TV 제주방송이 제공하는 영어와 중국어 등의 외국어 뉴스는 외국인들에게 정보전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간단한 세법

제주도는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외국인들과의 소통이 필요

코드, 다국어로 표기된 도로 표지판과 최근 도입된 외국인이 직업 계약이 끝난 후 구직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D10 비자(직업을 바꾸는 기간 중에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등을 들 수 있다.

개선을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 싶다. 제주도는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외국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빈국 출신 부인들이 제외된 채 부유한 서구 출신들 위주로 되어 있다. 제주가 진정한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관광객을 위해 버스가 심야까지 운행되어야 하며, 버스노선이 영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도로표지판에 언어별 정확한 번역과 감수를 거친 표기가 필요하다.

비벌리 폰 질론카 브랭섬홀아시아 미들 · 시니어스쿨 교장: 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이주민을 환영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새 이주자들이 제주 정착 초기단계에 겪을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언어적 문제와 본 국과는 다른 문화적 어려움까지 가세되면, 이들은 목적의식의 저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응 과정"과 "문화충격"이 있음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주에 온 이주민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광범위한 관심사를 가진 새 이주자들은 제주 사회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는 공동체에 외국인들을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들의 지역사회로 적응을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의 문화적 적응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새 이주자들을 제주사회에 잘 정착시켜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외국인지원종합센터 설립 필요: 서울글로벌센터처럼 외국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종합센터가 필요함, 외국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안내할 수 있는 중개자도 필요함.
- 제주 도정에 외국인 적극 활용: 계약직으로라도 외국인 공무원 채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외국인 전문인력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정에 활용하고 이들을 활용한 글로벌네트워크 형성해야 할 것.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제공: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이 아닌 외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필요, 원어민 교사 등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수요파악을 통해 다양한 교육시간 편성
- 대중교통 외국어 표기방법 개선: 버스 노선과 스케줄 등 대중교통 시스템에 외국어 병행 제공 필요. 도로표지판을 언어별 원어민 검수를 통해 정확한 번역과 감수를 거친 외국어로 표기할 것.
- 문화충격을 줄이는 프로그램의 필요: 새로운 정착민들이 정부 및 지역 내 주민들과 함께 사회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나눔과 봉사를 통한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적응훈련 프로그램 필요

정리
김미형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 센터

제주헬스케어타운 운영전략과 의료산업의 미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관광에서 의료산업으로'. 국내외에서 의료관광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 세션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글로벌 의료 인프라로 역할을 하게 될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속 가능한 타운 운영과 혁신적인 의료클러스터를 목표로 향후 의료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선진 의료비즈니스 성공사례와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와 운영전략 등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좌장

부원균 JDC 의료사업처장

주제발표

유카 비타넨 핀란드 허브컨셉 CEO

레이몬드 킹 캐나다 식칠드런 병원 본부장

사카모토 슈지 일본 ㈜건강의 숲 전무이사

오은산 JDC 의료사업처 운영전략 담당

레이먼드 킹 캐나다 식칠드런(Sick Children)병원 본부장: 캐나다의 식칠드런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동 전문병원이다. 아동건강 분야의 리더로 지역과 국가와 세계적으로 치료와 연구와 교육의 통합과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캐나다의 여러 대학과 연계하여 인재를 유입하고, 의료와 관련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병원은 약 650여 명의 의사와 5,200명의 의료서비스 인력, 1,100명의 연구개발 스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 시설은 1954년 설립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소이자 세계적으로 유서 깊은 소아연구센터로, 이 병원 또한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동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학술지에 가장 많이 연구결과가 인용되고 있으며, 북미 최대의 바이오메디컬 연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방문하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병원은 1875년에 설립된 이래 연구와 혁신을 거듭해왔으며, 획기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낳았다. 유전자와 분자구조, 세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치료법과 케어에 관련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이러한 부분을 담아 리서치 타워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기존에는 여러 시설에 걸쳐 다양한 부문이 흩어져 있었으나, 다시 하나의 시설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군데로 집약하여 더 많은 협력과 많은 발전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의료진과 전문가들을 유인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식칠드런 R&D연구소는 1919년에 수혈분야를 개척했으며, 1954년에 연구시설을 설립하고 나서 선천성고관절이형성증, 낭포성섬유종, 신생아청색증 등의 아동 질환 치료법을 개발했고, 폐 손상 치료를 위한 고주파발진기가 발명됐으며, 유전자와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전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발견만 하면 의미가 없다. 전파하고 사용해야 한다. 연구 결과물들은 대학과 파트너 기업에 전달되어 새로운 치료법 연구와 실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실용화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병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연구단지, 연구센터가 있어야 한다. 여러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신속히 밝혀내고,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오늘의 아이가 건강하면 미래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도로 숙련된 연구자들을 길러냄으로써 새로운 건강문제에 영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통합된 헬스사이언스 센터를 유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임상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적절한 파트너십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역과 국가와 해외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도 있고, 인프라가 불필요하게 복제되지 않도록 하며 치료법과 치료기술 상용화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성과의 평가도 중요하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일반적인 아동의 치료뿐만 아니라 중증의 아동 질병도

기존에는 여러 시설에 걸쳐 다양한 부문이 흩어져 있었으나, 다시 하나의 시설로 모으는 것이 필요

돌보고 있으므로 치료시간, 치료의 질 등 모든 것을 평가의 잣대로 두고 계속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다.

총체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며, 거기서 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연구시설과 임상치료, 그리고 교육의 삼박자가 잘 연계되면 의학적 발전을 위한 혁신적 치료법과 기술의 증명이 가능하고, 또한 환자를 위한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또한 헬스케어 리더십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이는 첫째, 연구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임상결과의 향상을 위해 발견에서 실제 활용까지의 과정의 속도를 올리는 '연구와 임상과 교육활동의 통합'을 말한다. 둘째, 현재와 미래의 '헬스케어 전문가 · 리더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연구교육 환경조성 및 연구가들과 전임의들을 위한 훈련장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지식전수자가 될 것이다. 셋째, '산업기준과 공공정책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연구의 질에 대한 평판은 기관이 환자에 대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국내외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도 헬스케어센터로서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도 천혜의 자연과 깨끗한 지하수, 농수산물과 같은 훌륭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사카모토 슈지 일본 ㈜건강의 숲 아소팜랜드 전무이사: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 아소에 위치한 아소팜랜드의 경우, 건강과 치유를 테마로 주변의 자연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해왔다. 1997년에 개장하여 20년간 연간 40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건강과 음식의 안전성 등 여러 체험과 시설을 통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증진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소팜랜드의 시설은 식사, 운동, 치유, 숙박, 체험, 쇼핑의 6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테마별 활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소팜랜드에서는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헬스케어 전문가와 함께 시설과 상품을 개발해왔으며, 일본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후생노동성(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 장관과 많은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건강시설이다.

또한 규슈대학교 등 대학 및 전문기관과 제휴 협력하여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해 면역력 증진에 주목하여 음식을 통해 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소와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무균 재배한 버섯을 식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소팜랜드는 특히 건강음식에 특화되어 있으며, 자체 개발한 돔형 특허시설에 직접 재배하여 가공한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다양한 전문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상품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다. 또한 공장 벽을 투명하게 만들어 제품 제조공정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안전성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숙박시설 또한 자체 개발한 돔형 하우스로 조성되어 있는데, 높은 단열성과 내구성 등 장점이 많으며, 가장 큰 특징은 기둥이 없고 원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 공간차원에서 투숙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재배시설 또한 발포폴리스티렌제의 돔형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성과 사업성 모두 확보하면서 식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돔형 하우스와 재배시설은 설치가 간단하고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및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즐기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매우 많아 예약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 이외에도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건강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 즐기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또한 전문가와 함께 자체 개발한 것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도 천혜의 자연과 깨끗한 지하수, 농수산물과 같은 훌륭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건강과 관련한 타운 자체의 특장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과 상생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제주헬스케어타운과도 좋은 관계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한다.

유카 비타넨 핀란드 허브컨셉 CEO: 허브컨셉은 혁신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며,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어떻게 헬스케어 목적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참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헬스케어의 건강 트렌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1) 노년층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 (2) 치료과정과 비용, 의료실수를 피하는 등 효과적인 헬스케어의 추구. (3) 휴대폰 같은 IT기기의 발전과 센서, 모니터 등의 기술 발전, 영상조영 및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신기술의 사용에 따라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할 것 예상. (4) 임상 치료와 질병 치료에서 더 나아가 예방의학과 셀프 건강모니터링 등 자가 및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 증가. (5) 건강함을 문화로 인지하고 운동과 음식이 헬스케어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심리적 건강과 치유가 주목받음. 이것은 환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함. (6) 치료환경으로서도, 헬스케어 환경으로서도 이용객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함.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아우르는 솔루션은 모든 일반 사람들의 종합적인 웰니스를 타깃으로 해야 한다. 의료환경적 매력과 헬스케어 환경으로서의 매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재된 특수관심 고객대상은 확장될 수 있다. 즉 회사/직업에 관련한 건강관리, 의료/헬스케어 투어리즘, 스포츠/코칭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미래의 가치를 높이고 종합관리하는 기능을 제주헬스케어타운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한 준비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회사는 파트너로서의 회사와 이용자로서의 회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헬스케어 분야에 생성되면서 기존에 건강과 관련이 없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한 헬스케어 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서 민간회사와 협력하는 주요활동은 사업부지와 인프라의 개발, 핵심 클러스터의 개발, 매력적인 건강 서비스의 마련 등에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을 고객으로 보고 접근할 수도 있다. 기업 복지와 근로자 건강관리 등 회사는 헬스케어 이용자로서 직원에 대해 스트레스케어와 심리건강, 정기검진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직업병을 해소함으로써 인적 · 물적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 환자와 건강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와 재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제시를 통해 헬스케어 투어리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 테스트와 훈련 프로그램, 코치 양성과 스포츠 조직 조성 등을 통한 트레이닝도 가능할 것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헬스케어, 웰니스, 스포츠, 음식의 4가지 핵심 클러스터 체계로 사업의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진정한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 목적지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제주헬스케어타운은

헬스케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

지역민과 의료관광객이 모두 진정한 헬스케어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강 목적지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헬스케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방문객과 기업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전체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할 수 있다.

오은산 JDC 의료사업처 제주헬스케어타운 운영전략 담당: 제주는 자연이 아름다워 치료를 통한 회복과 치유에 적합한 환경이다. 그렇기에 제주헬스케어타운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의 의료인프라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업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의료인프라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업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생긴 것

의료산업은 의료관광 외에도 많은 콘텐츠가 있다. 인식을 바꾸고 시각을 넓혀 의료관광에서 의료산업을 보아야 한다.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이 결합한 것으로 병원 및 여행사 등 관광 분야의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건강과 관련하여 IT, R&D 등 더 많은 분야의 기업과 연관될 수 있다. 사업 자체의 역량이 확장되는 것이다.

타깃 고객층도 많아진다. '환자'만이 아니라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고객층의 확장은 그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범위도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병원과 휴양시설에서 기업과 첨단과학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과의 협력 범위도 넓어진다. 지역민과 협력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건강식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한 지역 활성화 기능이 발생하는 것이다.

혁신을 통해 그동안 관광의 측면에만 집중해왔던 것보다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용역을 통해 얻은 헬스케어, 웰니스, 스포츠, 음식의 4가지 핵심 클러스터 운영체계를 통해 타운만의 가치와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의 유치와 기업의 유치로 이어지므로, 메디컬 사이언스파크와 같이 R&D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걸맞은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한 운영전략 설계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생태계를 개발함으로써 이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질문 1) 마샤 보골린 국제영성지도력센터 연구원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방향에 대해 제시했는데, 여기 참여한 유기농 농업가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사업에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답변 1) 오은산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지역자원 활용방법을 찾지 못했다. 일본 아소팜랜드로부터 상품이나 프로그램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들과 협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제주헬스케어타운이 하나의 개체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타운 내 시설과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해야 함.
- 연구시설 도입이 튼튼한 헬스케어 시스템 기반구축에 필수요소이므로 타운 내 의료시설이 R&D시설과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하려면, 의료휴양시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 회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그들과 의료연구시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의료'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산업인 만큼 제도적 지원 및 재무적 지원 등 지역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정리
김영아 JDC 의료사업처 대리

아시아 교육의 국제화
새로운 물결과 제주에 대한 시사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경을 넘는 글로벌 교육 서비스의 확산과 고등교육 국제화 흐름 속에 우수 대학들의 해외 분교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외국 유명대학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통한 자국의 우수 인력을 육성하고자 외국의 우수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교육 분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영어교육도시가 초중등 교육기관과 고등 교육기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국제 교육도시로서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외국 유명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교육 국제화의 흐름 변화를 살펴보고 외국 우수 대학 유치 사례 비교를 통해 제주에 대한 시사점, 정책적 과제, 추진전략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및 토론
마테오 레그렌치 베니스대학 국제관계학 학장
호리 요시토 글로비스 경영대학원 총장
총 토우 총 싱가포르 기술 · 디자인 대학교 부총장
이성호 JDC 교육도시처장

이성호 JDC 교육도시처장: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기본 방향은 해외유학 및 연수 수요 흡수를 위한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 조성, 교육과 생활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주거 · 상업 · 교육 등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도시의 자립성과 지속성 확보 등 세 가지이다.

영어교육도시의 교육시설은 세계적인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국제학교, 교육 · 관광 · 예술 등 전문 분야의 유명 대학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대학존, 영어교사 양성 및 공무원 연수 등을 담당하는 영어교육센터 등으로 나뉜다.

현재 영국 명문사립학교인 NLCS Jeju, 공립 KIS Jeju와 캐나다 명문

여자 사립학교 Branksome Hall Asia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명문사립학교인 St. Johnsbury Academy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비전인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중심지, 동북아 교육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초중등과정과 고등교육 과정이 한 도시 내에서 소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초중등교육은 국제학교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을 담당할 해외 명문대학의 유치가 필요하다.

해외 대학 유치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서비스를 영어교육도시에서 제공하게 된다면, 국내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통한 외화유출 억제, 해외 명문대학 진학 니즈가 있는 비영어권국가 유학생 유치,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가능 등 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대학 유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결과, 다양한 형태의 대학 유치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 대학은 해외 명문대학(원) 유치, 국내 및 해외 명문대학과정(단과) 유치, 기업 주도 대학 설립으로 나뉜다.

해외 대학 유치 추진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이 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건물(교사) 등 인프라 부족과 제주도의 지리적 불편함이 해외 명문대학 유치의 제약이 된다. 또한, 영리법인 대학의 설립 불가, 잉여금 타 회계 전출 등 제도적 장벽과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법 제도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한다.

세계 200위 이내 대학(대학원) 내 사회과학 · 교육 · 경영 · 관광 · 호텔 경영 · 공학 등 제주도의 특징 산업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전공 분야를 우선 유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유치대상 모델은 기업주도 대학설립이다. 기업주도 대학설립은 취업연계 및 장학금 지급으로 해당 분야의 최고 인재 확보하고, 기술 및 연구대학 소유하며, 해외인력 수급에 유리하고 해외 유명대학 유치보다 상대적으로 할 재정적 부담이 적어 영어교육도시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다.

요시토 호리 글로비스 경영대학원 총장: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은 199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도쿄 · 오사카 · 나고야 · 센다이 · 후쿠오카 등 5개 학교 합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일본 최대 규모의 경영대학원이다.

2003년까지는 학위 수여가 불가능했지만,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현재는 MBA 학위 수여가 가능해졌다.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은 풀타임 영어 MBA, 파트타임 영어 MBA, 파트타임 일본어 MBA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에서 정규 MBA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30세이고, 외국인의 비율은 92퍼센트이다.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은 닛케이 신문 랭킹을 살펴보면, 동일본에서 학생 선호도 1위, 서일본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

글로비스 경영대학원 사례 이외에도 하버드 MBA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MBA는 하버드대학교라고 생각한다. 연간 3억 5,0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는 하버드 MBA는 타 MBA와 차별화되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재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였을 때,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 대학 유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열정임을 인지해야 한다.

총 토우 총 싱가포르 기술 · 디자인 대학교 부총장: 싱가포르 고등교육 국제화의 성공 비결은 싱가포르의 과감한 실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몇 가지 트렌드를 제공한다. 첫째, 학생과 교육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둘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부르는 온라인 강의에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연구와 경제적인 목표의 연관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 먼저, 교육과 연구에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 산업과 경제적 수요는 필수적이다. 또 일류 연구대학으로의 신뢰성과 평판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싱의 지속성과 교수와 학생의 우수함은 성공의 열쇠이다.

싱가포르 기술 · 디자인 대학은 중국과 미국의 대학 협력에 의해 설립되었다. 분야의 경계가 없는 독특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은 반드시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 MIT와 중국 저장대학교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 대학 유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열정

협력으로 이뤄진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연결성도 제공하게 된다. 아시아, 미국, 유럽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적의 교수진과 MIT, 저장대학교, 해외 유명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다양한 시도를 하며, 고등교육 국제화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개교 2년 차인 싱가포르 기술 · 디자인 대학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좋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나라 대학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싱가포르 기술 · 디자인 대학의 사례는 영어교육도시 외국 대학 유치의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다.

마테오 레그렌치 베니스대학교 국제관계학 학장: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의 국가가 보이는 교육 국제화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걸프협력회의 가입국(GCC)의 경제는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GCC만큼 고소득자가 빨리 늘어나는 곳은 없다. 전체 인구성장률도 2~3퍼센트로 전 세계의 어느 곳보다 높고,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다.

걸프 국제 교육 허브의 세 가지 이상적인 종류가 있다. 카타르 교육도시의 NYU 아부다비처럼 외국 교육기관 전체를 수입하는 것과 지역 현지 영어교육기관 육성하는 것, 카타르 대학교처럼 기존 교육기관의 국제화로 나뉠 수 있다.

외국 교육기관을 전체 수입하는 경우, 학교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학교 교육수준도 높지만 큰 비용이 필요하다. 각 지역 현지 영어교육기관 육성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학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교육기관의 국제화는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지만, 영어 강의에 대한 기존 교수진의 반발이 존재한다.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정답 모델은 없다. 지역별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이탈리아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한다면, 국제화 성공을 위해서는 자본이 상당히 많거나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적용했을 때,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상당히 현실적인 프레임워크를 지니고 있다. 특히, 외국 대학 유치에서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질문 1)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고등교육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1) 총 토우 총 부총장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지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두는 것은 중요하나, 유치기관이 이류나 삼류이어서는 안 된다. 이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의 일부 부분만을 외국 교수진과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제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질문 2) 문정인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프라도 부족하고 제주도 인구 자체도 많지 않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대학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2) 요시토 호리 총장 JDC가 외국 대학을 유치해서 성공시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 대학 유치도 성공적일 것이다.

질문 3) 문정인 교수 JDC는 인큐베이터이다. 인큐베이터가 열정을 지닐 수 있는가?

답변 3) 이성호 교육도시처장 JDC에서 열정이 없다면 영어교육도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현재 열정을 가지고 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질문 4) 문정인 교수 현존하는 국립 제주대학교를 국제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JDC에서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언은?

답변 4) 마테오 레그렌치 학장 조인트 프로그램에다 제주대학교의 국제화를 더한 형태를 추천하고 싶다. 제주대학교의 학과나 단과대학교에 자율권을 주어 국제화를 시작하고, 이를 학교 전체에 퍼트리는 형식을 말한다.

질문 5) 문정인 교수 JDC에 대해 조언해 달라.

답변 5-1) 마테오 레그렌치 학장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파트너십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외국 대학 프로그램 하나부터 작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답변 5-2) 요시토 호리 총장 영어교육도시 외국 대학 부지 공간을 3년 정도 무료로 임대하는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5-3) 총 토우 총 부총장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노려야 할 것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외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진출해야 할 것이고, 제주에 무엇을 기여해야 하는지 목표 설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외국 대학 유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Policy Implications)

- 해외 대학 유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할 것임.
- 공공과 민간 부분을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대학유치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여 대학유치의 명확한 타깃을 찾아야 할 것임.
- 해외 대학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정리
조은주 JDC 교육도시처 대리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인쇄 2013년 8월 30일
발행 2013년 8월 30일

편저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출판부
등록 제 652-2008-00002호(2008.5.31)

주소 697-85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전화 (82-64) 735-6533
팩스 (82-64) 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 편집 서울셀렉션 (82-2) 734-9567

Copyright © 2013 by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ISBN 978-89-93764-07-9 03340

· 이 책의 국내외 일부 필자들의 소속 및 직책은 본 포럼의 개최시점(2013년 5월)과 발행시점 사이의 차이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포럼 개최 당시의 직책과 직위를 기준으로 명기하였다.